

2014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 PAPER

발 | 간 | 사



MESSAGE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격랑의 한 해였습니다.

북한은 연초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동북아는 영토와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첨예화 되고 노골화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를 지키면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 하에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같은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문제의 해결을 모색하였습니다.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개성공단은 국제화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발전적으로 정상화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가 설치됨으로써 우리

당국자가 현지에 상주하며 상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들의 오랜 숙원이던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우여곡절이 있었고 비록 제한된 숫자이지만, 올해 초 이산가족들이 3년 4개월만에 그토록 그리던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는 한편, 정상외교 등 다양한 계기에 우리정부의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에 대한 구상을 공유하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남북협력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5월 마지막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새롭게 제정하여, 통일교육이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게 하고, 청소년들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통일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탈북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다양한 교육지원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1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향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봅니다.

내년이면 분단 7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부는 한반도 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설정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통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토와 제도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이질성을

포용하는 ‘열린 사회’가 되고, 나눔과 배려, 관용과 신뢰의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국민들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란 화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에 침체되었던 통일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사회 전반의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통일 한반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통일준비위원회」도 발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한데 모이고 차곡차곡 쌓일 때, 한반도 통일시대라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2014년 통일백서」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고 통일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 지난 1년간의 정부의 노력을 오롯이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백서가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발간사

제1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제1절 _ 추진 배경 14
- 제2절 _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주요 내용 17
- 제3절 _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성과 26
 - 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 26
 - ②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신뢰 형성 노력 29
 - ③ 국내통일기반 조성 노력 32
 - ④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대북정책 추진 34
- 제4절 _ 「DMZ 세계평화공원」과 남·북·러 3각 협력 38
 - 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38
 - ② 남·북·러 3각 협력 47

제2장 개성공단 사업

- 제1절 _ 개성공단 가동중단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56
 - ① 북한의 일방적인 가동중단과 정부의 대처 56
 - ②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 58
- 제2절 _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추진 61
 - 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61
 - ②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63
- 제3절 _ 개성공단 현황 68
 - ①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 68
 - ② 개성공단 현황 69
 - ③ 개성공단 방문 70
- 제4절 _ 입주기업 지원대책 71
 - ① 기업 실태조사 71
 - ② 금융 지원 72
 - ③ 완제품·원부자재 반입 74
 - ④ 판로 지원 74
 - ⑤ 기타 지원 75

제3장 남북교류협력

- 제1절 _ 남북경제협력 81
 - ① 남북교역 81
 - ② 「5.24 조치」의 이행과 기업애로 최소화 대책 마련 84
 - ③ 금강산 관광 사업 86
 - ④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88

- ⑤ 「그린데탕트」 89

- 제2절 _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90
 - ① 종교 교류 90
 - ② 문화유산 및 예술 교류 91
 - ③ 체육 교류 92
 - ④ 지방자치단체 교류 93
 - ⑤ 질서있는 교류협력 추진 94
- 제3절 _ 남북 출입통행 및 운송 96
 - ① 육로 출입통행 현황 96
 - ② 남북화물열차 운행 98
 - ③ 해상운송 99
 - ④ 항공운송 100

제4장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 제1절 _ 남북 이산가족 문제 106
 - ① 이산가족 현황 106
 - ②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 106
 - ③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 108
 - ④ 우리 측의 독자적 해결 노력 109
- 제2절 _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111
 - ① 국군포로·납북자 현황 111
 - ②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112
 - ③ 전후납북피해자 지원 113
 - ④ 6·25전쟁 중 납북자 문제 114
- 제3절 _ 인도적 지원 122
 - ① 개요 122
 - ②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23
 - ③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123
 - ④ 분배 투명성 강화 124
 - ⑤ 대북 식량차관 상환 촉구 125
- 제4절 _ 북한 인권 126
 - ① 국제사회와의 협력 126
 - ② 민간단체와의 공동 노력 129
 - ③ <북한인권법> 제정 협력 129

제5장 남북대화

- 제1절 _ 정치분야 회담 136
 - ①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136
 - ② 남북당국회담의 무산 139
- 제2절 _ 경제분야 회담 141

①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141
②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48
③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152
제3절 _ 인도분야 회담	158
①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158

제6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1절 _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167
① 사회적응 기본교육 프로그램 개편	167
② 초기 직업교육 및 진로설계	168
③ 아동·청소년 교육	170
④ 초기 건강관리	172
⑤ 제2하나원(「하나원」 분소)의 기초사회적응교육 및 심화·직무교육	174
제2절 _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정착지원	177
① 초기 정착지원	177
② 거주지에서의 보호 및 지원	184
③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 지원	187
④ 미래 통일인재 육성을 위한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189
⑤ 생활안정 지원	191
⑥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력 및 인식 개선	193

제7장 통일교육

제1절 _ 통일교육 추진체계	201
① 기본계획 및 지침체계	201
②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202
제2절 _ 통일교육과정 운영	204
① 통일교육원 초청교육	204
② 사이버교육	208
③ 해외순회교육	209
제3절 _ 학교통일교육 지원	210
① 참여·체험형 통일교육	210
② 찾아가는 학교통일 교육	212
③ 우수사례 발굴·확산	212
④ 학교 통일교육 발전 워크숍	214
⑤ 대학(원)생 대상 통일교육	215
제4절 _ 사회통일교육 지원	216
① 통일교육위원	216
②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지원	217
③ 통일교육협의회	218
④ 통일관 운영 지원	218
⑤ 「통일교육주간」 제정·운영	219

⑥ 해외전문가를 활용한 통일교육	220
제5절 _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222
① 기본교재 발간	222
② 영상자료 제작	223
③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시리즈 발간	224
④ 영문판 통일교육자료 발간	225
⑤ 기타 자료 개발 및 자료마당 운영	226

제8장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제1절 _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234
① 경 과	234
②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특징	236
③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주요내용	237
제2절 _ 법·제도적 기반 구축	240
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 및 남북 통합과정 연구	240
② 통일법제 구축사업	241
③ 당면 법률 정비	245
제3절 _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248
① 국제통일전략대화	249
② 주변국 정책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253
③ 한민족 통일기반 구축	254
④ 한반도 국제포럼 개최	255
⑤ 한독통일자문위원회	258
⑥ 독일통일 총서 발간	260
⑦ 기타 국제협력	261
제4절 _ 국민과의 소통	263
① 국민 참여와 여론 수렴	263
② 쌍방향적 소통 노력 강화	265
제5절 _ 북한 정보 역량 강화	271
① 북한정세지수	271
② 북한 정보 수집·관리	271
③ 북한 종합데이터베이스(DB) 구축	273
④ 북한자료센터 운영	275
제6절 _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277
① 남북협력기금 수입	277
② 남북협력기금 지출	278
부록 I. 남북관계 주요 일정	284
II. 남북관계 주요 통계	310
III.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320
IV.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323

제1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01

제1절 추진 배경

제2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주요 내용

제3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성과

제4절 「DMZ 세계평화공원」과 남·북·러 3각 협력



제1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1970년대 세계적인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남북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600여 차례의 남북회담이 이어졌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크고 작은 남북합의서만도 220여 개에 이른다.

그러나 남북간 많은 합의와 약속들이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지속적인 동력으로 작용하지는 못하였다. 남북관계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여왔다.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조성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당한 타협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조성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것이 과거 남북관계의 모습이었다. 이같은 상황이 반복 되게 된 근본원인은 신뢰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남북 간 신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70년에 가까운 긴 분단의 시대를 거쳐 오며 굳어진 불신의 악순환 구조를 깨뜨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남북 간에 근본적인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신뢰가 있어야 대화든, 교류든, 협력이든 의미가 있고, 신뢰에 기초해야 북한의 변화와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신뢰의 필요성은 단지 남북한 사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는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때에야 비

로소 원활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며, 국론 결집이야말로 한반도 통일시대를 이끌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와 신뢰를 다져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평화와 안정,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가 얽혀 있는 국제적인 문제이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향한 노력은 국제사회와 협력할 때 더욱 더 큰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새로운 통일·대북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지난 한 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조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 출범 전후 북한의 핵실험,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일관된 원칙과 단호한 의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개성공단의 단순 재개를 넘어 발전적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 불용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였으며,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북방 3각 협력’ 등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남북협력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박근혜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하고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향한 본격적인 노력에 착수하였다.

제1절 추진 배경

지난 시기 남북관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왔다.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합의를 이행하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었는가 하면,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남북관계가 또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한편,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도를 계속해 왔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엄중한 현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새로운 대북정책은 먼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온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도발 → 위기 → 타협 → 보상 → 도발’의 악순환이 반복됨으로써, 불안정한 평화와 대결구도가 지속되는 남북관계를 타파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적 기준과 합의를 준수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의 안보 위기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지난 20여 년 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어 왔다. 이제는 남북 간에,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 간에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역대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 대화와 교류 중심의 포용정책과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

를 이끌어 내지 못했으며,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대북정책은 과거 대북정책의 장점을 수용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기도 하다.

남북 간의 불신의 벽이 높기 때문에 신뢰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역으로 남북 간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 오히려 우리 주도로 신뢰에 기반하여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구도】

목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
추진 원칙	균형있는 접근	진화하는 대북정책	국제사회와의 협력
추진 기초	①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정책 추진 ② 합의 이행을 통한 신뢰 쌓기 ③ 북한의 '올바른' 선택 여건 조성 ④ 국민적 신뢰와 국제사회와의 신뢰에 기반		
추진 과제	①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 인도적 문제 지속적 해결 추구 • 대화채널 구축 및 기존 합의정신 실천 • 호혜적 교류·협력 확대·심화 •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추진	
	②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 완비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③ 통일 인프라 강화	• '민족공동체통일방안'발전적 계승 •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 추진 •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추구	
	④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	•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 •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추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문제 해결에 기여 • 북방 3각 협력 추진	

제2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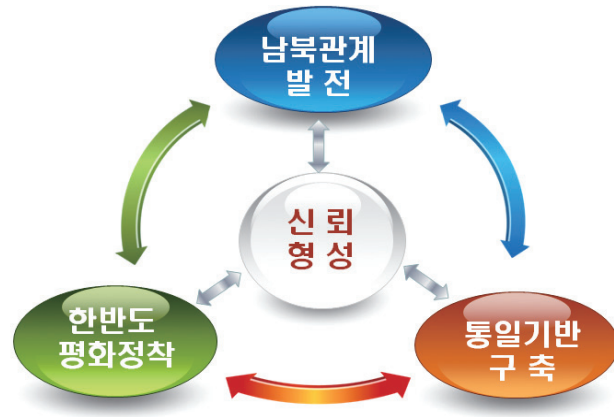
① 개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하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다.

남북 간 신뢰는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축적된다. 북한이 평화를 깨는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하고, 아울러 올바른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 형성만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주지시켜 나가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신뢰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가능케 하는 토대인 동시에,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대북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자 인프라다.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북한이 신뢰 형성의 길로 나오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어 나가하고자 한다.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신뢰 형성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추진 방향

(1) 목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리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은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의미한다. 호혜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의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나아가 경제 공동체와 사회문화 공동체의 건설을 추구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고,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통일기반 구축’은 국내는 물론 대외적인 통일기반 구축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고,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역량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다. 한편, 대외적

으로는 한반도 통일 과정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것임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추진 원칙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함에 있어 균형 있는 접근, 진화하는 대북정책,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균형있는 접근’은 안보와 교류·협력 간, 남북협력과 국제공조 간의 균형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50 대 50’이라는 산술적·수량적인 균형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부합하는 동태적인 균형을 의미한다. 정부는 유연할 때는 더 유연하고, 단호할 때는 더 단호한 대응을 통하여 정책의 중요 요소들을 긴밀히 조율함으로써 대북정책에 있어 ‘균형있는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진화하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남북 간 공동 발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확실성이 큰 남북관계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 경직적인 정책 운용을 지양하고, 유연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능동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한반도 문제가 남북 간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문제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이 동북아 평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의 선순환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3) 추진 기초

정부는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합의의 이행을 통해 신뢰를 쌓고,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국민과 국제사회와의 신뢰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강력한 억지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와 교류협력의 창을 열어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둘째,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고 있다. 남북 간 합의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신뢰를 축적하며, 실천할 수 있는 내용에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다져 나가고 있다.

셋째,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규범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견인하고, 또한 남북 간 신뢰에 기반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넷째, 국민적 신뢰와 국제사회와의 신뢰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투명한 정보 공개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북한의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③ 추진과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과 기초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정을 통해 구현되게 된다. 원칙과 신뢰에 입각하여 새로운 남북관계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상시적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합의 정신을 실천하는 한편, 호혜적 교류협력을 확대·심화하고,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먼저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남북자 문제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둘째, 남북 간에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기존 합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 대화를 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기초한 관행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북대화시 ‘상호 존중과 평화’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되, 구체적 이행은 국민적 합의,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것이다.

셋째, 남북 간의 호혜적 교류협력을 확대·심화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되고 국제적인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록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북 간 학술·종교 교류 등 다방면으로 사회문화 교류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는 한편,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과 같이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경협사업 또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 및 환경 협력 등을 바탕으로 한 「그린 데탕트」를 통하여 남북 환경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2008년 이후 중단된 상태인 금강산 관광 사업은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 등을 토대로 재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넷째, 신뢰 형성과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남북 간 신뢰 형성과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력·교통·통신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고 북한 경제특구 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아울러 남북 간 경제협력이 진전되어감에 따라 서울·평양 간 남북교류협력 사무소를 설치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이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확고한 안보 태세를 완비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노력과 함께, 「DMZ 세계평화공원」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완비해 나가고 있다. 강력한 억지력 확보와 튼튼한 안보 구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 억지력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취하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간 실질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6자회담, 한·미·중 전략대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비핵화 협상 동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적 조치들을 강구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셋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평화협력의 모델이자 세계 평화의 랜드마크(landmark)화를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내에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엔(UN) 및 유관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넷째,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남북 간 상호 체제 인정 및 무력 도발 중단 등 기본적 조치부터 실천하고, 추후 교류협력 활성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분쟁의 평화적 해결,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등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추가적 신뢰 구축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통일 인프라 강화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을 추구하는 한편,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역대 정부가 견지해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통하여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첫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학술 세미나,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 방향을 공론화해 나가고 있다.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정치 통합을 통한 ‘큰 통일’을 지향해 나가면서, 이를 위해 국내외 통일·북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둘째,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최우선 목표로 초당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적 통일 의지와 통일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인프라와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협력하는 등 대내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조 체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4)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을 이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북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와의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 ‘북방 3각 협력’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남북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동북아 차원의 신뢰 구축 과정에서 이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동북아의 공동발전과,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통일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제협력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추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테러, 환경, 인도주의, 재난 대응 등 협력이 용이한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에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남북협력과 동북아의 갈등 구조 완화를 위한 다자간 상호협력 틀을 마련하여 동북아 차원의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역내 질서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셋째, ‘북방 3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이익과 평화 조성을 위해 에너지·물류 등의 분야에서 남·북·러, 남·북·중 ‘3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 과정에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다.

제3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성과

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

정부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취임사, 3월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차근차근 신뢰를 쌓음으로써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 대통령 취임사(2013.2.25)

-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역지를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대통령 제94주년 3·1절 기념사(2013.3.1)

- “저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 “북한도 그 동안의 남북 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신뢰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우선 박근혜정부 출범 전후로 지속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원칙있게 대처하였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이어 3월 5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3월 8일 남북 간 합의 전면 폐기 선언, 3월 30일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선언 등의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을 계속 고조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정부는 도발과 위협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사회 규범 준수와 남북간 합의 존중을 통해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함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월 8일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킴으로써 10년 간 유지되어 온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타협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4월 11일 통일부장관 성명을 통해 한반도에 위기를 더 이상 조성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4월 26 일에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이들을 전원 철수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등 우리의 확고한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부딪히면서 5월 최룡해 특사의 방중(5.22~24) 등을 계기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우리측의 대화 제의에 따라 7월 6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 나오는 한편,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제의를 계기로 8월 23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에도 호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올바른 대화와 교류·협력만이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단순 재가동이 아닌 공단 가동중단 상황의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통한 공단의 국제화 등 발전적인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순수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 관광 등과 연계하려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9.25~30)에 합의하고, 9월 16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등 남북관계 진전 흐름이 이어지는 듯 하였으나 9월 21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나흘 앞두고 이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이후 우리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재개하는 등 대남 비방중상을 계속하는 한편, 반정부 선동을 통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비방중상과 반정부 선동이 시대착오적인 행태임을 강하게 지적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11월 하순 이후 장성택 숙청 등 북한 내부 동향이 급변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12월 13일 북한의 장성택 처형 보도 직후에는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12월 16일에는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였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11월 29일 제3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3통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방문과 후속 실무협의 등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이를 국내외는 물론 북한에게 명확히 알리고 실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남북 간 신뢰가 한층 심화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②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신뢰 형성 노력

(1)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

정부는 남북 간 신뢰 형성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남북대화를 모색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남북이 대화와 약속 이행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계기에 북한과 대화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후 정부는 4월 25일, 5월 14일, 5월 28일 세 차례의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북한에 제의하였다. 아울러 남북 간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남북의 책임 있는 고위 당국자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6월 6일 통일부장관 입장 발표를 통해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북한이 우리측의 남북장관급회담 제의를 수용하면서 이를 위한 실무접촉이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이 접촉을 통해 남북은 6월 12일과 13일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으나 회담 개최 하루 전 북한이 우리측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아 대표단 파견 보류를 통보하면서 회담이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 간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4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 실무회담을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이 호응해 오에 따라 7월 6일 제1차 회담이 개최된 이래 일곱 차례의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을 통해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공동위원회 산하 4개 분과위원회 등 다양한 대화채널이 가동되었으며, 9월 30일에는 개성공

단 남북 공동위원회 사무처가 개소됨으로써 개성공단 운영 및 발전을 위한 남북 당국자 간 상시적인 대화채널이 구축되었다.

한편,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8월 23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9월 21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나흘 앞두고 북한이 이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무산되었다.

(2)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정부는 2013년 통일부 연두 업무보고(3.27)를 통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이르기 전인 4월 8일,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철수시킴으로써 공단 가동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 국제화 구상 역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원칙있게 대처하면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4월 26일 공단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측 인원들을 전원 귀환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5월 28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도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정부는 이처럼 확고한 원칙하에 과거 회귀식의 단순한 재개가 아닌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목표로 대북협의를 추진하였다.

7월 6일 제1차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을 시작으로 일곱 차례의 회담을 통해 8월 14일 남북은 재발방지 및 정상 운영 보장, 신변안전 보장, 국제화 추진, 남북 공동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지속하여 9월 16일부터 개성공단은 재가동에 들어가게 되었고,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산하 4개 분과위원회(통행·통신·통관, 투자보호 및 관리 운영, 국제경쟁력, 출입·체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적인 협의를 추진하였다. 한편, 9월 30일에는 남북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개소하여 우리측 당국자가 현지에 상주하면서 개성공단 운영 및 발전을 위한 남북 간의 상시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11월 29일 제3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에서는 전자출입체계 공사의 12월초 개시,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한 현장방문, 인터넷 연결 등을 위한 통신분야 실무접촉, 군통신 분야 실무접촉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통관 편의 제고 관련 현장 방문이 12월 4일과 7일 이루어졌으며, 12월 6일에는 개성공단의 인터넷 연결을 위한 통신 분야 실무접촉도 진행되었다. 또한 일일 단위 상시통행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무선인식기술(RFID)을 활용한 전자출입체계 공사에 착수하였다.

(3)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지속

정부는 남북관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 추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3월 22일 유진벨 재단의 대북 결핵 약품 지원 승인을 시작으로 국내 18개 민간단체를 통해 영양식·필수의약품·소모품 등을 중심으로 약 68억원 상당의 대북지원을 승인하여 이 중 51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UNICEF 604만 달러(67억원 상

당), WHO 630만 달러(68억원 상당) 등 국제기구를 통해 약 135억원 상당의 대북지원을 추진하여 2013년에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해 총 186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이는 2012년 지원액인 141억원에 비해 약 32%가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대북지원 물자에 대한 분배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과거 중간기관으로 물품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던 수준에서 최종 수혜자의 지원물자 수령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스포츠, 종교 등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순수 사회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신계사 남북합동법회, 영통사 남북합동법회, 평양 장충성당 남북합동미사,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아시안컵역도대회 참가 등 총 5건의 방북을 승인하였다. 특히, 9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아시안컵역도대회는 북한에서 최초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 가 연주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북한 여자팀이 7월에 서울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대회에, 북한 청소년이 8월에 광주에서 열린 유스리더십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2013년에 스포츠, 종교, 교육학술, 문화예술 등 사회문화분야에서 197건의 남북 접촉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2012년의 147건에 비해 34%가 증가한 것이다.

③ 국내통일기반 조성 노력

박근혜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이를 역점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여러 계기에 임기 중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 박근혜 대통령, 민주평통 제 16기 전체회의 대회사(2013.8.28)

• “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새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통일은 분단 70년을 끝내고, 한반도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민족적 과제이고, 국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2013.11.18)

•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은 아직은 어렵고 멀게 보이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단합된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회의적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통일교육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3년 들어 처음으로 5월 마지막 주를 「통일교육주간」을 제정하여 다양한 통일교육·문화행사를 실시하고 각급 일선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협조하는 등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한반도 통일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인식을 위해 통일캠프 등의 다양한 체험·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을 통해 학교통일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자유와 인권을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찾아온 이들의 정착은 인도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한 통합의 시발점이 된다

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착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탈북청소년들을 통일미래의 역군으로 양성하기 위해 탈북청소년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와 지역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적응을 돕는 한편, 장학금 지원 범위 확대, 대안교육시설 및 방과후 공부방 시설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대북정책 추진

(1) 북핵문제 해결 노력 지속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북한의 제3차 핵실험(2013.2.12)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3월 8일 채택된 「유엔(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에 따라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통해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과 ‘국가우주개발법’을 채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4월 2일에는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무력화된 5MWe 흑연감속로 재정비·재가동 조치 실행을 공표하는 등 핵능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위협하였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대통령은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 6월 27일 한·중 정상회담, 11월 13일 한·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 불용 원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고히 하였다.

■ 한·미 정상회담(5.7),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반복되는 도발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함께 한다.”
-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6자회담 참가국들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 한·중 정상회담(6.27), 「한중미래비전 공동성명」

- “한국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양측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한·러 정상회담(11.13), 「한·러 공동성명」

- “양측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UN) 안보리 관련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 “양측은 북한이 관련 유엔(UN) 안보리 결의 및 2005년 9월 19일자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의 공동성명을 포함한 비핵화 분야에서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와 중국측의 대북 설득 노력 등을 계기로 6월 16일 국방위 ‘중대 담화’ 발표를 통해 미·북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는 등 국면 전환을 시도하였다. 특히, 9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10주년 기념 국제 토론회」를 통해서도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주장하며 대화 공세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견지하고 핵개발을 지속하는 등 비핵화에 역행하는 언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핵화 대화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실질적인 진전을 거둘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우리 사회의 역량 강화 못지 않게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보낼 때 통일과정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확보, 북핵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인식 공유 노력 등과 함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도 주력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미·중·러 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각국 정상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5.7)

- “우리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에게 더 나은 그리고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고 공동비전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한편,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에 기초하여, 박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토록 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 한·중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6.27)

-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였고, 시 주석께서는 남북한 양측간 대화와 신뢰에 기반한 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한·러 공동성명(11.13)

-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한간 신뢰 구축을 통하여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고, 러시아연방이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 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국제통일전략대화, 한반도 국제포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재외 동포들의 통일외지를 결집하기 위한 한민족 통일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한독통일자문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경험했던 문제와 대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4절 「DMZ 세계평화공원」과 남·북·러 3각 협력

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1) 비무장지대의 의의

1) 현황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의 산물이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군사분계선을 두고,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 각 2km 이내를 비무장지대로 설정하고, 이를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의 관리하에 두도록 규정하였다.

군사분계선은 약 200m간격으로 세워진 1,292개의 표식물(말뚝)로 표시되어 있으며, 비무장지대는 서쪽 임진강 하구부터 동해의 고성 명호까지 총 길이 248km에 이르고,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에는 철책선이 설치되어 있다.

남북 양측이 모두 남·북방한계선의 철책선을 군사분계선 쪽으로 전진시켰기 때문에 실제 비무장지대의 폭이 4km에 이르지 못하는 지역이 많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750m까지 축소된 곳도 있다.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해 비무장지대는 그 명칭과는 달리 각종 군사 시설, 중화기, 지뢰 등이 밀집하여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 중 하나로 변모하였다.

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각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4. 군사분계선을 하기와 같이 설립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식한다.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식물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량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표식물의 건립을 감독한다.

2) 역사적 의미

정전 이후 비무장지대는 남북의 군사력이 충돌하는 공간인 동시에 남북이 만나 교류하고 화해를 모색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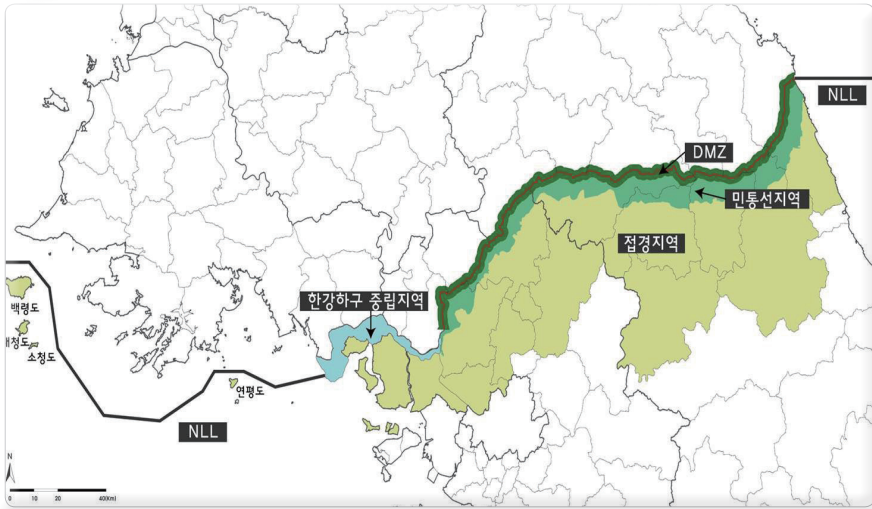
1953년에서 1963년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 비무장지대는 그 본래의 의미가 대체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63년부터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본격적으로 비무장지대 내에 요새와 진지를 구축하였고, 중화기와 전투병력을 투입하면서 점차 비무장지대의 의미가 변질되게 되었다. 이후 1968년 1월 청와대 습격사건 등 6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에서의 북한의 무장침투·도발이 급증함에 따라 비무장지대는 남북간 전투의 장이 되었고, 사실상의 중무장지대로 변하게 되었다.

70년대에 접어들면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등 남북의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충돌 횟수는 줄어들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1971년 8월에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적십자 파견인원간의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판문점에서는 약 300회가 넘는 남북간 회담이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비무장지대는 여전히 남북을 가로지르는 분단의 벽으로 남아 있다.

【한반도 DMZ와 접경지역 공간 구성】



〈 출처 : 2013. 경기개발연구원 〉

3)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노력

그동안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였다. 1971년 유엔군사령부 수석대표 로저스(B.Rogers 소장)이 북한에 비무장지대의 무기 및 지뢰 제거와 비무장지대 민간 개방 등을 제의한 이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1982년 손재식 통일원장관은 ‘민족화합을 위한 20개의 시범 실천사업’을 북한에 제의하였는 바, 이중 7개 사업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사업이었다.

1988년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UN)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내 ‘평

화시 건설’을 제의하였고, 1997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유엔(UN)환경특별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을 제의한 바 있다.

2000년 이후에도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내 ‘청소년 우주체험센터’ 건립을 제안한 바 있으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및 ‘생태공원’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들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2)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1)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제안



2013년 5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발표하였다.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여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계기를 만들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2013년 8월 15일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할 것을 북한에 다시금 제안하였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들어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있던 전쟁의 기억과 도발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시작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2013년 5월 8일 박근혜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사분계선으로 갈라져있는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함께 만나게 되길 희망합니다.”

■ 2013년 7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기념사

• “비무장지대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무기가 사라지고,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 서로 총부리를 겨누었고, 정전협정을 맺은 당사국들이 함께 국제적인 규범과 절차, 그리고 합의에 따라 평화공원을 만든다면 그곳이 바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2013년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68주년 경축사

•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를 북한에 제안합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듦으로써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있던 전쟁의 기억과 도발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추진 배경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 되었고, 남북간 대결과 불신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비무장지대로 인해 남북간의 단절은 물론, 나아가 대륙과 해양의 단절까지 초래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정전 후 60여년이 흐른 지금, 비무장지대를 더 이상 남북간 대결과 불신의 장벽으로 방치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비무장지대를 남북간의 신뢰와 평화, 협력의 통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DMZ 세계평화공원」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참여하게 대치중인 상황에서 비무장지대 내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상호간 정치·군사적 신뢰가 필요하다. 또한 공원의 설계·시공·운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경제·환경·문화 등 다양한 차원의 대화와 협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유엔(UN)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남북간에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가 형성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성 방향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은 비무장지대 내의 일부 공간을 지정하여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남북한 주민과 세계인에게 개방하여 평화적으로 이용하게 하려는 계획이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를 무기가 사라진 ‘평화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둘째, 평화와 환경이 공존하는 ‘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하며, 셋째, 남·북·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뢰의 공간’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첫째, 남-북-유엔(UN) 등 국제기구의 협력을 토대로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둘째, 공원 입지는 비무장지대 내로 하며, 남북한 지역을 모두 포함한다. 셋째, 가급적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넷째, 남북한 주민을 물론 세계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개방한다.

4) 기대 효과

남북간에 참여하게 대립하는 비무장지대에 남북 주민과 세계인이 어울릴 수 있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한다면 그 자체로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민

족의 자산이 될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시대를 개막하는 기념비적 공간이 될 것이다.

남북간 분열과 갈등이 상징이 되어버린 비무장지대 내에 남북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작은 통일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60년 분단에 따른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북 주민간에 마음을 열어나가는 계기임과 동시에 ‘큰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세계평화공원 조성과정에서 남북간에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신뢰와 협력을 쌓아 나가게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남북간에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신뢰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남북관계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세계평화공원 조성·운영에 국제사회가 참여하고, 세계인에게 공원을 개방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남과 북의 의지를 전세계에 확인시키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의 일정 구역을 무기가 사라진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고, 이러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면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해외 유사사례

비무장지대는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일정간격을 유지하도록 협정이나 조약에 의해 설정된 완충지대를 의미하며, 세계적으로 12개의 비무장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세계에는 비무장지대 이외에도 과거 국가간 갈등이 발생했거나 현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분쟁지역들이 있다. 국가간 접경지역의 형성 배경과 성격에 따라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에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첫째,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이다. 통일 이전의 동서독 접경지대는 동독 정부에 의해 설치된 철조망, 지뢰 등에 의해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어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었다. 독일 통일 이후, ‘독일 환경 및 자연보호연합(BUND)’의 ‘그뤼네스 반트 보존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독일 역사의 기념비적 장소가 되어 전후세대의 자연 및 역사 체험장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핀란드-러시아의 우정 결연 공원이다. 핀란드는 1917년 러시아에서 독립하였으나, 1939년 소련의 침공을 받았고, 1944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접경을 따라 핀란드에 14개, 러시아에 6개의 보호지역을 지정하였고, 이중 일부 지역에 우정공원(Friendship Park)과 결연공원(Twin Parks) 설립하였다.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 양국에 각각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워크숍 개최 등 상호 연구협력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에콰도르-페루의 평화공원이다. 에콰도르와 페루는 1999년 영토분쟁 해결의 일환으로 콘도르 산맥 접경지역에 평화공원을 지정하였다. 양국은 공원을 공동 관리하며, 멸종위기종 보호 협력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키프로스, 예멘, 홍콩-선전 등 세계 각국에서는 분쟁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 분쟁지역에서의 경험과 교훈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운영과정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3)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사업 추진 기반 구축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DMZ 세계평화공원기획단)을 통일부에 설치하였다. 또한, 외교·군사·환경·문화 등 제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였다.

이후 현장방문·전문가 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으며,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2014년도 예산 302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 반영하였다.

2)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의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국들에게 그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동 사업이 실현될 경우 한반도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동 사업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로부터 비롯된다.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상·하 합동연설을 계기로 우리의 구상에 공감을 표시하고, 추진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중국도 한·중 정상 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세계평화공원 구상 취지에 공감하며, 협력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반기문 유엔(UN)사무총장도 방한 기자회견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과 관련하여 남북간 협의가 진전될 경우 유엔(UN)도 적극 돕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후 정부는 유엔(UN)과 고위급 접촉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3) 향후 추진 계획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합의가 필요하나, 아직 남북대화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본격적인 대북협약에 착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한 시기에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북한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유관국과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의 의미를 전달하는 한편, 국제사회도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 나갈 것이다.

또한, 남북간 합의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추진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특히 비무장지대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인 만큼, 공원 조성 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안 및 일부 손상된 환경을 복구하는 방안도 준비해 나갈 것이다.

② 남·북·러 3각 협력

정부는 북방 3각 협력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동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북협력의 범위를 남·북·중, 남·북·러 등 주변국 협력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공간을 넓히고 대북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18일 개최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기조연설(2013.10.18) 주요내용

- “첫째, 유라시아를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다시 연결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유라시아 내 끊어진 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교류를 가로막는 물리적 장벽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 “유라시아 동북부를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유럽까지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 “둘째, 유라시아를 ‘창조의 대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라시아인들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고 산업과 기술 그리고 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그 바탕 위에 새로운 경제가 창출되고, 새로운 문화가 어우러지는 시대를 열어갑니다.”
- “셋째, 유라시아를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한반도의 평화는 유라시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런 차원에서 한국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모든 나라의 정부와 국민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개막식(2013.10.18)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한·러 양국간 신뢰관계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필요성 등을 국익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기업의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참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은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나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 및 나진항 개발, 복합 물류사업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0년 러시아와 북한이 나진-하산 공동개발에 합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 합의로 2008년 10월 러시아가 70%, 북한이 30%의 지분을 갖는 합작회사(라선콘트랜스)가 설립되었다. 이후 러시아와 북한 양측은 △나진-하산 철도개보수(‘13.9월 완료) △나진항 제3부두 개발 등 항만·터미널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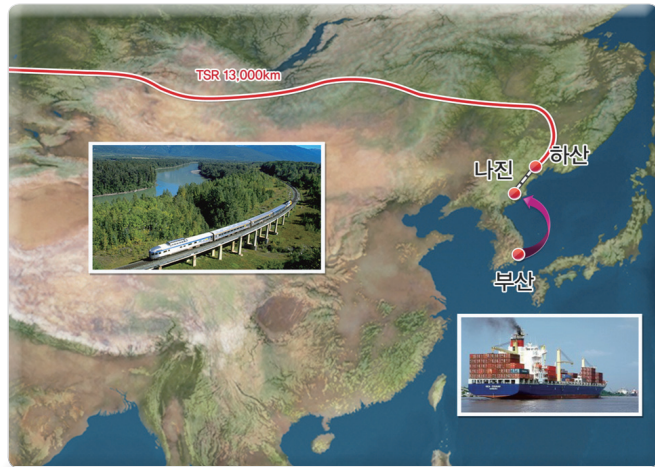
2013년 11월 13일 한·러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 ‘남·북·러 3각 협력’의 우선사업으로서 양국 기업이 추진하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기로 합의하였다.

2013년 한-러 공동성명 中

- 양측은 러시아 철도공사의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시범사업인 나진(북한)-하산(러시아) 구간 철도 복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나진항 제3부두의 현대화를 환영하였다. 이를 계기로 양측은 양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철도 및 항만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동안 러시아측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으며,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 계기에 KORAIL, (주)포스코, (주)현대상선으로 구성된 우리측 3사 컨소시엄과 러시아측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동 사업 참여를 위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적 추진을 통해 남·북·러 물류 활성화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을 위한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부산~나진~하산으로 이어지는 물류망



제2장 개성공단 사업

02

제1절 개성공단 가동중단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제2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추진

제3절 개성공단 현황

제4절 입주기업 지원대책



제2장 개성공단 사업

북한은 3월말부터 우리측이 북한의 최고 존엄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해 군통신선 차단, 개성공단 통행 제한, 근로자 철수 등 일방적 조치를 취하고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켰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방적 조치의 철회 및 당국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의 요구와 대화제의를 거부함은 물론, 의약품·식자재와 같은 최소한의 생필품에 대한 개성공단 반입마저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4월 26일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본 입장에서 개성공단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전원을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 아래, 북한에 당국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7월 6일 제1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7차례에 걸친 회담 끝에 8월 14일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합의하였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단순히 가동중단 이전 상황으로 되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동중단 재발방지,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개선, 개성공단 국제화라는 4가지 핵심 요소를 통하여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다. 이러한 ‘발전적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남북은 개성공단 문제를 상시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기구로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

고, 그 산하에 4개 분과위원회 및 상설사무처를 개설하였다.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따라 9월 16일부터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었고,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개성공단의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당국간 협의가 4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에서는 전자출입체계를 기반으로 한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기로 하고, 인터넷 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에서는 우리 국민의 확고한 신변 안전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체결 문제를 협의하였다. 또한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원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개성공단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문제 및 노무·세무제도 등 공단 현안에 대해 남북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에서는 외국기업 유치에 위한 해외공동투자설명회 개최 문제를 협의하였다.

제1절 개성공단 가동중단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① 북한의 일방적인 가동중단과 정부의 대처

북한은 3월 27일 일방적으로 서해 군통신선을 차단하였다. 개성공단 출입을 위해서는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출입신청과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해 군통신선이 차단되면 개성공단 출입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서해 군통신선 차단 조치가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조치라고 인식하고, 3월 27일 서울과 개성에 각각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국민의 체류 상황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통해 개성 현지 주재원들의 신변안전 지침을 전달하였다.

북한은 4월 3일 북한측에서 우리측으로 귀환하는 입경은 허용하되, 우리측에서 북한측으로 방문하는 출경은 차단한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측의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개성공단 출입을 즉각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월 8일 우리측이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개성공단 잠정중단 및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개성공단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4월 11일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북한 당국에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4월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답 형식의 입장 표명을 통해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였다. 4월 24일에는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의약품·식자재 반입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 요구마저도 거부하였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이어 공단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4월 25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개성공단 주재원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 당국에 다시 한 번 제의하였다. 북한이 이에 4월 26일까지 호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혔으나, 북한은 이러한 정부의 요구도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4월 26일 개성공단 내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간 기존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을 근거로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공단 내 입주기업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할 것을 요구하였고,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4월 27일 1차 126명, 4월 29일 2차 43명이 귀환하여 모두 귀환하게 되었다. 개성공단 내에는 입주기업 관계자를 제외하고, 공단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위원회 직원 및 기반시설 관계자 7명만이 잔류하였으나, 5월 3일 잔류인원 7명이 귀환함으로써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은 전원 철수하게 되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북한에 대해 우리 기업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업들이 귀환 과정에서 들어오지 못한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입하는 데에도 북한이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국민 귀환(2013.4.27)

②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완제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생산을 위해 구입하였던 원부자재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러한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5월 14일 북한에 원부자재·완제품 반입을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5월 15일 우리측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5월 16일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5월 21일에는 북한에 대해 실무회담 제의를 수용할 것을 다시 촉구하였다. 북한은 5월 28일 기업들이 우선 공단에 복귀하면 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당국간 대화를 회피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하는 것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측의 회담 제의를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한편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개성공단 내 설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설비 점검이 시급해졌다. 이에 정부는 입주기업의 설비점검과 완제품·원부자재

반입을 위하여 7월 4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을 7월 6일에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우리측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동의함에 따라 남북은 7월 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제1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7월 6~7일 개최된 제1차 실무회담에서 채택된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합의서」에 따라 7월 10일부터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설비를 점검하고 완제품·원부자재를 반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한은 이 과정에서 통행·통신과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은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제2차 회담에서 제6차 회담까지 양측은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의제들에 대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였고, 제6차 회담에서 북한은 사실상 회담 결렬을 선언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에 실무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8월 4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에 입주기업의 피해 상황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며, 실무회담을 다시 열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8월 7일 북한은 8월 14일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측은 같은 날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제의에 동의하면서, 8월 14일 제7차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제7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2013.8.14)

제7차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가동중단 재발방지 보장을 포함, 5개조로 구성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 촉구해온 재발방지 및 기업 피해 보상, 신변안전 및 투자보장, 통행·통신·통관 문제 개선, 개성공단 국제화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입장을 북한이 수용하여 합의가 타결되었다.



제2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추진

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1) 남북공동위원회 설치

남북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후속조치로서 8월 28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위원회 및 그 산하에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와 상설사무처(이하 사무처)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개성공단의 운영체제는 당국간 기구로서의 공동위원회 및 사무처, 기존 집행기구로서 공단 관리업무를 담당해오던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및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공동위원회는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현안문제를 협의·결정하며, 개성공단 관련 남북간 합의 이행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남북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산하 분과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9월 2일 제1차 공동위원회를 시작으로, 9월 11일 제2차, 9월 16일 제3차, 12월 19일 제4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남북은 공단 현안문제와 제도 개선 등에 관하여 협의해 나갔다.

(2)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

남북은 9월 10일 체결된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운영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단 내에 사무처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남북은 9월 24일 사무처 개소 일정 등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9월 27일 양측 사무처 인원 명단을 교환한 후 9월 30일 사무처를 개소하였다. 10월 23일 양측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부속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사무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는 9월 11일 제2차 공동위원회에서 체결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후속조치로서, 그 주요내용은 업무 시간, 남북간 정례회의 및 업무협의 계획, 남북 사무처 인원들의 통행·통신방법, 업무협조체계 등이다.

사무처는 현재 개성공단 내에 위치한 유일한 당국간 상설기구로서 상시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남북간 연락업무는 물론, 기타 공동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2013.9.30)

②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1) 통행·통신·통관 제도 개선

남북은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서 통행·통신·통관(이하 3통)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3통 문제는 개성공단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단 제도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현재 개성공단의 통행을 위해서는 특정 시간대를 정하여 출입을 신청해야 하며, 국내와의 통신수단은 유선전화와 팩스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통관 역시 국제적 수준의 선별검사가 아닌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기업들의 납품을 지연시키는 등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기업들이 국제 수준의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3통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통행 분야에서는 전자출입체계를 이용한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함으로써 신청한 일자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도면 등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을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관 분야에서는 국제적 수준으로 2% 선별검사를 도입하여 기업들의 물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북은 9월 4일, 9월 13일 각각 제1차, 제2차 3통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자출입체계를 통한 일일단위 상시통행 체계 구축, 인터넷 연결문제, 통관 절차 간소화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위한 전자출입체계 구축 공사 계획 및 상시통행 실시계획안, 인터넷 연결을 위한 망 구성 및 운영방식에 관한 방안을 수립하여 북한과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11월 29일 제3차 3통 분과위원회에서 남북은 전자출입체계 공사를 12

월 첫째주부터 개시하기로 하고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한 현장방문과 함께, 인터넷 연결 등을 위한 통신분야 실무접촉, 군통신 분야 실무접촉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에 따라 통행 분야에서 전자출입체계 구축공사가 12월 11일부터 시작되었다. 통신분야에서는 통신분야, 군통신 분야 실무접촉을 12월 6일 동시에 개최하였다. 통신분야 실무협약에서 인터넷 연결 방식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군통신 분야 실무협약에서는 안정적 통행 보장을 위해 북한측이 요청한 자재장비 제공 문제에 대해 청취하였다. 통관 분야에서는 12월 4일, 7일 양일에 걸쳐 우리측 인원이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RFID 공사 개시(2013.12.11)

(2) 출입·체류 합의서 보완 노력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통해 개성공단의 통행 제한 등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남북은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신변안전 제도 절차를 보완하기로 합의하였다. 개성공단의 통행 및 체류에 관한 기존 제도로는 2004년 1월 체결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출입·체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지구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인원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은 9월 4일, 9월 13일, 9월 26일, 11월 14일 총 4차례 출입·체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입·체류 부속합의서 체결 문제를 논의하였다. 양측은 위법행위 발생시 입회권 및 조사시 기본권 보장 등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3) 투자보호·관리운영 제도 개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에 대해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등 기존 합의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출입·체류 문제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내에 있는 우리 기업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남북간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남북은 2003년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명단만 교환한 채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성공단에 상사중재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구성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투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제2차 공동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3개월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 내에 중재규정 등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측은 중재관련 법

률·국제상사중재 실무 등의 전문가로 우리측 상사중재위원을 구성하여 12월 11일 북한에 통보하였고, 북한은 12월 26일 북한측 상사중재위원 명단을 통보해 옴으로써 개성공단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앞으로 남북은 이를 통해 중재규정 마련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남북은 노무, 세무제도와 같은 공단의 관리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기업의 피해 보상을 위해 2013년 세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2013년 전체 발생한 세금을 면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기타 노무 관련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앞으로도 쌍방이 필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제기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국제경쟁력 제고 노력

남북은 8월 14일 제7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외국기업 유치, 노무·세무 등 제도 개선,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 추진 등을 합의하였다. 특히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에서 남북은 공동투자설명회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9월 16일 제2차 공동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개성공단에서 공동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행사 준비, 홍보자료 준비, 기업 안내 등 공동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을 통해 개성공단에 관심있는 외국기업들의 투자 상담도 병행하였다. 투자상담시 외국기업들은 주로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3통 문제 등 제도 개선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이 전자출입체계 구축 등을 협의하기 위해 9월 26일 3통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 우리측의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3통 문제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기 보다는, 3통 제도 개선 등 행사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때 공동 투자설명회를 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10월 11일 투자설명회를 연기할 것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도 10월 15일 동의를 뜻을 밝혀옴에 따라, 공동투자설명회는 연기되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12월 19일 제4차 공동위원회에서 북한에 공동투자 설명회를 1월중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 문제에 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입주기업의 해외관로 확대를 위하여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EU FTA 제2차 역외가공지역위원회(2013.9), 한-미 FTA 제1차 역외가공지역위원회(2013. 11) 등 주요국과의 FTA 협상에 참석하여, 개성공단에 대한 상대국의 인지도를 높이고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제3절 개성공단 현황

①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

정부는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3월말부터 시작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를 해결하였다. 7월 6일 제1차 실무회담에서 준비되는 데 따라 공단을 재가동하도록 노력하는 데에 북한과 합의하였고, 8월 14일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서는 기업들이 설비를 정비한 후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단 재가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약 4개월간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을 안전하게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부터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가동중단 당시 우리측은 전력 및 용수, 가스 등의 시설에 안전·불능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입주기업의 방북에 앞서, 8월 17일부터 한국전력, KT, 수자원공사 등 공단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 통신, 용수시설 점검에 필요한 인원이 가장 먼저 방북했다. 이날 30명의 방북을 시작으로, 8월 19일 환경 및 방역 전문인력 등이 방북하여 폐기물처리장, 폐수처리장 등의 시설을 점검하고 공단 내 방역 작업을 시작하였다. 소방서, 병원 등과 같은 지원시설은 전력 및 용수시설 점검보수가 완료된 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 점검이 이루어지면서, 각 공장의 설비점검과 보수를 위해 입주기업들이 방북하기 시작하였다. 기계금속 업종 등 업종 특성상 설비점검이 시급한 업체부터 질서있게 추진하도록 하여 8월 22일부터 기계금속 및 화학 업종 등을 시작으로 입주기업의 설비점검이 시작되었다. 장마철

피해로 일부 기업의 보수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순조롭게 설비점검을 완료하였다. 9월 4일 제2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남북은 9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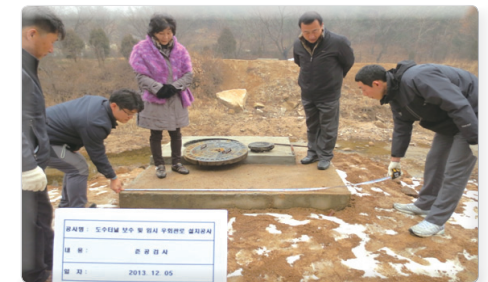
② 개성공단 현황

(1) 가동 현황

9월 16일부터 입주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개성공단 가동상황은 가동중단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입주기업은 123개사이며 생산액은 3,529만 달러로, 전년 동기 생산액인 3,642만 달러의 약 97% 수준이다.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생산액은 2억 2,378만 달러, 누적생산액은 21억 9,977만 달러이다. 입주기업 신고 기준 가동률은 약 85% 수준으로, 이 역시 전년도 기준 약 80%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출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 5만 2천여 명으로, 가동중단 이전인 2013년 3월의 5만 3천여명에 근접하고 있다.

(2) 기반시설 공사·보수

공단이 재가동되면서 4개월여 중단되었던 기반시설 공사들도 재개되었다. 폐기물소각장은 당초 2012년 10월부터 2차 증설을 시작하였으나,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한 피해 복구 후 공사



도수터널 보수공사(2013.12.5)

를 다시 진행하였다. 또한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필요한 도수터널 보수공사도 재개되었다.

③ 개성공단 방문

개성공단의 정상화 과정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독일 및 호주 등 외국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투자여건을 확인하였다. 국제사회에서도 G20 서울 컨퍼런스에 참여한 각국 고위관료 및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 25명이 12월 19일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이는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10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바이어를 재확보할 수 있도록, 12월 5일 의류산업협회 방문 등 바이어의 방문행사도 지원하였다.



국회 외통위 방문(2013.10.30)



G20 대표단 방문(2013.12.19)

제4절 입주기업 지원대책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로 이루어진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시행하였다.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는 4월 29일, 5월 14일 2차례 개최되었으며, 산하 실무대책반 회의는 4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9차례 개최되었다.

① 기업 실태조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5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유관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 양식을 작성하고, 총 조사대상 296개사(입주기업 123개사, 미착공기업 74개사, 공사중단기업 13개사, 영업소 86개사)로부터 실태신고서를 접수받았다. 또한 실태신고 지원을 위해 정부합동 현장설명회를 전국 7개 지역에서 개최하고 기업에 실태조사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그 결과 총 234개 업체(입주기업 113개사, 미착공기업 49개사, 공사중단기업 7개사, 영업소 65개사)가 실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정부는 실태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접수받은 실태조사 신고 결과를 전문회계법인이 검증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실태조사 방향 및 검토결과에 대한 감수를 진행하

였다. 평가자문회의에는 통일부 뿐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개성공단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 금액은 총 1조 359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내외부의 증빙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증빙된 금액은 총 7,860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에서는 한전·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10개사의 피해액은 제외하였으며,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미래의 영업손실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금융 지원

정부는 4월 29일 제1차 정부합동대책반 회의 및 4월 30일 실무 T/F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5월 3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630억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000억원,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1,000억원,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69억원 등이다. 남북협력기금 및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은 2% 고정금리에 10억원 한도, 1년 대출기간 조건으로 대출되었다. 정책금융공사 온렌딩은 정책금융공사 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하는 형태이며,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통한 시중은행 대출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외에 가동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기업에게도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하였다. 특히 5월 14일 영업기업 지원 대책으로서 남북협력기금 대출 및 기존 대출금 납부 유예 등을 시행하였다.

6월 7일 입주기업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9월

3일 제2차 긴급운전자금 대출을 추진하였다. 이번 추가대출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하여, 최대 500억원 규모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입주기업 123개사 중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114개 기업을 대상으로, 1차 대출과 마찬가지로 2% 고정 금리에 1년 대출 기간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대출시에는 입주기업들의 대출 한도 확대 요청을 감안하여, 기존 1차 대출시의 10억원 한도에 비해 최대 30억원 까지 한도를 확대하였다. 또한 1차 대출시에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중복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대출에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더 많은 입주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당초 10월말까지였던 신청 기한을 11월 중순까지 연장하였다.

2단계의 금융지원 결과, 12월 31일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총 1,111억 2천만원의 대출이 지원되었다. 구체적으로 남북협력기금 556억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차 173억 5천만원, 2차 273억 7천만원,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44억원,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64억원 등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지원 현황】

구 분		누 계
1차 대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입주기업 76개사, 508억원 영업소 29개사, 48억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32건, 173억 5천만원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6개사, 44억원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신보 21개사 55억 3천만원, 기보 3개사 8억 7천만원
	소 계	837억 5천만원
2차대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30개사, 273억 7천만원
총 계		1,111억 2천만원

③ 완제품·원부자재 반입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귀환시에 공단 내에 남겨두고 온 완제품 및 원부자재 문제때문에 원청업체와의 계약이 파기되는 등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북한에 지속적으로 입주기업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입을 위한 방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회담을 제의하였다. 그 결과 제1차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우리 기업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입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기업들의 완제품·원부자재 반입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 각 입주기업에서는 시설 피해를 점검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정부는 일일 출입 인원 및 차량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신속하게 물자를 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열흘간의 물자 반입 결과, 총 228개사에서 3,793톤의 물자를 반입하였다. 이 중 완제품은 1,953톤, 원부자재는 1,378톤, 설비는 462톤이었다. 이를 통해 바이어 계약 이행 및 대체생산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해지면서,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었다.

④ 판로 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대부분 임가공 기업인만큼, 가동중단 기간에 발생한 원청업체의 손해배상 요구, 납품 거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섬유연합회 등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정부는 7월 반입한 완제품 중 판매 시기를 놓친 계절상품과 계약 파기로 인해 원청업체에 납품되지 못한 제품들을 중소기업 유통센터, 유통전

문기업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8월 2일에는 판로지원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부처별로 마련한 맞춤형 판로지원방안을 입주기업에 안내하였다. 그밖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세계한상대회 개성공단 홍보관 운영을 지원하고,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개성공단 제품 국회 전시 판매전을 지원하여, 개성공단 홍보와 입주기업 판로 확대를 도모하였다.



국회 판매전(2013.12.10~11)



세계한상대회(2013.10.29~31)

⑤ 기타 지원

정부는 금융지원·판로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대책을 모색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기존에 대출했던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4월 12일 31개사 231억원, 11월 13일 28개사 97억원의 상환유예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던 우리측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 및 실업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휴업·휴직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직접 수당 지급 또는 생계비 용자, 실업급여 신속 지급 및 재취업 지원 등 실업 지원대책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13년 12월 현재 28개사 322여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기타 4대 사회보험 납부 연장,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국내 대체생산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대책을 시행하는 등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정부는 입주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8월 2일부터 입주기업 애로사항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개별 기업에 대해 1:1 맞춤 상담을 실시하고, 각종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통일부 장관·차관이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입주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였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03

제1절 남북경제협력

제2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제3절 남북 출입통행 및 운송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정부는 「5.24 조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교류협력의 수요를 질서있게 관리함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남북간 경제협력의 경우, 「5.24 조치」 기조 하에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교역과 경협사업의 중단상태가 지속되었다. 다만, 정부는 「5.24 조치」의 특별한 사례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남북러 3각협력’ 추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는 남북간 경제협력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한편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에서 종교·문화유산·학술·체육·예술 등 교류에 대해서는 관련 남-북 접촉 및 방북을 허용했다. 그 결과 사회문화교류 분야에 있어서 북한주민 접촉 197건, 방북 5건, 방남 2건을 승인하였으며, 체육과 종교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공동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남북간 교류협력이 보편적 규범과 법·질서를 준수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질서있는 교류협력」의 기조를 정립하고, 이에 대해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문화분야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각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다.

제1절 남북경제협력

① 남북교역

(1) 교역규모

2013년 남북교역은 개성공단 가동중단(4.9~9.15) 사태로 인해 전년 19억 7,111만 달러 대비 42.4% 감소한 11억 3,58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중 반입은 전년 대비 42.7% 감소하여 6억 1,524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반출은 5억 2,060만 달러로 전년보다 42.0% 감소하였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일방적인 근로자 철수로 인한 잠정 가동중단으로 인해 전년 19억 6,120만 달러 대비 42.3% 감소한 11억 3,217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99.7%를 차지하였다. 또한 대북지원 규모는 민간차원에서 북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295만 달러 상당이다.

【연도별 남북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1,074	615	9,752
반출	0	1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897	521	9,676
계	19	13	111	173	187	195	287	252	308	222	333	425	403	642	724	697	1,056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971	1,136	19,428

* 반올림으로 인해 각 년도의 반입/반출 '합계'와 '계'가 다를 수 있음. 1백만 달러 이하는 '0'으로 표시

(2) 유형별 교역 현황

남북교역을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나눠 보면, 2013년 상업적 거래는 11억 3,290만 달러로 전년 19억 6,204만 달러 대비 42.3% 감소하였고, 전체 교역에서의 비중은 99.7%로 전년 99.5%와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상업적 거래 중 반입은 6억 1,524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7% 감소하였고, 반출도 5억 1,766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7% 감소하였다.

2013년 상업적 거래의 구성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은 11억 3,217만 달러로 2012년 대비 42.3% 감소하면서 상업적 교역에서 99.9%, 전체 교역에서 99.7%를 차지하여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교역의 경우 기업들이 「5·24 조치」 이전에 북한에 대가를 지급했으나 물품을 가져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유연화 조치 차원에서 수산물로 반입을 허용하고, 사회문화교류 성격의 북한 서적류 반입에 따라 59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9.8% 감소했으며 상업적 교역에서 0.0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2013년 비상업적 거래는 295만 달러로 전년 906만 달러 대비 67.5% 감소하여 전체 교역에서 0.3%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의 영향으로 사회·문화협력이 중단되고 대북지원이 감소한 결과이다.

(3) 교역구조

2013년 교역품목으로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섬유류, 전기·전자제품 등이 전체의 70.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섬유류 교역액은 전년 7억 7,766만 달러에서 4억 3,941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교역에서의

비중은 전년 39.5%에서 38.7%로 하락하였다. 전기·전자제품류 교역액 또한 전년 6억 4,195만 달러에서 3억 5,720만 달러로 감소하여 전체 교역에서 31.4%를 차지하였다. 또한 농림수산물 교역액은 2,083만 달러로 전체 교역에서 1.8%를 차지하여 전년 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남북교역 품목 구성】

(단위: 천 달러, %)

구분 연도	섬유류	전기· 전자 제품	농림 수산물	기계류	생활 용품	철강 금속 제품	화학 공업 제품	광산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잡제품	계
2012	777,661 (39.5)	641,954 (32.6)	38,603 (2.0)	139,472 (7.1)	149,542 (7.6)	32,812 (1.7)	104,722 (5.3)	36,701 (1.9)	47,745 (2.4)	1,892 (0.1)	1,971,105 (100.0)
2013	439,409 (38.7)	357,197 (31.4)	20,834 (1.8)	88,359 (7.8)	94,765 (8.3)	17,014 (1.5)	64,430 (5.7)	24,052 (2.1)	64,430 (5.7)	1,158 (0.1)	1,135,846 (100.0)

* 구성비 :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

한편 개성공단 중단사태의 영향으로 남북 간 교역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수는 2013년에는 328개사로, 2012년 365개사에 비해 10.1% 감소

【2012년 및 2013년도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 천 달러/%)

구분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합 계	
	개성 공단	위탁 가공	일반 교역	금강산 관광	기타 경제협력	대북 지원	사회·문화 협력		
2012년	교역액 (천 달러)	1,961,195	-	843	-	4	9,064	-	1,971,105
	구성비(%)	99.5	-	0	-	0	0.5	-	100.0
2013년	교역액 (천 달러)	1,132,174	-	589	136	-	2,947	-	1,135,846
	구성비(%)	99.7	-	0.1	0	-	0.3	-	100.0

* 구성비 :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 '0.1' 이하는 '0'으로 표기

하였으며, 교역 품목의 수는 674개 품목으로 2012년 731개 품목에 비해 57개 품목이 감소하였다.

② 「5.24 조치」의 이행과 기업애로 최소화 대책 마련

정부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5.24 조치」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우선, 남북교역 및 신규투자 불허 조치 이행을 위해 2010년 6월 14일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남북 간 모든 물품의 이동을 승인 대상으로 전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반출·반입에 따른 통관검사를 강화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제3국으로 위조하여 위장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2011년 1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11개 부처와 합동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24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첫째,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5.24 조치 발표 이후 실시한 3차례 실태조사(2010.5.25~6.2, 6.18~22, 2011.5.13~18)에 이어, 제4차 실태조사(2013.5.13~20)를 실시하였다. 또한 3차례의 장·차관 면담을 실시(2013.9.23, 10.23, 12.23), 기업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외에도 기업별 면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 애로상담센터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둘째, 「5.24 조치」 이전 이미 북한과 계약을 체결, 대금을 지불한 건에 대해서는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반출·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초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191개사 1억 2,578만 달러 상당의 일반 교역 선금금 지급분의 수산물과 위탁가공 완제품이 반입되었으며, 총 72개사 4,141만 달러 상당의 원부자재가 반출된 바 있다. 또한 2012년 6월부터는 위 유예조치 기간에 미처 회수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반입을 추가로 허용(26개사, 392만 달러 대상)하였으며, 총 3개사 79만 달러 상당의 수산물 반입이 진행되었다. 수산물 반입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3년 2월까지 진행되어 오다 핵실험 이후 추가반입이 중단된 상태이다.

셋째, 사업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난 경감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5.24 조치」 이후 기업들에 대한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 26일 남북협력기금에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제도」를 신설하고, 2차례에 걸쳐 연이율 2%의 정책자금을 대출하였다. 2010년 8월에서 2011년 2월까지 시행된 1차 특별대출을 통해 184개 기업이 377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2012년 1월에서 6월까지 시행된 2차 특별대출을 통해 99개 기업이 183억 원의 대출을 받아, 총 221개 기업이 560억 원의 융자혜택을 받았다.

또한 정부는 「5.24 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제1·2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의 대출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1·2차 대출 모두 만기도래에도 불구하고 2차례 상환을 유예하였으며, 2013년 8월에는 세 번째 상환유예(154개 기업)를 실시하였다.

넷째, 중단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경영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2012년 9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교역·경협·금강산 기업에 「긴급운영경비」를 무상 지원하였다. 교역·투자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였으며, 그 결과 총 457개 기업에 약 52억 원을 지원하였다.

다섯째, 우리 교역·경협기업들의 북한에 있는 투자자산을 점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방북 및 제3국에서의 접촉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까지 9개사가 21회에 걸쳐 개성 및 금강산 지역을 방문하였고,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현재는 방북 및 제3국 접촉이 중단된 상태이다.

③ 금강산 관광 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2008년 7월 12일부터 중단되었다. 2010년 2월 8일 남북은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신변안전보장 등을 협의하자는 우리측 제안을 북한이 거부하면서 성과없이 회담이 종료되었다.

2013년에도 남북 당국간 금강산 관광 사업 협의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남북 양측은 2013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판문점에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갖고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하여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진행중이던 7월 10일에 금강산 관광 사업 협의를 위한 실무 접촉을 7월 17일 금강산 또는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개성공단 문제를 협의·해결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북한도 이에 동의하여 접촉제의를 보류하였다.

북한은 8월 19일 금강산 관광객 사건 재발방지문제와 신변안전문제, 재산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후 남북 당국은 회담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우리측은 8월 27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9.25~9.30) 및 개성공단 관련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10월 2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9월 21일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미룰 것을 통보해 왔다.

남북 당국간 금강산 관광 관련 진행경과

- 2013.6.9~10,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 개최, 「남북 당국회담」 (6.12~13)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
- 2013.7.10, 북한은 금강산 관광 사업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을 7.17 금강산 또는 개성개최 제의
- 2013.7.10, 우리측은 개성공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통보
- 2013.7.11,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회담 제의를 보류한다고 통보
- 2013.8.19, 북한은 금강산관광객 사건 재발방지, 신변안전, 재산문제 등 협의위한 실무회담 개최 제의
- 2013.8.20, 우리측은 금강산 관광 중단 5년 경과 등 상황을 고려,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급하게 회담을 개최하기보다 9.25 금강산 개최 입장을 전달
- 2013.8.22, 북한은 실무회담을 8월말~9월초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수정제의
- 2013.8.27,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행사(9.25~9.30) 관련 조치가 진행중이고,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상황을 감안, 10.2 금강산 개최 수정제의
- 2013.9.21, 북한은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 및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미룰 것을 통보

한편, 북한은 2011년 8월 우리 기업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하고, 우리 측 인원을 추방한 이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금강산 관광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5월 18일부터 나진-금강산 관광에 유람선 ‘황성호’를 투입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금강산관광지구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1년 12월 제1차 실태조사(2011.12.6~15)에 이어 2013년 5월 제2차 실태조사(2013.5.22~6.5)를 실시하였으며, 장관 면담을 실시(2013.10.23)

하는 등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밖에도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왔다. 1차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26개 기업에 66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며, 2차로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5개 기업에 47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40개 기업에 긴급운영경비 4억 2,5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2013년에는 금강산관광 중단이 지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하였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있는 남북 당국사이에 확실한 신변안전보장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 원상회복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금강산관광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④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정부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남북간 신뢰 및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는 남북간 신뢰 형성과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한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북한의 전력·교통·통신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여건 조성시 북한 경제특구 진출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 구상이자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정부는 경제 분야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이행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향후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북간 신뢰 형성과 비핵화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⑤ 「그린데탕트」

정부는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린데탕트」는 남북간 녹색협력을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협력, 농업협력, 신재생에너지협력, 환경협력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그린데탕트」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관계부처·전문가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분야별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남북간 사업추진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그린데탕트」 관련 관계부처·전문가 합동워크숍(2013.11.29)

제2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① 종교 교류

정부는 종단별 형평성과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서 순수 종교교류 차원의 방북을 허용하였다. 2013년 남북 종교인 사이의 접촉에서는 17개 단체가 중국 베이징, 선양 등에서 20회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남북간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이후에는 남북 공동행사가 개최기도 하였다.

2013년 10월 12일 조계종이 금강산 신계사에서 「신계사 낙성 6주년 기념 남북합동법회」를, 11월 7일에는 천태종이 개성 영통사에서 「대각국사 다례재 및 영통사 낙성 8주년 남북합동법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2013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의사 의거 10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1월 10일에는 평양 장충성당에서 「장충성당 설립 25주년 합동미사」를 봉헌하였다.



신계사 낙성 6주년 기념 합동법회 (2013.10.12, 금강산)



영통사 낙성 8주년 기념 합동법회 (2013.11.7, 개성)



장충성당 설립 25주년 합동미사 (2013.11.10, 평양)

② 문화유산 및 예술 교류

남북의 언어를 함께 수록한 단일 사전 편찬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10년 이후 남북공동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남북이 각각 자체적으로 새 어휘 조사 및 사전 집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가 4년만에 2013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을 위한 남북실무협의를 진행하여 2014년부터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작업을 재개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2013년 7월에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회법」의 유효기간을 당초 7년에서 12년으로 5년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을 공포·시행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당초 2014년 4월에서 2019년 4월까지 연장되었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은 2011년 12월 철수한 이후 추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3년 10월 25일 중국 선양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2013년 11월 22일에는 우리측 관계자가 개성 만월대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예술분야에서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남북 교향악단 합동공연 등 기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실무협의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열리는 여러 국제문화 행사에 북한을 초청하고자 하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으나,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국내 영화제에서 북한 영화가 상영되었다. 2013년 8월에 열린 광주국제영화제에서는 유럽·북한 합작영화인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가 상영되었다. 이 영화는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된 바 있다.

【개성 만월대 현장 사진(2013.11.22 개성)】



축대 일부구간 무너짐 현상



축대 전경

③ 체육 교류

체육 교류는 주로 남북한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행사에 남북의 대표단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서울과 화성에서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2013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 등 26명이 참가하였다.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여 광주에서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된 「유스리더십프로그램(Youth Leadership Program)」에는 북한 대표단 4명이 방남하여 참가하였다.

또한, 평양에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2013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에 우리 선수단 등 41명이 방북하여 참가하였다. 특히 동 대회에서는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이외에도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북한 팀이 참가하는 문제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체육교류 추진을 위한 남북 접촉이 이루어졌다.



2013 아시아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평양, 2013.9.12~17)



역도선수권대회 태극기 게양식(평양)



2013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서울·화성, 2013.7.20~28)



유스리더십 프로그램 (광주, 2013.8.22~9.3)

④ 지방자치단체 교류

남북관계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교류가 활성화되지는 못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류 재개에 대비한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

6월 27일부터 28일,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통일부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동 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북교류 정보를 교환하였다.

또한,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독일 참관을 실시하였다. 8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및 정부 담당자가 참여하여 동서독 교류 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북 지방자치단체 교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 질서있는 교류협력 추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이 질서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교류협력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하는 한편,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질서 있는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신뢰를 쌓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정부와 민간 단체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질서있는 교류협력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였다.

먼저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남북 체육교류 관련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남북 체육교류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12월 10일에는 7대 종단 관계자로 구성된 「남북 종교교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북간 종교교류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정부는 2개의 민관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12월 12일에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와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남북 청소년교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청소년교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부는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감안, 기존의 「역사자료 남북협력추진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남북 문화유산교류 실무협의회」를 출범하여 12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남북간 문화유산 교류협력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절 남북 출입통행 및 운송

① 육로 출입통행 현황

2013년도에는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 등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경의선 육로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년도에 비해 남북간 출입통행이 대폭 감소하였다. 남북 간 출입통행이 공식 집계된 2003년 이후 2013년 12월까지 남북출입사무소의 출경기준으로 총 269만 6,283명의 인원과 총 73만 5,691대의 차량이 육로로 출입하였다. 2013년에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육로 출입통행은 출경기준으로 총 7만 7,277명의 인원과 총 5만 5,154대의 차량이 출입하였다.

경의선 육로의 출입통행은 2009년 이후 매년 약 11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의 출경 인원과 약 7만 대에서 8만 대 정도의 출경 차량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인원 7만 6,826명, 차량 5만 5,007대가 출경하여 전년 대비 인원 37%, 차량 38%가 감소하였다. 이는 개성공단 출입경의 잠정중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2013년 4월 3일부터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을 차단하고 입경만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데 이어 4월 8일에는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킴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은 잠정 중단되었다. 5월 3일에는 우리측 개성공단 잔류인원이 전원 철수함으로써 남북간 통행도 잠정 중단되었다. 그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남북회담 대표단과 공단 및 기업관계자들의 방북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9월 10일에는 군통신선이 다시 연결되었으며, 9월 16일부터 개성공단의 조업이 재개되어 통행이 정상화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남북관계 불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개성공단 등으로 출입경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안전한 출입통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2013년도에는 경의선 육로를 통한 출입경 인원은 감소했지만, 다양한 목적의 출입경이 이루어졌다. 우선 개성공단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인원의 출입경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8월 29일에는 뉴질랜드인 5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평양을 거쳐 입경하였다. 9월 30일에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가 개소됨에 따라 사무처 요원들의 통행도 상시화 되었다. 10월 30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21명이 국정감사 기간중 개성공단을 방문하였고, 12월 12일에는 독일인 투자자 2명이 개성공단 우리업체와의 합작투자 가능성 점검 등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12월 19일에는 「G20 서울 컨퍼런스」 관계자 51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였고, 12월 26일에는 개성공단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공기업 사장단 일행 20명의 개성공단 방문도 이루어졌다.

동해선 육로의 출입통행은 2008년 7월 북한군 초병에 의한 금강산관광객의 총격 사망으로 금강산관광이 중지됨에 따라 출입경 인원이 대폭 감소하였다.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시설관리를 위한 출입이 이루어져 왔으나, 2010년 4월 27일 북한이 금강산지구 정부 및 민간 재산을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2011년 8월 23일 금강산지구 우리측 관리인원이 전원 철수함에 따라 동해선으로의 출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후 금강산관광, 신계사 복원 등 기념행사 관련 출입이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 특히 2013년도는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로 무산된 「2013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하여 8월 28부터 9월 22까지 인원 357명, 차량 129대가 왕래하였다.

【연도별 경의선 및 동해선 육로 출경 인원·차량】

(단위 : 명/대)

구분	연도	2003~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경의선 육로	인원(명)	94,579	84,100	144,971	263,258	115,026	126,107	115,249	121,038	76,826	1,141,154
	차량(대)	55,431	47,352	71,857	91,309	72,929	83,308	81,414	88,586	55,007	647,193
동해선 육로	인원(명)	672,032	266,541	384,911	223,972	3,682	3,051	436	53	451	1,555,129
	차량(대)	38,580	14,724	20,035	12,456	1,323	1,027	198	8	147	88,498
출경인원 합계		766,611	350,641	529,882	487,230	118,708	129,158	115,685	121,091	77,277	2,696,283
출경차량 합계		94,011	62,076	91,892	103,765	74,252	84,335	81,612	88,594	55,154	735,691

남북 간 출입통행은 북한측과의 합의를 통해 시간대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의선 출입사무소의 평일 출경은 8시 30분에 시작하여 16시 30분까지 11회, 그리고 입경은 10시 정각에 시작하여 17시 정각까지 10회로 하루에 총 21회에 걸쳐 출입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토요일에는 8시 30분에서 14시 30분 사이에 출경 7회와 입경 5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요일과 북한의 공휴일에는 출입경이 없다.

② 남북화물열차 운행

남북간 연결철도는 2005년 12월 말 경의선 구간(문산~개성, 27.3km)과 동해선 구간(제진~금강산, 25.5km)의 궤도 부설공사가 완료되어 열차운행을 위한 기본시설이 갖춰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남북경제협

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를 통해 2007년 5월 17일 남북열차 시험 운행이 실시되었으며, 남북화물열차는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우리측 도라산역과 북한측 판문역 간을 주 5회(토·일요일 제외) 정기적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남북화물열차는 오전 9시에 우리측 도라산역을 출발하고 오후 2시에 북한 판문역을 출발하여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운행되었으며, 당초에는 총 12량(기관차 1, 화차 10, 차장차 1)의 차량을 편성하여 운행하였으나, 2008년 2월 1일부터 남북 간 합의에 따라 화물이 있는 경우에만 화차를 운행하고, 화물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차와 차장차만 운행하였다. 그러나 남북화물열차는 2008년 12월 1일 북한측의 일방적인 육로통행 제한 조치에 따라 그 이후 운행이 중단되었다.

2007년 12월에서 2008년 11월까지 화물열차 운행기간 중 총 222회에 걸쳐 31량 318톤의 화물이 운송되었다. 이 중 우리 측에서 북한측으로 반출된 컨테이너는 24량 235톤이고, 북한측에서 우리 측으로 반입된 컨테이너는 7량 75톤으로 주로 개성공단 관련 반출·반입 물자가 수송되었다.

③ 해상운송

남북간 해상운송은 2005년 8월에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우리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 등 7개 항과 북한의 남포·해주·고성·원산·홍남·청진·나진 등 7개 항 간에 해상항로가 개설되어 남한과 북한의 선박이 운항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05년 8월부터 남과 북의 해사당국은 전화 1회선과 팩스 1회선의 유선통신망을 연결하여 남북간 선박운항 허가, 선박의

운항정보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선박운항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이 금지되고, 북한도 우리 선박의 북한 해역 운항을 금지시켰다.

「5.24 조치」에 따른 남북교역 중단 등으로 남북간 해상운송은 2010년 5월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13년은 편도기준으로 31회이다. 특히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우리 교역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허용한 북한 농림수산물 수송을 위해 운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3국적 선박이 우리 항구를 단순 경유하여 남북간을 운항하였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북한 선박은 2010년 5월까지 우리측 해역을 총 2,165회 운항하였으며, 2013년에는 운항이 없었다.

【남북 간 선박운항 현황】

(단위 : 회)

연도	1994~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횟수(편도)	13,131	4,497	8,401	11,891	7,435	2,577	1,432	142	228	31

4) 항공운송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해를 우회하는 서울-평양간 임시직 항로가 개설된 이래 남북간 항공기운항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였다. 2010년 「5.24 조치」 이후에는 2011년 4월에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 일행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엘더스 그룹(The Elder's Group)이 북한 평양을 경유하여 남한을 방문하면서, 제3국적 항공기가 남북한 사이를 2회 운항하였다.

【남북 간 항공기운항 현황】

(단위 : 회)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횟수(편도)	43	19	67	112	28	208	88	153	64	11	-	2	-	-



제4장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제1절 남북 이산가족 문제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제3절 인도적 지원

제4절 북한인권

04



제4장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박근혜정부는 남북한 주민 모두의 분단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정책적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2013년 8월23일 남과 북이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을 합의하였으나, 북한측이 상봉을 4일 앞둔 9월 21일 일방적으로 행사를 연기하였다. 이에 정부는 북한측이 순수 인도주의 사안인 상봉행사를 정치적 이유를 들어 연기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북한측이 상봉행사 재개에 조속히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였다.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민간 차원의 교류는 지속되었고, 이산가족들의 고통화를 감안하여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남과 북이 풀어 나가야 할 중요한 인도적 과제이다. 그러나 2013년에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국내 전후 납북자에 대한 지원과 전시납북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은 꾸준히 전개되었다. 2013년 9월 귀환한 전후 납북자에 대해 정착금을 지원하고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시 민간인 납북자 2,560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

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집행 투명성 제고, 민간 대북지원 사업의 효율성 강화, 대북지원 분배투명성 향상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였다.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구현 및 동포애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협력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제17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북한인권법>은 제18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제19대 국회 출범 이후 다시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는 등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2008년부터 유엔(UN) 인권이사회와 유엔(UN) 총회 등 국제무대에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유엔(UN) 인권이사회 등 유엔(UN)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들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1절 남북 이산가족 문제

① 이산가족 현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이산가족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12만 9,255명이다. 이 중 5만 7,176명이 사망하였으며, 생존자는 7만 2,079명이다.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등록자 중 생존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50세	계
인원수(명)	6,445	28,950	22,270	8,375	6,039	72,079
비율(%)	8.9	40.2	30.9	11.6	8.4	100

* 2013년 12월 31일 기준

②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

남과 북은 적십자회담 및 적십자실무접촉 등의 합의에 따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8차례의 상봉행사와 7차례의 화상상봉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 총 4,321가족, 2만 1,734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다.

그러나 2010년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우리 측은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해 2013

【당국 차원의 교류 현황(2000~2013년)】

구분	남한	북한	계
대면상봉(18회)	1,874가족(11,800명)	1,890가족(6,186명)	3,764가족(17,986명)
화상상봉(7회)	279가족(2,257명)	278가족(1,491명)	557가족(3,748명)
계	2,153가족(14,057명)	2,168가족(7,677명)	4,321가족(21,734명)

년 8월15일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측에 제안하였다. 이어 8월 1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한측에 이산가족 상봉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8월 23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8월 19일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접촉장소를 금강산으로 하자고 수정 제의하였으며, 이후 남북은 여러 차례 통지문을 주고받으며 접촉장소를 논의한 끝에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13년 8월 2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2010년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9월 25일~30일), 화상상봉(10월 22일~23일), 11월 중 상봉행사 추가개최 등을 합의하였다.

정부는 접촉 다음날인 8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인선위원회를 개최하여「이산가족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상봉 예비후보자 500명을 선정하였고, 이들에 대해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걸쳐 생사확인 의뢰대상자 250명을 선정하였다. 남과 북은 8월 29일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남 250명, 북 200명)하고 이중 316명(남 167명, 북 149명)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9월16일 상봉대상자 최종명단(남 92명, 북 100명)을 교환하였다.

한편 정부는 이산가족 면회소 등 상봉시설 점검을 위해 8월 28일부터 29

일까지 시설점검단을 금강산에 파견하였고, 9월 3일부터 20일까지 상봉시설 개·보수를 실시하는 등 행사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상봉을 4일 앞둔 9월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9월 21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순수 인도주의 사안인 상봉행사를 정치적 이유를 들어 연기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북한이 상봉행사 재개에 조속히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끝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호응해오지 않아,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③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

정부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와 병행하여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지원금을 생사확인 200만 원, 상봉 500만 원, 교류지속(서신교환 등)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주선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민간 교류 성사 건수는 2008년 314건, 2009년 119건, 2010년 38건, 2011년 28건, 2012년 25건, 2013년 34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민간 교류의 감소 추세는 이산가족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교류 절차 및 경비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류 주선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건수】

(단위 : 건)

구분 \ 연도	1990~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생사확인	3,322	276	69	74	50	35	16	3	6	9	3,860
서신교환	9,388	843	449	413	228	61	15	21	16	22	11,456
상봉	1,465	95	54	55	36	23	7	4	3	3	1,745
계	14,175	1,214	572	542	314	119	38	28	25	34	17,061

④ 우리 측의 독자적 해결 노력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하면서 사후에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영상편지 제작을 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1만 6,800여 명의 희망자를 파악하였다. 우선, 2012년에 815명, 2013년에 2,000명에 대한 영상편지를 제작했으며,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제작하여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등에 보관하고, 향후 남북적십자 간 합의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08년부터 당국 및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와는 별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고령 이산가족들을 초청하여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을 설명하고,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상반기에는 지역별로 100여 명 내외의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교류설명회」 등 초청행사를 4차례 실시하였다. 9월 25일에는 통일부장관 등이 추석계기 상봉행사에 방문단으로 참여할 예정이던 이산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상봉행사가 연기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다.



통일부장관 이산가족 위로방문(2013.9.25)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① 국군포로·납북자 현황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 유엔군과 공산군은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상호 교환하였다. 당시 유엔군 측은 국군 실종자의 수를 8만 2,000여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여 상당수가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조창호 소위의 탈북·귀환 이후 2013년 12월 말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귀환하였고, 국방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와 북한 이탈주민의 진술을 바탕으로 현재 약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납북자는 6·25 전쟁(1950.6.25.~1953.7.27.) 중 납북자(전시납북자)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전후납북자)로 구분된다. 전시납북자 규모는 조사 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952년과 1953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 등을 고려하면 8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후 납북자는 총 3,835명이며, 그중 3,319명이 귀환하였다. 귀환자 중 3,310명은 북한이 송환하였으며, 9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 중 자진 탈북·귀환하였다. 2013년 12월 말 기준 북한에 억류된 전후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후납북자 현황(추정)】

(단위 : 명)

구 분	어선원	대한항공 (KAL)납치	군·경	기 타		계
				국내	해외	
피랍자	3,729	50	30	6	20	3,835
귀환자	송환	3,263	-	-	8	3,310
	탈북·귀환	9	-	-	-	9
미귀환자	457	11	30	6	12	516

②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정부는 2011년 12월 26일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여, 범정부적인 납북자 대책기구로서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납북자 대책위원회」는 납북자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및 현안 업무의 처리방향과 해결방안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경찰청 관계 공무원 및 대한적십자사 임원 등으로 구성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의 경우 이미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교환으로 종료된 문제이고, 납북자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주요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송환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과 2010년 10월 개최된 「남북적십자회담」 및 2009년 10월과 2013년 8월에 개최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등을 통해 계기시마다 북한에 대해 국군포로

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2013년 9월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군포로·납북자 50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북한측에 의뢰하여 19명에 대한 생사를 확인하였으나, 북한측의 일방적인 행사연기 통보로 상봉행사는 개최되지 못하였다. 2000년 제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이후 국군포로 및 납북자 93명에 대한 생사확인이 이루어졌고 그 중 46가족이 상봉하였다.

정부는 유엔(UN)의 인권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등 국제사회를 통해서도 납북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유엔(UN)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에서 진행 중인 납북자 가족의 개인청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엔(UN)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③ 전후납북피해자 지원

2007년 4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후납북자법’)이 제정되어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07년 11월에 국무총리 소속의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2010년 10월까지 납북자가족 피해위로금 428건, 귀환납북자 정착금 8건,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의 보상금 12건 등 총 448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의위원회」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40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425건(145억 1,000만원)의 지급을 결정하였다. 동 결정에 따

라 납북자가족 피해위로금으로 416가족에게 129억 1,400만원(평균 3,100여만원), 귀환납북자 정착금으로 8명에게 15억 2,800만원(평균 1억 9,100만원), 납북과 관련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이자 보상금으로 1명에게 6,800만원이 지급되었다.

2013년 9월 납북자 1명이 추가로 귀환함에 따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으로 2억 4,5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회적응교육도 2개월 간 실시하였다.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단위 : 건/천원)

구 분	신청(건)	지급결정(건)	지급액(천원)
피해위로금	428	416	12,914,573
정착금·주거지원금	9	9	1,773,612
보상금	13	1	67,604
합계	450	426	14,755,789

또한 납북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연말연시 또는 명절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활이 어려운 납북자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들의 아픔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하였으며 생필품과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2013년에는 1월과 4월에 납북자 가족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12월에는 귀환 납북자 6명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④ 6·25전쟁 중 납북자 문제

6·25전쟁 중 납북자 규모는 조사 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 발간 납북자 명부에 따르면 8~1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발간 6·25전쟁 중 납북자 명부】

명 부 명	작성 주체	시기	인원	존재 여부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0년	2,438명	보존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2년	82,959명	보존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1954년	17,940명	보존
실형사민 명부	국방부	1963년	11,700명	일부 보존 ¹⁾

1) 성명별 가나다순으로 구성된 이 명부는 '1번 김○부터 11,700번 이○○'까지만 현존하고 뒷부분은 미상

위 표에 수록된 명부 외에 1952년 1월 4일 국무회의록('6·25사변 피납치자 수에 관한 건')에는 내무부 치안국 조사 결과, 납치자 수는 126,325명(민간인 납치자 36,472명, 강제의용군 73,613명, 비강제의용군 16,240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1952년 3월 공보처 통계국이 발행한 『6.25사변종합피해조사표』에는 납치자 수가 84,53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18대 국회에서 2010년 3월 26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법>)이 공포되어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법〉 주요 내용

-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구성·운영
-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납북여부 심사·결정
- 6·25전쟁 납북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 시·도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보고서 작성 및 대통령·국회 보고 후 공표
-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 추진
- 국가적 책무로서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등

정부는 법률 시행에 따라 2010년 9월 27일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2010년 12월 13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위원 5명을 비롯해 납북가족대표 3명과 전문가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로써 정부 차원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차관)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 사실조사 등을 담당할 「시·도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 1월 3일부터 전국 시·군·구 및 재외공관을 통해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를 시작하였다. 2011년에는 1,034건, 2012년에는 1,623건, 2013년에는 1,167건의 납북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위원회는 증가하는 납북피해 신고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조사인력 추가 투입 및 조사기법·제도개선 등 업무추진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그 결과 2011년 319건에 불과하던 신고접수 건 처리가 2012년에는 929건으로 전년대비 610건이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1,588건으로 전년 대비 659건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2013년 12월 말 현재 2,560명이 6·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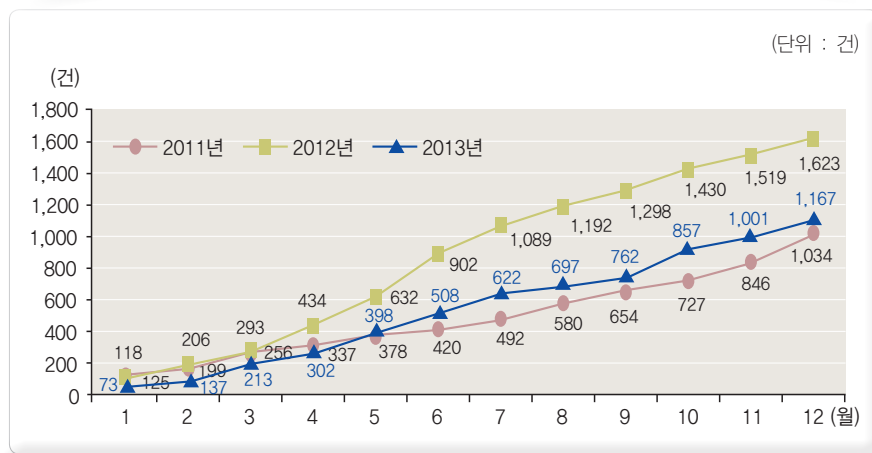
【6·25전쟁 납북자 심의현황】

(단위 : 건)

전체회의	상 정	심의 결과		
		결 정	비결정	판단 불능
3차(2011.8.2.)	55	55	-	-
4차(2011.12.13.)	264	217	28	19
5차(2012.4.5.)	144	120	11	13
6차(2012.6.20.)	386	351	11	24
7차(2012.10.11.)	399	364	7	28
8차(2013.1.14.)	490	467	5	18
9차(2013.5.6.)	463	417	14	32
10차(2013.6.21.)	308	274	8	26
11차(2013.10.15.)	327	295	5	27
계	2,836	2,560 (90.3%)	89 (3.1%)	187 (6.6%)

* 2013년 12월말 기준

【2013년 납북피해 신고접수 현황】



한편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안내 및 전시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지방자치단체 청사, 재래시장, 전국 관광지, 여객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과 TV, 라디오, 신문 및 SNS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미지 전광판(서귀포시)



버스정보 안내기(광명시)

또한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해외대사관 및 영사관에도 포스터, 리플릿,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각 지역별 한인회 및 재외동포 단체 등을 대상으로 납북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



재외공관 포스터 (주카메룬 대사관)



일본 민단관계자 설명회(2013.11.25~30)

이와 함께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6월 24일 KBS 가요무대 “6·25기획”, 7월 27일 KBS 다큐멘터리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등을 방영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6·25전쟁 납북자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3년 하반기에는 판문점 및 철원지역에서

6·25전쟁 납북자가족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6대 광역시 6·25납북피해 사진전, 현장설명회 등도 개최하였다.



6·25전쟁 납북자가족 초청 KBS 가요무대 (2013.6.24)



6·25전쟁 납북자가족 현장체험 (2013.6.7)



6대 광역시 6·25 납북피해 사진전 (2013.6.24~8.31)



대한노인회 경로담당자 설명회 (2013.4.10)

위원회는 납북피해 신고 건에 대한 조사 및 심사 결과와 함께 6·25전쟁 납북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발굴·수집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납북피해 규모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0년 12월 13일 위원회 출범 이후 2013년까지 국내외 기록조사 활동을 통해 2,200여 건의 6·25전쟁 납북 관련 기록을 수집하였다. 국내 기록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록원 등 국내 기록전문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6·25전쟁 납북 관련 문서·간행물 및 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수집

하였다. 또한 6·25전쟁 당시 발행된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중앙 일간지 6종을 대상으로 남북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6·25전쟁 민간인 납북관련 신문기사 자료집 I, II』을 발간하였다. 아울러 전쟁당시 임시수도였던 대구·부산 지역의 3개 지방신문을 대상으로 남북 관련 기사를 수집·정리하는 등 진상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내실있게 축적해 나가고 있다.

국내 기록 발굴·조사와 함께 위원회 출범 이후 해외기록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국가기록보존기관에 대한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현지 출장을 통해 다양한 기록발굴과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을 비롯하여 미국 무부, 미 육군역사연구소, 우드로윌슨센터 등을 방문하여 전시 납북피해 관련 기록을 조사·수집함으로써 진상보고서 집필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의 협조 네트워크 구축으로 납북피해 관련 해외 기록 수집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일본에서는 재일 탈북자 면담을 통하여 납북자의 북한 생활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일본 거주 납북피해 신고인에 대한 증언채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6·25전쟁 납북피해와 관련된 일본기록기관 소장 기록물 조사를 통해 외무성이 편찬한 한국전쟁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또한 중국은 신문기사 수집과 만주지역 6·25전쟁 납북자 수용소에 대한 조사 등 기록물 발굴과 증언채록,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집한 미국 자료에 대한 번역과 해제를 묶어 『6·25전쟁 납북관련 자료집 : 미국편 I』을 발간하였다. 6·25전쟁 납북 피해에 대한 미국 기록의 체계적 정리·분석을 통해 미국 정부와 군의 주요활동 및 상황 파악으로 납북관련 진상규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내실있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

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외 조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수집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기록물의 체계적 기술·정리 및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수집기록 활용방안의 개선을 통해 진상조사보고서 집필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3년도에는 피랍생환자·사건 목격자 등 6·25전쟁 납북 피해 유가족의 증언채록을 통해 생동적이고 입체적인 기록발굴도 추진하였다. 6·25전쟁 납북 피해와 관련된 51개 사건 총 66명에 대한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해 이를 직접 겪은 납북자 가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채록함으로써 문헌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심층적인 납북피해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앞으로도 ‘증언채록집’을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진상조사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6·25전쟁 납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납북자 규모와 기본적인 통계들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발간한 6·25전쟁 피납치자 명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013년에는 피납치자 명부 3종(6·25사변피납치인사명부 2종 및 실향사민소식조사회답서 1종)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입력하여, 지금까지 총 12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2014년에 계획하고 있는 전국의 주요 지역별 실태조사와 진상조사보고서 편찬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13년에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납북자명부 통합DB 구축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납북피해 신고, 심사, 결정에 이르는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정보화하고 시·도 실무위원회와의 업무연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제3절 인도적 지원

① 개요

정부는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입장 하에 국내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분배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하였다.

2013년도에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해 68억원 상당의 물자반출을 승인하여 이 가운데 51억원 상당의 지원물자를 반출하였고, 국제기구를 통해서서는 135억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주요 지원대상은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며, 주요 지원품목은 영양식, 필수 의약품, 기초 소모품 등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정부 차원	당국차원	949	1,221	2,000	1,432			183(72)	-	-	-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02	120	134	216	241	77	21(9)	-	-	-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62	19	139	335	197	217	-	65	23	135
	계	1,313	1,360	2,273	1,983	438	294	204(81)	65	23	135
식량차관		1,359	1,787	-	1,505	-	-	-	-	-	-
계		2,672	3,147	2,273	3,488	438	294	204(81)	65	23	135
민간차원(무상)		1,558	779	709	909	725	377	200(88)	131	118	51
합 계		4,230	3,926	2,982	4,397	1,163	671	404(169)	196	141	186

* '10년 괄호 수치는 '5.24 조치' 이후 실적

②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2013년 총 18개 국내 민간단체에서 자체 재원을 통해 총 51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였다.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해 의약품, 영양식, 의류 등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꼭 필요한 대상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분배투명성 원칙에 따라, 전용우려가 적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물품의 지원에 대해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나눔」, 「국제보건의료지원재단」 등의 단체에서 19개 시군지역 130여개 유치원·탁아소 및 결핵치료시설에 영양식, 의약품, 소모품 등을 지원하였다.

③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013년 8월 유엔아동기금(UNICEF)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604만 달러(67억원 상당)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북한 영유아 35만 명에게 필수백신 5종을 접종하고, 급성 및 중증 영양실조 아동 2만 4천여 명에 대한 치료와 철분 등 미량영양제, 구충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630만 달러(68억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북한 산모의 출산, 신생아 응급처치 등을 위한 의료시설 개선 및 리·군 단위 지역병원에 필수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분만·신생아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개선 및 의료인력 교육, 주요 전염병 등 진단을 위한 의료기반 개선, 항생제 등 기초 의약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④ 분배 투명성 강화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때 취약계층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된다는 인식 하에,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가장 필요한 대상’에게 ‘필요한 물품’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된 물자가 최종 수혜자에게 분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개선해 왔다.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북지원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수혜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지원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7건의 방북이 이루어졌으며, 사업협의를 위한 북한주민 간접접촉은 78건이 이루어졌다. 또한, UNICEF·WHO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도 현장 모니터링 인원과 횟수를 확대하여, 현장 모니터링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⑤ 대북 식량차관 상환 촉구

정부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북한이 식량차관을 상환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북한에 식량차관 상환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2000년에 제공한 식량차관의 1차 원리금(583만 달러) 상환 기일이 2012년 6월에 도래함에 따라 첫 상환촉구를 시작한 이래 2013년 5월과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상환을 촉구했다. 또한, 2013년 6월에 상환 기일이 도래한 2차 원리금(578만 달러)에 대해서는 작년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대북 촉구문을 보냈다.



북한 육아원의 대북지원 물품(영양뽕) 수혜사진(국내 민간단체 지원)

제4절 북한인권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정부도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UN) 등 국제사회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① 국제사회와의 협력

정부는 인권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유엔(UN)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유감 표명 및 북한 당국에 대한 개선조치 촉구 등이 이어져 왔다. 유엔(UN)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06년 유엔(UN) 인권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유엔(UN) 인권이사회도 2008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제63차 유엔(UN)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시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정부는 유엔(UN) 차원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2013년 11월 제68차 유엔(UN) 총회를 포함하여 총 9차례에 걸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결과 및 우리 정부 입장】

구분	유엔(UN) 인권이사회					
연도	2008 (7차)	2009 (10차)	2010 (13차)	2011 (16차)	2012 (19차)	2013 (22차)
표결 결과 (찬:반:기권)	22:7:18	26:6:15	28:5:13	30:3:11	무투표	무투표
우리 입장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공동제안

구분	유엔(UN) 총회									
연도	2005 (60차)	2006 (61차)	2007 (62차)	2008 (63차)	2009 (64차)	2010 (65차)	2011 (66차)	2012 (67차)	2013 (68차)	
표결 결과 (찬:반:기권)	84:22:62	91:21:60	97:23:60	95:24:62	97:19:65	103:18:60	112:16:55	무투표	무투표	
우리 입장	기권	찬성	기권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 제안	공동 제안	

2013년 3월 제22차 유엔(UN)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UN) 차원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설치를 결정하였다. 마이클 커비 등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COI는 2013년간 한국·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탈북자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COI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2013년 11월 제68차 유엔(UN) 총회는 “북한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북한 주민의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 폐쇄를 촉구하고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당국의 노력을 별도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2012년에 비해 강화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3년 제68차 유엔(UN)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요약

<전문>

- 북한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

<본문>

- 북한 내에서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조직적으로 광범위하며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 표명
 - *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고문, 정치범수용소 존재 및 강제노동, 탈북자 강제송환 및 처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인권침해 등
-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다수의 수용소가 존재하는 점에 대해 우려 표명하고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 폐쇄 및 지체없는 수용자 석방을 촉구
-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 존중 및 탈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을 촉구하고 강제 송환된 탈북민의 처우에 관한 북한당국의 정보 제공을 요구
-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활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촉구하고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이후 수락한 권고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 표명
- 강제실종 형태의 납치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 정부가 납치자의 즉각 송환을 포함하여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
-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무산에 유감 표명 및 남북간 상봉 정례화 합의 희망
- 북한의 불안한 인도적 상황과 만성적이고 심각한 영양실조 등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 정부에 국제원조기구들과 협력하면서 예방 및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북한 정부에 대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도록 강력히 촉구
 - * 인권이사회 권고사항 이행, 인권침해자 재판을 통한 처벌, 강제송환 문제 해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인도적 지원 접근권과 모니터링 등
- 제69차 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 검토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북한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조사 결과와 권고를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

② 민간단체와의 공동 노력

정부는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학술행사와 자료 발간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들 단체나 전문가가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활동도 지원하였다. 통일부 등록 북한인권 관련 단체는 26개로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활동영역도 인권교육 활동과 전시회, 공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 실태파악을 위해 「(사)북한인권정보센터」와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매년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국·영문)에 반영되고 있다.

③ <북한인권법> 제정 협력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가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북한인권법>은 제정되지 못하였다.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력해 왔다.

제19대 국회 출범 이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12년에는 6월 1일 윤상현 의원, 6월 15일 황진하 의원, 8월 20일 이인제 의원, 9월 5일 조명철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으며 2013년 3월 29일 심재권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5개의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각 법률안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 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 신설,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제18대 국회에서 심의하던 대안과 거의 같으나, 윤상현 의원안은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를 북한인권재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황진하 의원안은 법무부에, 이인제·조명철 의원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편 심재권 의원과 윤후덕 의원은 2012년 11월 15일과 2013년 7월 25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과 <북한민생인권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제5장 남북대화

제1절 정치분야 회담

제2절 경제분야 회담

제3절 인도분야 회담

05



제5장 남북대화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하여 한편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정부는 대화의 창을 열어둔 가운데 계기마다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동안 남북회담은 정치분야 1회, 경제분야 22회, 인도분야 1회 등 총 24회 개최되었으며, 개성공단문제 협의를 위한 상설 대화채널을 구축하였다.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3월에는 판문점 남북직통전화와 군통신선이 차단되고, 4월에는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북한측 종업원을 철수시킴에 따라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5월에는 개성공단 남측 인원이 전원 귀환함에 따라 남북간 연락채널이 모두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통일부장관 성명(2013.4.11)을 비롯하여 세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정부의 대화 제의는 거부하면서 남측 기업에게 방북을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우리 내부의 갈등을 유도하는 구태를 재현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하였으며, 결국 북한은 우리측의 대화 제의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간 현안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회담」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측 수석대표의 격을 문제 삼아 회담 개최는 무산되었다.

이후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개성공단

관련 회담을 제의(2013.7.4)하였고, 북한이 이에 호응해옴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이후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접촉을 7차례 개최(2013.7.6~8.14)하여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성(2013.9.2)되었고, 산하에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투자보장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또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가 개성공단 현지에 설치(2013.9.30)되었다. 이처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체제가 가동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상설 대화채널이 구축되었다. 이를 토대로 남과 북은 일일단위 상시통행, 인터넷 및 이동전화 제공, 통관절차 간소화, 출입체류 제도 보완 등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였고, 다음 날 정부는 이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이를 수용하면서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도 함께 제의해왔다. 정부는 이산가족문제는 순수 인도적 문제이므로 금강산관광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우선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남과 북은 8월 2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와 10월 화상상봉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한편, 정부는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10월 2일에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상봉 나흘전인 9월 21일, 일방적으로 이산가족상봉행사와 금강산관광 실무회담 연기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산가족상봉행사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1절 정치분야 회담

①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박근혜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2012.12.1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무효선언(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2013.1.23), 제3차 핵실험(2013.2.12), 정전협정 백지화(최고사령부 성명, 3.5), 남북불가침 합의 파기(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3.8) 등 지속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3월말부터 개성공단 마저 폐쇄하겠다고 위협하던 북한은 4월 8일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의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북한측 근로자를 철수시키며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4월 11일 통일부장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 북한이 제기하기를 원하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에도 4월 25일, 5월 14일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당국 회담에 북한이 호응해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이에 북한은 6월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회담을 제의해왔다. 정부는 같은날 북한의 호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당국 회담을 6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북한은 6월 7일 남북당국 회담 전에 실무접촉을 6월 9일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으며, 같은 날 우리측은 실무접촉 개최에 동의하며 개최장소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수

정 제의하였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여 6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측	북 측
수석대표	천해성(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김성혜(조평통 서기국 부장)
대 표	권영양(통일부 과장) 강중우(통일부 과장)	황충성(조평통 서기국 참사) 김명철

6월 9일부터 10일 사이 이루어진 실무접촉에서 남과 북은 6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회담명칭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당초 ‘남북장관급회담’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이 ‘남북당국회담’으로 할 것을 제의함에 따라 ‘남북당국회담’으로하기로 하고, 회담대표단의 규모는 5명, 이동경로는 경의선 육로로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석대표 급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남북 간의 현안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국자인 우리측의 통일부장관과 북한측의 통일전선부장 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북한측은 통일전선부장은 국가기관이 아니며, 상급(장관급) 당국자가 수석대표로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의제와 관련해서 우리측은 고위급회담인 만큼 회담의제를 일일이 열거하기 보다는 6월 6일 정부입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현안 문제’로 포괄적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개성공업지구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문제, 6.15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발표일 공동 기념, 민간단체들의 왕래와 접촉, 협력사업 추진, 그 밖의 현안문제들'을 의제로 제기하면서 6월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제기한 모든 사안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과 북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접촉 8회 등 총 10차례의 접촉을 통해 회담 명칭, 대표단 규모, 이동경로 등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수석대표의 급과 의제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 협의결과를 각각의 발표문 형식으로 각기 발표하였다.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2013.6.9 ~ 6.10)

우리측 발표문

1. 일시 및 장소: 6.12~13 서울
2. 회담명칭은 남북당국회담
3. 회담의제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4. 회담대표단은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고, 남측 수석대표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
5. 북측대표단의 왕래경로 : 경의선 육로
6. 추가적인 실무적 문제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협의

북한측 발표문

3. 회담의제는 개성공업지구정상화문제, 금강산관광재개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문제,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문제, 민간래왕과 접촉, 협력사업추진 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로 함.
 4. 회담대표단은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되, 북측 단장은 상급 당국자로 함.
- * 1~2, 5~6항은 우리측 발표문과 동일

② 남북당국회담의 무산

6월 9일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이후 우리측은 판문점을 통해 관례대로 북한측 대표단 명단을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북한측은 남북한 명단 동시교환을 고집하였다. 남북당국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측이 명단 동시교환을 수용함에 따라 6월 11일 오후 1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과 북은 남북당국회담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였다. 우리측 명단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당국자 5명으로 구성된 것이었으며, 북한

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단장으로 5명의 대표로 구성된 것이었다.

대표단 명단 교환 직후 북한측은 우리측 수석대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측에서 장관급이 나오지 않으면 남북당국회담이 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이에 정부는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 각기 발표한 대로 우리측은 남북 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인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북한측은 자신들이 발표한 당국자를 단장으로 해서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써 엄청난 도발로 간주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하면서 회담 무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당국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정부는 북한측의 일방적인 회담 무산 통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우리측 당국자인 통일부 차관의 격을 문제 삼아 대화까지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 전혀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남북당국회담에 호응해올 것을 촉구하였다.

제2절 경제분야 회담

①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가. 제1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2013년 3월 27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차단하고, 4월 8일에 북한 근로자의 전원 철수와 공단가동 잠정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개성공단이 가동 10년만에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4월 11일과 25일, 5월 1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정상화와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의하였으나, 북한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6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남북 당국회담 의제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이 우리측 수석대표의 급을 이유로 회담을 무산시킴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7월 3일 북한은 장마철 설비·자재 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필요한 협의를 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에 정부가 7월 4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가질 것을 북한에 제의함에 따라 제1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2013년 7월 6일부터 7일까지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제1~2차)】

구 분	남 측	북 측
수석대표	서 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홍진석(통일부 과장) 허진봉(통일부 과장)	허영호(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

우리측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이 가동중단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남북 당국간 합의는 물론 북한의 법규에도 위반되는 행위로서 남북간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발생한 기업 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표명과 함께 재발방지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발전적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장마철을 맞아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완제품과 원부자재, 설비의 반출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측에 반출 및 신변안전 보장과 군통신선의 조속한 복구를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공단 재가동에 역점을 두면서 가동할 수 있는 공장부터 우선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완제품 반출에는 동의하면서도 원부자재와 설비 반출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쌍방은 논의 끝에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개성공단 남북 당국실무회담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제1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2013.7.6)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합의서」 주요 내용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

1.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측 기업 관계자들을 비롯한 해당 인원들이 7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진행
2. 남측 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
3. 설비 점검과 물자 반출 등을 위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의 통행·통신과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
4. 준비되는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며 가동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 회담을 개최

나. 제2~6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제2차 실무회담부터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 재발방지 문제를 포함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관한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7월 10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제2차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은 먼저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과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 개선 등 개성공단

의 발전적 정상화 구상을 설명하고,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수준의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 조치로 인해 공단이 문을 닫는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는 북한측의 일방적인 가동중단조치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함께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은 가동중단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우리측 언론 보도내용과 군사훈련을 언급하면서 개성공단의 정상가동에 저촉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시설장비 점검과 정비를 조기에 끝내고 공단 재가동에 들어갈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제3~7차)】

구 분	남 측	북 측
수석대표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홍진석(통일부 과장) 허진봉(통일부 과장)	황충성(조평통 서기국 참사)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

* 우리측 수석대표(서호 → 김기웅) 및 북한측 대표(허영호 → 황충성) 교체

이후 개최된 3차례(7월 15일, 7월 17일, 7월 22일) 회담에서 남과 북은 신변안전 보장과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통행·통신·통관 문제의 해결,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보장 등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켰다. 또한 상기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가동중단의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 보장, 재가동 일정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제3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2013.7.15)

이후 3일 만에 열린 제6차 회담에서 북한측은 우리측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가동중단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동 중단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제시한 합의서안을 가지고는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고 보고, 회담을 마무리하고 차기 회담 일정을 잡을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의 이러한 제안을 ‘회담결렬’이라고 반발하면서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제6차 회담도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쌍방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진전 없이 종료되었다.

한편 북한측은 종결회의 직후 우리측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측 기사실에 난입하여 우리측 취재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강행하였다. 우리측은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이러한 북한측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수석대표 브리핑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제6차 회담에서 북한측이 사실상 회담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남과 북은 차기회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다.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정부는 7월 28일 통일부장관 성명을 통해 정치·군사적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북한이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음을 천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북한측에 회담을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은 8월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조치 해제와 출입 전면 허용, 북한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신변안전 및 재산의 철저한 보호, 중단사태 재발방지 및 정상운영 보장 등을 밝히면서 8월 14일 제7차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8월 8일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북한측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2013년 8월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제7차 실무회담에서 남과 북은 그동안 여섯 차례의 회담을 통해 입장차이가 컸던 재발방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였으며,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하였다. 우리측은 1차 전체회의에서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재발방지 보장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를 위한 조치들을 설명하였다. 북한측은 8월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 내용을 중심으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양측은 세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우리측 수정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재발방지 보장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등 5개 항에 합의하고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주요 내용

남과 북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적 운영 보장
2. 신변안전 보장, 투자자산 보호, 통행·통신·통관문제 해결
3.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 보장,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
4.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 설치
5. 출입·체류 및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업들의 재가동을 위해 적극 노력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2013.8.14)

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합의에 따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였다. 남과 북은 8월 28일 합의서를 체결하고, 8월 29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합의서 서명본을 교환하였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주요 내용

1. 공동위원회는 남북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
2. 공동위원회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사이의 합의사항 이행을 총괄, 산하 분과위원회 활동 조정
3. 공동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
4. 공동위원회 산하에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5.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운영

한편 우리측은 8월 28일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2013.10.4 통일부 직제 개편으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이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으로 변경)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9월 2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8월 29일 북한측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이에 동의해 옴에 따라 9월 2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제1~3차)】

구분	남 측	북 측
수석대표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표	홍진석(통일부 과장) 허진봉(통일부 과장) 박병귀(기획재정부 팀장) 전제구(산업통상자원부 팀장)	류창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 황충성(조평통 서기국 참사) 황정무(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참사)

우리측은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군 통신선이 복구되고 기반시설이 정비되는 한편, 제도적 장치 보완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구상을 설명하면서 제도개선, 피해보상, 공단 재가동, 상설사무처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은 공단 재가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분과위원회 일정과 의제, 공단 재가동 등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남과 북은 차기 공동위원회와 산하 분과위원회 개최 일정에 합의하고, 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문제 등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2013.9.2)

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가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11일 까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제2차 회의에서는 9월 4일과 9월 5일에 개최된 공동위원회 산하 4개 분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일일단위 상시통행 실시를 위한 전자출입체계 도입, 공동투자설명회 개최, 기업 피해 보상 문제 등에 협의를 도출하고 이를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채택하였다.

공동발표문 주요 내용

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9월중 사무처 가동
2. 「개성공단에서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체결
3. 금년내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하여 일일단위 상시통행 실시, 인터넷·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 협의
4. 남측 지역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 대상, 투자설명회를 10월중 개성에서 개최
5. 출입체류 관련 부속합의서 교환, 동 문제를 계속 협의·해결
6.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납부하는 2013년 세금을 면제, 올해 4월부터 발생한 근로자 임금은 총국-관리위가 협의 처리
7. 9월 16일부터 기업 재가동
8. 분과위를 9월 13일에, 공동위를 9월 16일에 개최

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가 2013년 9월 16일 개성공단 종합

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남과 북은 공동위원장 접촉과 출입체류 분과위원장 접촉을 병행하면서 출입체류 부속합의서, 전자출입체계 구축 방안과 추진일정, 공동투자설명회, 상설사무처 개소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를 위한 실무협의를 9월 24일 개최하고, 공동투자설명회는 10월 31일 개성공단에서 열기로 하며, 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 일정은 분과위원회 협의 결과를 보고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

2013년 12월 12일 북한측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를 12월 19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자는 통지문을 전달해왔다. 12월 13일 우리측이 북한측의 제안에 동의함에 따라 2013년 12월 1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제4차)】

구 분	남 측	북 측
수석대표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홍진석(통일부 과장) 허진봉(통일부 과장) 나원창(기획재정부 과장) 전제구(산업통상자원부 팀장)	류창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 황충성(조평통 서기국 참사) 황정무(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참사)

* 우리측 대표(박병귀 → 나원창) 교체

남과 북은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 재가동 이후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들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전자

출입체계 공사의 완료를 통한 일일단위 상시통행 실시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 등 3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북한측에 촉구하였다. 또한 출입체류 부속 합의서 체결과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였다. 우리측은 또한 10월말로 예정되었다가 연기된 공동투자설명회를 2014년 1월말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측도 전자출입체계 공사와 통관 현장방문 등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평가하면서, 노무·임금 등 관리운영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남과 북은 또한 인터넷 제공 방식, 출입체류 부속합의서 채택, 노무·임금 등 관리운영 문제 등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3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가.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이다.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는 2013년 9월 5일, 9월 13일, 11월 29일 세 차례 개최되었다.

9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남과 북은 전자출입체계 구축을 통한 일일단위 상시통행 실시,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선별검사, 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첫 조치로서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9월 6일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오전 9시에 시험통화를 하기로 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측	북 측
위원장	홍진석 (통일부 과장)	리선권 (인민군 대좌)
위 원	최인용(국방부 단장) 심훈보(통일부 과장) 남승현(국방부 중령) 박태희(미래창조과학부 사무관)	림룡문(인민군 상좌) 장비수(인민군 상좌) 홍석일(인민군 상좌) 리영민(인민군 중좌)

9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남과 북은 전자출입체계 구축방안, 인터넷 및 이동전화 제공문제, 선별검사 등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전자출입체계 구축 이전이라도 기업인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당일 지연 입출경을 허용해 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북한측은 9월 16일부터 지정 시간대에 통행하지 못한 인원이 북한측 통행 검사소에 통지하는 경우 벌금 부과 없이 다른 시간대에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인원과 차량의 동시 검사로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개인이 소량으로 반입하는 휴대품의 경우 구두신고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측은 11월 6일 우리 공동위원장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공동위원회와 산하 분과위원회들을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의 거부로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는 열리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11월 25일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조속히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재차 촉구하였고, 북한측이 우리측 제안에 동의해 옴에 따라 11월 29일 제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협의 결과 남과 북은 12월 첫째 주부터 무선주파수기술(RFID)를 활용한 전자출입체계 공사를 시작하고, 북한측 통관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인터넷 연결 등을 위한 통신 및 군통신 분야 실무 협의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문제들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12월 6일 개최된 통신 분야 실무협약에서 남과 북은 인터넷 연결방식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출입체류 분과위원회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인원 및 수송수단의 출입과 체류의 편의,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하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이다.

출입체류 분과위원회는 2013년 9월 5일, 9월 13일, 9월 26일, 11월 14일 네 차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측	북 측
위원장	허진봉 (통일부 과장)	리창일 (개성공업지구 출입국사업부 과장)
위 원	신혜성(통일부 서기관) 최원연(통일부 사무관) 장소영(법무부 검사)	배봉국(개성공업지구 출입국사업부 과장) 오한철(개성공업지구 출입국사업부 지도원) 황성호(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참사)

9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2004.1.29 체결, 2005.8.1 발효)에 규정되어 있는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기본권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부속합의서의 체결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부속합의서안을 제시하면서 신변 보장과 조사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북한측도 부속합의서 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북한측의 부속합의서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진행된 3차례(9월 13일, 9월 26일, 11월 6일)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에서는 쌍방이 제시한 부속합의서안에 대해 집중 조율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위법행위 발생시 입회 등 조사 방법 및 통지 절차, 조사시 보장되는 기본권 내용, 그리고 위법 행위 예방 대책 등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측이 부속합의서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상사분쟁 문제들과 노무·세무·임금·보험·환경보호를 비롯하여 개성공단의 관리운영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이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는 2013년 9월 4일과 11월 13일 두 차례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측	북 측
위원장	박병귀 (기획재정부 과장)	류창만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위 원	이상규(국무조정실 과장) 이혜련(통일부 사무관) 고승진(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이창주(고용노동부 사무관)	오광욱(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참사) 김동일(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참사)

9월 4일 제1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와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중재기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제1차 회의 이후 9월 10일 개최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에 위한 부속합의서」가 타결되었다.

이로부터 약 한 달 뒤인 11월 13일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제2차 회의에서는 상기 합의서 이행문제가 협의되어 3개월 내인 12월 11일까지 쌍방 상사중재위원 명부를 교환하고, 6개월 내인 2014년 3월 11일까지 중재인 명부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우리측은 근로자 부족과 세금세칙 문제 등을 제기하였고, 북한측은 임금 체불과 기업 회계투명성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라.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외국기업의 유치, 해외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개성공단 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이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는 2013년 9월 4일과 11월 13일 두 차례 개최되었다.

9월 4일 제1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외국 기업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투자 안정성이 보장되고 국제적 수준이 기업 경영환경이 구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간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측	북 측
위원장	전제구 (산업통상자원부 팀장)	원용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
위 원	박상규(통일부 과장) 여소영(외교부 서기관) 조혜실(통일부 사무관) 김정애(기획재정부 사무관)	전광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참사) 렴태봉(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참사)

의 역외 가공지역 인정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임금 직불제도 도입과 노동환경 개선 등 북한측의 노력도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북한측은 개성공단의 각종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 동의를 표하면서,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지원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서울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대해 북한측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쌍방은 동 사안을 9월 10일 개최될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발표문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1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도 남과 북은 공동투자설명회 개최와 해외공동시찰 등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특히 3통과 출입체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나 역외 가공지역 인정 같은 국제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북한측에 강조하였다. 남과 북은 차기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제3절 인도분야 회담

①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추석을 전후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측에 제안하였다. 8월 1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한에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하였고, 북한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2010년 10월 남북적십자회담 이후 약 3년만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2013년 8월 23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측	북 측
수석 대표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대표	김성근(대한적십자사 국장) 송혜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김영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조정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부장)

우리측은 보다 많은 이산가족들에게 상봉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북한측에 제시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100가족에서 200가족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금강산이 아닌 서울과 평양을 교환방문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추석 전에 화상상봉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매년

3회 이상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매월 500명 규모의 생사 및 주소 확인, 매월 1,000명 규모의 서신 교환 등 실천적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지속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 대상자를 확대하여 이들의 상봉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우리측 제의에 대해 북한측은 기존 관례대로 남북 각각 100명씩 금강산에서 상봉행사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우리측이 제의한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는 적십자 본회답이 아닌 실무접촉에서 다루기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논의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두 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다섯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남과 북은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 등 4개 항의 합의서를 도출하였다. 이산가족상봉행사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하고 그 규모는 남북 각각 100가족씩 하기로 하였으며,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 규모는 기존 20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추석계기 상봉 행사가 끝난 후 11월중에 한차례 더 이산가족상봉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갖는 데에도 합의 하였다. 화상상봉은 추석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상봉행사를 불과 나흘 앞둔 9월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연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3년만의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되었다.

합의서 요지

1.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 실시
 - 9.25-30,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 행사
 - 생사확인의회서(8.29)· 회보서(9.13)· 최종명단(9.16) 교환
 - * 의뢰서 규모는 남과 북이 200명~250명 각기 편리한 대로 진행
2. 화상상봉 행사는 10.22-23 남북이 각각 40명씩 실시
3. 11월 중 이산가족상봉행사 한 차례 더 진행, 이를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개최
4.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서신교환 실시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



남북적십자 실무접촉(2013.8.23)





제6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1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제2절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정착지원

06

나원-국립결핵병원(마산·목포),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협약 체결

일시 | 2013. 9. 30(월) | 주최 | 통일부 하나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제6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8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탈북 여건의 악화 등의 원인으로 감소하였다. 2013년에는 총 1,516명이 입국하였으며, 2013년 12월 말까지 총 2만 6,12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다.

탈북여성의 입국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탈북남성을 추월하여 2013년까지 총 입국인원 중 약 70%에 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단위 : 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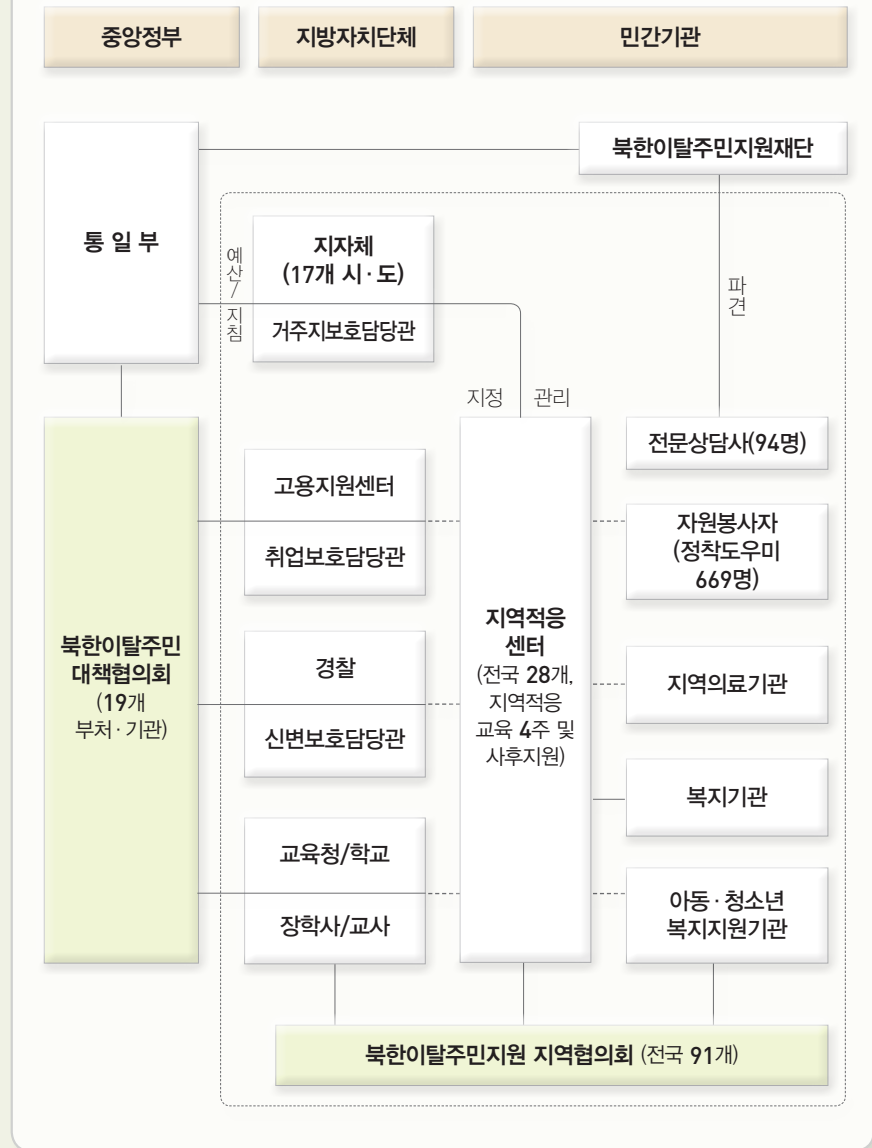
연도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71	7,949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8,175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6	26,124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3	76	70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단이주민 중 하나로 보고 이들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의 보호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이들을 전원 받아들이는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 또한 국내 입국 후에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선을 맞추어 준다는 의미에서 각종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세스】

-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 보호요청시 관계 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 합동신문**
 - 입국 후 국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신문
 -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 보호결정**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 하나원**
 - 사회적응교육(12주, 392시간)
 -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기초 직업훈련 등
 - 가족관계등록, 주거알선 후 거주지 전입
- 거주지 보호 (5년)**
 - 취업지원 : 직업훈련,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 등
 - 교육지원 : 특례 신·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례 적용(사회보장)
 - 보호담당관제 : 거주지(지자체) · 취업(고용센터) · 신변보호(경찰)
 - 민간협력체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91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 민간참여**
 - 지역적응센터 지정 · 운영(28개)
 - 거주지 적응교육, 심리 · 진로상담, 생활정보제공 등
 -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정착도우미 운영(669명)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94명)
 - 전문적 상담서비스 제공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제1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① 사회적응 기본교육 프로그램 개편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하나원」은 1999년 7월에 경기도 안성시에 개원한 「하나원」 본원과 2012년 12월에 강원도 화천군에서 개원한 「하나원」 분소가 있다.

사회적응 기본교육은 대한민국 민주시민으로서 기초소양을 기르고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정서 안정 및 문화적 이질감 해소와 함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동기부여를 교육목표로 ①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② 우리 사회 이해 증진 ③ 진로지도·직업탐색 ④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 과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정규프로그램 외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 「자율 참여형 보충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선택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4월에는 제12차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제12차 프로그램은 제11차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보완하여 △남녀 취업여건을 고려한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의 차별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사회 이해 증진 강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장체험 교육을 중심으로 확대한 것이다.

【하나원 사회적교육 정규 프로그램】

교육목표 : 정서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부여



자율 참여형 보충 프로그램 운전면허, 컴퓨터, 회계기초, 간병인 과정 등(257시간)

2 초기 직업교육 및 진로설계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진로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교육에 적용하고 있다.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육생은 2011년 1,804명, 2012년 1,142명, 2013년 1,334명이다.

2012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의욕 고취에 중점을 두고 각자의 진로를 설계 해 주는 인생설계, 대인관계 기술, 취업의 걸림돌 극복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희망찾기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하나원」은 교육생의 성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6월부터 여성 교육생의 경우, 다양한 직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2개 직종을 1일 1직종씩 체험하는 직업탐색식 교육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성 교육생의 경우, 3가지 직종 중에서 본인이 택한 한 가지 직종에 대해 「하나원」 교육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하나원 직업훈련 실적】

(단위 : 명)

구분	수료 인원		
	2011년	2012년	2013년
여성	1,351	1,002	843
남성	546	361	254
계	1,897	1,363	1,097

* 여성의 경우 기초조립(품질관리), 사무행정, 사회복지, 여행가이드, 간호조무사, 플로리스트, 한식조리(서비스), 제과제빵, 미용(네일아트), 바리스타, 봉제, 홈패션(장신구) 등 12개 직종

* 남성 대상으로는 「중장비(지게차)」「자동차정비」「용접」등 3개 과정



직업탐색식 직업교육(봉제)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매월 1회씩 「중소기업과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중소기업체 인사담당자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고 채용 면접을 보며, 이를 통해 직장생활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현장에서 직접 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이 행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탐방」을 실시하여 우리의 직장문화와 중소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중소기업과 만남의 장」에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

까지 총 5,546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였으며, 기업체 채용 면접에 합격하여 북한이탈주민 채용안내장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총 2,372명이다.



북한이탈주민과 중소기업 만남의 장

③ 아동·청소년 교육

「하나원」 내 「하나돌학교」에서는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 및 학력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돌학교」는 영아반 1개, 유치반 1개, 초등반 2개(저학년·고학년반), 청소년반 3개 등으로 분반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아반에서는 임신부 및 영아 관리를 위해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영아 보모 및 보육전문가를 채용하여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치반 아동들은 「하나원」 인근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일반 유치원생들과 함께 종일반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병설유치원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하나돌학교」에서 동화읽기, 쌓기놀이, 역할놀이 등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놀이와 방과후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초등반 아동들의 경우에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남한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하교 이후에는 「하나돌학교」에서 기본 교과목 보충 수업과 예체능 수업 등의 방과 후 교육을 받는다. 격주 토요일에는 자원봉사 단체의 협조로 각각 예체능 활동과 축구교실 등의 주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반은 전일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시·도교육청 파견교사 8명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상담사 3명, 그리고 자체 강사 1명 등 총 12명의 교사·강사가 청소년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반 정규 프로그램은 12주 총 392시간으로 편성되는데, 「기초학력증진 및 학력결손 보충」이 209시간(53%), 「우리 사회 및 학교의 이해」가 90시간(23%),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이 78시간(20%), 「진학·진로 탐색 및 설계」가 15시간(4%)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 1일 2시간씩 정보화 교육, 방송댄스 등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매주 토요일에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주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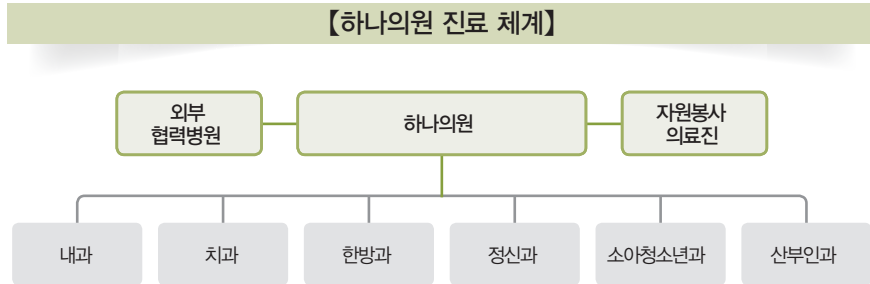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청소년 교육생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영아반	2	4	8	18	8	18	17	28	22	32	36	86	62	46	57	444
유치반	0	6	12	14	18	24	14	19	53	54	63	70	69	42	37	495
초등반	3	34	38	68	74	139	74	97	104	107	142	118	179	124	98	1,399
청소년반	2	7	65	132	97	160	111	169	232	276	220	193	198	113	106	2,081

④ 초기 건강관리

「하나원」내 「하나의원」에는 공중보건 의사 등 의료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초기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현재「하나원」본원에는 내과, 치과, 한방과, 산부인과, 정신과, 소아청소년과 등 6개, 「하나원」 분소에는 내과, 치과, 한방과, 정신과 등 4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분소 하나 의원은 「운전면허적성검사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남성교육생의 운전면허 신체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이「하나원」 교육 중에는 물론 수료 후에도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협력체계 구축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3년도는 북한이탈주민 결핵진단 및 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결핵관리를 강화하였다. 하나원 수료전 결핵 재검진을 실시하여 유소견자는 치료를 받고 퇴소시킴으로써 거주지에서 건강한 정착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퇴소 교육생 중 후원을 희망하는 결핵환자를 위해 '복십자후원회'와 연계하여 치료를 완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내성, 다제내성 환자가 장기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결핵전문병원인 국립마산병원(9.30), 국립목포병원(9.30)과 의료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나원」은 2013년 12월 현재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포함 총 52개 협력 병원을 확보하였다.



하나원-협력병원 간 의료지원 협약 체결(2013.9.30)

「하나원」 심리상담실에서는 5명의 심리상담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안정 교육프로그램 등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인반의 경우,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마음나누기:대인관계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과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상담은 심리적 개입이 필요한 교육생을 조기 선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 검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 심리치료 조기개입 및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심리상태 변화정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심리검사에 의한 식별상담 뿐 아니라 교육생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함」을 활용하고 있으며 총 심리상담 중 60% 이상이 신청 상담으로, 자발적 상담이 비자발적 상담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집단상담(마음나누기:대인관계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은 자기성격 이해 및 공감대화법 익히기를 목표로 외부강사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심리교육 프로그램은 자기성

격 이해, 스트레스 관리, 행복한 삶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정신·심리적 이해와 관리,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소년반의 경우,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마음나누기)프로그램과 자존감 향상 심리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경로반에 대해서는 필수 공통 프로그램은 성인반과 함께 이수하고 별도의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음악 치료 등을 통해 치매예방과 노년기의 바람직한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연도별 개인 심리상담 및 검사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개인 심리상담	261	247	678	646	1,044	1,035
개인 심리검사	19	17	36	19	84	111

5 제2하나원(「하나원」 분소) 의 기초사회적응교육 및 심화·직무교육

「제2하나원」은 기본적으로 국내 입국한 성인 남성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안성 본원과 같이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사회 이해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정착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남한 사회 내 조기정착에 유용한 우리말 적응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직업훈련교육은 한국폴리텍3대학 춘천캠퍼스와 협조하여 자동차정비, 용접, 중장비(지게차) 운전 등 3개 직종을 단기집중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화천한옥학교, 춘천고용센터, 농업과학관, 한일전기, 유성화학 등 다양한 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현장학습과 견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화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재북 경력을 활용하거나,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 직업전환,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요양보호사, 직업상담사, 탈북민 공무원 과정 등 5개 심화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144명이 수료하였다. 특히 요양보호사 과정은 안성 본원의 요양보호사 기초직업훈련(74시간)과 연계하여 시험자격에 필요한 나머지 시간(166시간)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수료생 44명중 38명이 자격증을 취득(86%)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정착지원 관계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착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호담당관, 사회복지담당관, 탈북학생담임교사, 하나센터 관계자, 지역협의회 관계자, 중소기업인, 탈북민공무원 멘토 등 정착지원관계자 직무교육 7개 과정을 운영하여 317명이 수료하였다. 그동안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초사회적응교육(12주)만 실시하였으나, 심화·직무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재교육과 정착지원 관계자 교육 등 교육체계를 마련하였다.

【2013년 심화·직무교육 운영 실적】

구분	과정명	기간	인원	비고	
심화교육 (수료 탈북민)	의사 직업전환	3.25 ~ 12.27	12	의사국가고시 준비 지원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1기	7.29 ~ 8.9	13	탈북민 학생 지도능력 향상
		2기	12.16 ~ 12.20	18	
	요양보호사	1기	1.21 ~ 2.28	19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지원 자격증취득 : (1기)18명, (2기)13명, (3기) 7명
		2기	5.6 ~ 6.14	17	
		3기	9.2 ~ 10.18	8	
	직업상담사	10.14 ~ 12.6	13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 지원	
	탈북민 공무원	1기	11.13 ~ 11.15	29	정부내 탈북민 공직자 기본소양 교육
2기		11.10 ~ 11.22	12		

구분	과정명	기간	인원	비고	
직무교육 (정착지원 관계자)	보호담당관	1기	4.16 ~ 4.19	35	신변보호 249개 경찰서, 거주지 보호 229개 기관, 취업보호 54개 기관, 보호담당자 탈북민 이해제고
		2기	4.30 ~ 5. 3	30	
		3기	5.21 ~ 5.24	35	
	사회복지담당관	1기	10.15 ~ 10.18	19	지자체 사회복지담당자의 탈북민 이해 제고
		2기	10.29 ~ 11. 1	30	
	탈북학생 담임교사		8. 5 ~ 8. 9	34	탈북학생 이해 제고
	탈북민 공무원 멘토	1기	9.26 ~ 9.27	23	탈북민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는 멘토 능력 향상
		2기	10. 1 ~ 10. 2	15	
		3기	10.10 ~ 10.11	19	
	하나센터 관계자		4.10 ~ 4.12	32	지역정착 관계자 업무능력 향상
지역협의회 관계자		3. 6 ~ 3. 8	27		
중소기업인 워크숍		6.20 ~ 6.21	18	탈북민근로자에 대한 이해 제고	
합 계			458		

제2절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정착지원

박근혜정부는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착지원」에 정착지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청소년 등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거주지 밀착형 적응 지원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정착지원을 위한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박근혜 대통령 발언

-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이 되어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이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정착 단계에 따라 개인 필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13.3. 통일부 업무보고)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케이스가 자꾸 나오면서 탈북주민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13.4. 국무회의)

① 초기 정착지원

(1)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및 주택알선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

며 살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과 주민등록신고 지원을 하고 있다. 가족관계 등록부가 창설되고 북한이탈주민은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신분 확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하나원」은 2007년 6월부터 전국 시·도별로 주민등록 기준지 22여 개를 지정하여 교육생이 수료 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하나원」 수료 후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택한 거주지에 주택을 배정받아 입주하게 된다. 통일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 지역도시공사 등과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하게 주택을 배정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를 결정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먼저 입국한 가족의 거주지를 고려하지만 지역별로 알선 가능한 주택의 상황도 감안하여 추천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주택 알선 현황】

(단위 : 세대)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세대 수	2,182	1,681	1,837	1,815	1,320	1,027	9,862

(2) 정착금 지원제도

정착기본금은 세대를 단위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하나원」 수료 직후 초기 지급금을 지급하고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인 세대의 경우 기본금은 총 700만 원이며, 초기 지급금이 400만 원, 분할 지급금이 300만 원이다. 기본금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00만 원이었으나 2013년부터는 사회 편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해 7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기본금 지급기준】

(단위 : 만 원)

세대원수	기본금		주거지원금	합계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1인	400	300	1,300	2,000
2인	500	700	1,700	2,900
3인	600	1,000	1,700	3,300
4인	700	1,300	1,700	3,700
5인	800	1,600	2,000	4,400
6인	900	1,900	2,000	4,800
7인 이상	1,000	2,200	2,000	5,200

【기본금 지급현황】

(단위 : 명/백만 원)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인원(명)	3,005	2,321	2,435	2,417	1,524	1,307	13,009
기본금 (백만 원)	30,068	18,918	13,932	13,815	12,167	9,173	98,073

【가산금 지급기준】

구분	기준	금액
연령 가산금	만 60세 이상	720만 원
장애 가산금	장애등급별	1,540만 원(1급), 1,080만 원(2~3급), 360만 원(4~5급)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개월 X 80만 원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 가산금	만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한 부모가정	360만 원

정착가산금은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령(보호여부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가정 아동보호를 위하여 지급한다.

동일인에게 중복의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하나의 사유만을 인정하고, 동일 세대에 대한 가산금 총 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이내이며, 기본금 지급 종료 후 남은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산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가산금	장애인	34,107	54,212	66,350	49,911
	연령	29,965	75,236	84,178	84,903	67,108	794,613
	한 부모가정 아동보호	15,963	39,124	48,518	58,709	56,758	717,332
	장기치료	560	720	4,280	4,000	5,680	40,000
계		80,595	169,292	203,326	197,523	161,015	1,795,404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혹은 취업 후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취업장려금은 2005년 장려금 제도가 신설될 당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7년에 450만 원, 2009년에 5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였고, 2013년 부터는 수도권 취업자와 지방 취업자의 금액을 차등 지급하여, 지방취업을 장려함으로써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정상적인 취업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한 후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정의 직업훈련을 꾸준히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에 성공한 후 고용을 유지한다면 최고 2,51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장려금 수혜 인원과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장려금 수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초기 취업활동이 활발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 지급기준】

(단위 : 만 원)

구분	기준	금액
직업훈련장려금	500시간 이하	미지급
	500시간	120
	500~740시간	120~160 (120시간당 20)
*직업훈련 추가장려금	1년 과정, 우선선정직종	200
자격취득장려금	1회 한정	200
취업장려금	1년차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수도권)450 (지방)550
	2년차	신청 시 지방 250, (수도권)550 (지방)650
	3년차	수도권 200 지급 (수도권)650 (지방)750
	총액	(수도권)2,210 (지방)2,510

* 2013.4.30 이후 사회진출자 적용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만 원/명)

연도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우선선정직종	취업장려금	총액
2008	62,940 (506명)	69,040 (345명)	18,800 (94명)	89,100 (196명)	239,880 (1,141명)
2009	88,400 (681명)	104,000 (520명)	21,800 (109명)	296,900 (646명)	511,100 (1,956명)
2010	150,000 (985명)	171,200 (856명)	65,000 (325명)	668,600 (1,325명)	1,054,800 (3,491명)
2011	118,100 (726명)	163,800 (819명)	70,400 (352명)	1,181,300 (2,406명)	1,533,600 (4,303명)
2012	191,600 (1,118명)	294,400 (1,472명)	99,200 (496명)	1,720,380 (3,455명)	2,305,580 (6,541명)
2013	1,221 (774명)	1,904 (952명)	532 (266명)	16,608 (3,304명)	20,265 (5,296명)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급여의 1/2을 1년차에는 월 50만 원 한도, 2~3년차에는 월 70만 원 한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단위 : 개/명/만 원)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업체수(개)		888	1,151	1,419	1,717	2,915	2,824	10,914
인원(명)		1,111	1,489	1,963	2,565	3,976	4,206	15,310
지급액(만 원)		349,457	634,900	973,300	1,313,209	1,533,482	1,574,200	6,378,548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단속 현황】

(단위 : 만 원/%)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급액(만 원)		888개 업체 349,457	1,151개 업체 634,900	1,419개 업체 973,300	1,717개 업체 1,313,209	2,915개 업체 1,533,482	2,824개 업체 1,574,200
부정수급액(만 원)		4개 업체 5,975	2개 업체 5,000	9개 업체 4,574	24개 업체 8,388	7개 업체 7,678	3개 업체 5,340
부정수급률(%)		1.7	0.8	0.5	0.6	0.5	0.3%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은 주택 임대료에 필요한 보증금을 지원받는데, 세대를 단위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책정된 주거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지급받고 남은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받는다.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이내라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주거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명/백만 원)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인원(명)		3,005	2,321	2,435	2,417	1,524	1,307	13,009
주거지원금(백만 원)		20,267	19,526	24,069	26,997	25,516	21,454	137,829

북한이탈주민은 취업과 교육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수도권에 약 65% 정도의 인원이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전국 각지의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방거주 및 지방취업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거주 장려금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시 및 그 외의 지역으로 첫 거주지를 택하여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주거지원금의 10~20%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방취업 장려금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시 및 그 외의 지역 소재의 기업에 취업한 경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방거주 장려금 지급현황】

(단위 : 명/백만 원)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인원(명)		1,981	2,964	1,126	369	744	752	7,936
지급액(백만 원)		1,499	4,908	1,673	805	2,323	1,806	13,014

북한이탈주민은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진학하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졸업할 때까지 해당 학교에서 면제받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학 등에 진학하면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 동안 국·공립 대학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전액을 면제받는다.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가 해당 학교에 반액을 보조하고 나머지 반액은 대부분 해당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학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다만,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 미만인 경우 교육비 보조를 하지 않도록 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사립대학 교육지원 현황】

(단위: 개/명/백만 원)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학수(개)	120	136	156	157	183	200
지급 인원(명)	537	708	952	1,334	1,570	1,704
지급액(백만 원)	1,530	1,930	2,352	3,158	3,294	3,747

② 거주지에서의 보호 및 지원

「하나원」을 수료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한 거주지에 임대주택을 알선받아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지방자치단체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지역적응센터, 민간 자원봉사자인 정착도우미, 3중 보호담당관(거주지보호담당관·신변보호담당관·취업보호담당관)과 그 밖의 지역 민간 복지·종교·봉사 시설과 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3중 보호담당관과 복지관,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를 파

악하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회의체이다. 2001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협의회가 최초로 구성된 이후, 2013년 12월 현재 92개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이 중 47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할 뿐만 아니라 정착지원과 관련된 지역 내 각종 사업을 공유, 심의함으로써 중복이나 과다 또는 과소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 민관협력 네트워크이다.

(2)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한 직후 4주간의 초기 집중교육과 개인별 맞춤형 사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009년 서울, 경기(2), 대전, 대구, 광주 등 총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전국 16개 시도 30여곳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지난 3년간의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영 역량이 현저히 낮거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센터 및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단체 재공모 및 통합운영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2013년에는 전국 16개 시도 32개(지부 4개 포함) 센터가 운영 중이며, 지역밀착형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기집중교육기간 확대(기존 3주 → 4주) 및 1년간의 사후지원 제한을 폐지하였다. 2014년에는 하나센터를 통해 취업·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2013년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설치 지역】

(단위 : 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경북	경남	광주
개수	4	6	2	2(+1)	1(+1)	2	1(+1)	2
지역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충북	전북	전남	제주
개수	1	1	1	1	1(+1)	1	1	1

* ()는 지소를 의미

【하나센터 지역적응 교육 내용】



(3) 보호담당관

지역사회에 갓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 경찰서에 신변보호담당관,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고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전입신고, 주민등록 외에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 사회복지제도 편입을 도와주고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담당한다. 신변보호담당관은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하여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의 고용센터에 전문 직업상담사로 지정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등 특별제도를 활용하여 진로 상담 및 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진행하고 있다.

③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 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있어 핵심은 일자리라는 점에서, 취업 확대 및 장기 근속유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증진과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낮은 북한이탈주민의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2013년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행으로 북한이탈주민과 귀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임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 고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직업훈련개발계좌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계좌로 지급된 직업훈련비 한도(20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직업훈련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전용반으로 개설된 직업훈련과정에 참가할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부담 없이도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별 상담을 통해 자신의 취업역량 등을 정확히 진단받고 진로상

답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을 추천받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직업훈련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부담 없이 수강이 가능하며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 축하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역량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재단에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부산, 대구, 광주·전남, 충남지역에 취업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 소자본 창업지원 및 영농정착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였다.

「취업지원센터」는 2012년 3월에 개소되어, 북한이탈주민 1 : 1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 구직자 등록 등 체계적인 DB관리, 취업교육 및 이동취업상담 등 구직자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취업지원센터 알선 및 채용실적】

(단위 : 건)

구분	구직등록	취업상담	구인등록	알선	취업	동행면접
누계	1606	18,468	1695	1,421	528	330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총 직원의 30% 이상으로 채용하였거나 이를 약정한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직접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총 4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

을 신규로 받았으며, 2011년과 2012년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에서 총 22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대차미소금융재단」·「신나는조합」 등과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영농희망자에 대해 영농교육, 농지와 하우스 등의 임차지원, 판로 확대 컨설팅 등 영농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 사이에 영농정착모델을 확산시키고 있다.

(3)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활성화

2013년 2월 북한이탈주민 정부내 활용계획에 근거하여 2013년 채용목표인 161명이 2013년 6월말 현재로 달성되었다. 채용된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2013년 4월에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었고, 2013년 3월에는 공무원임용령이 개정 시행되어 북한이탈주민과 귀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임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 바, 향후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④ 미래 통일인재 육성을 위한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2013년에는 탈북청소년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학교와 지역에 가정-학교-지역 연계지원을 위해 「탈북청소년 전담 코디네이터」를 15명 선발하여 배치하여 탈북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정규학교 내의 보살핌 외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가정에서의

교육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 지원, 영어교육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어화상교육 지원, 중·고생 149명, 대학(원)생 261명 등 총 438명에게 약 5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검정고시 합격생(23명)과 마이스티고교 재학생(5명)을 대상으로 장학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현대차정몽구재단」의 하늘꿈 학교 교사 건축기공식(2013.10.23)



탈북청소년 대학입시 박람회(2013.6.26)

한편 연령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 밖에서 교육받고 있는 탈북청소년을 위해 8개 민간 대안교육시설에 8억 원, 각 지역에 분포해 있는 24개 방과후 공부방 시설에 약 11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탈북청소년들에게도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학 진학을 앞둔 탈북청소년들에게 입학 및 진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 입시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2년부터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설계를 돕고 기술 분야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초로 「전문대학 입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탈북청소년들은 미래 통일한국에 중요한 역할을 할 세대로서 정부는 이들이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탈북대학생

을 대상으로 시작된 「WEST(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정부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은 2011년도 5명, 2012년도 10명, 그리고 2013년도에도 10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여 8개월의 현지 연수 및 인턴 활동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1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미래리더 경진대회를 2013년도에도 개최하여 통일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 스스로 만든 기획안에 대해 실제로 추진해 보는 기회를 갖는 등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우수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였다.

2012년도부터는 제3국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 대안교육시설 및 방과후 공부방 시설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고 아동 학습지 지원과 영어화상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생활안정 지원

(1)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는 2013년 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9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총 74,327건의 상담 및 각종 지원 연계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출신 중 상담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소정의 전문상담사 교육을 받아 채용되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은 이제 막 우리 사회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자신의 정착 노하우와 경험을 생생하게 제공할 수 있고, 상담 시 상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 현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도 상담 실적】

(단위 : 건)

상담 분야	취업	주택	건강	교육	지원 제도 안내	심리/정서	의료/생계 급여	가정 문제	법률 관계	기타	합계
상담 실적	11,426	4,360	10,875	8,150	7,017	10,059	1,968	5,125	3,992	11,355	74,327

(2) 정착도우미

정착도우미는 민간 희망자에게 북한이탈주민 특성 교육 등을 실시하여 우리 사회에 막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다.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전입하면 임대주택 입주, 주민등록 신고, 가정방문 등을 통해 ‘친근한 이웃’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3년 말 현재 전국 32개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669명이 활동하고 있다.

(3) 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장기이식이나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연간 한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하나원」 수료 직후 지역적응교육 및 구직활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근로가 어려운 기간에 필요한 초기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약 3주 정도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쌀, 고추장, 간장, 라면,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의 식료품, 생필품을 27종 21만 원 상당으로 구성하여 세대 당 1개씩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임대주택 지연공급 등으로 「하나원」 수료 후의 임시거주자에 대한 쉼터 14개소 운영, 무연고청소년 그룹홈 18개,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여성에 대한 쉼터 3개소 운영 등 취약계층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는 탈북 후 제3국 장기체류 등으로 <정착지원법> 상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하나원」 수료 후 거처를 확보할 때까지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하였다.



정착 초기 생필품 키트

㉓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력 및 인식 개선

(1)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에서는 지역 복지관, 종교시설,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상담, 교육, 주민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2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총 177개이며, 이 중 북한이탈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는 50개에 이른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이러한 민간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민간단체의 창의적인 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협력프로젝트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운영하였다. 주민통합,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28개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통해 55개 북한이탈주민 단체에 대해 체육, 문화, 지역사회 봉사, 역량증진 세미나 등 총 93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2) 인식 개선

2013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정착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하는 데에 홍보사업의 중점을 두었다.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정기간행물,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확산시켰다. 또한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자를 모델로 하는 방송 캠페인 영상 및 라디오CM「북한이탈주민, 행복을 더하는 우리 이웃입니다」를 제작하여 공중파TV, 케이블TV, 라디오, 옥외매체, 지하철 역사 등을 통해서 캠페인을 전개·확대하였다. 정착사례자는 SBS 방송 프로그램에도 연계하여 방영하였으며, KBS와 탈북청소년의 해외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특집 기획함으로써 탈북주민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도왔다.

북한이탈주민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탈북주민의 진솔한 이야기들은 웹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가공하여 온라인 매체, 전문지,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대중에게 확산시켰고, 홍보노트·E-book 등으로 제작 및 배포하여 탈북주민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이탈주민 콘텐츠 기자단과 명예기자단을 구성해 시의성있는 콘텐츠 생산은 물론, 매체와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했다. 또한 2013년 2월 출시된 모바일 앱 ‘동포사랑’은 설치 1만 건을 돌파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2013 어울림 한마당」(2012.10.27.,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행사를 통해 남북 주민 2,400여 명이 함께 어울리는 종합문화 행사도 개최하였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격월간 소식지 《동포사랑》(매월 2만 3천부), 영문 뉴스레터 《NKRF News》, 브로슈어 등 각종 홍보물을 발간 및 배포하여 관련 소식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성공사례

- 2002년 입국한 이영희씨는 휴대전화 급속 충전기 대여 회사의 수금 일부터, 월 70만원을 받고 상자를 만드는 아르바이트까지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양천지역 자활센터에서 한지공예 사업단을 3년동안 이끌면서 경력을 쌓으며, 한지공예와 비슷한 샘플북 제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월 매출 5천만원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10명 내외의 직원 전부를 북한이탈주민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 2002년 입국한 한의사 김지은씨는 사회 정착 초기 다단계에 빠져 정착금을 모두 날리는 등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한의과대학 진학 후 2009년 한의학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로써 남북한 통합 한의사 1호가 되어 현재 한의원 운영하면서 의료 봉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일간지에서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 2006년 입국한 김창준 군은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면서도 열심히 운동하여, 2010년 유소년 축구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제7장 통일교육

07

- 제1절 통일교육 추진체계
- 제2절 통일교육과정 운영
- 제3절 학교통일교육 지원
- 제4절 사회통일교육 지원
- 제5절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제7장 통일교육

박근혜정부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왔다. 특히,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회의가 점증하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국민적 차원의 통일교육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1회 「통일교육주간」을 제정, 운영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통일교육의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통일교육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였다. 그리고 해외전문가를 활용한 통일교육도 처음으로 실시하여 통일교육의 외연도 확대해 나갔다.

한편, 통일교육원 초청교육은 통일교육의 확산을 고려하여 핵심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교육생들의 관심을 유발함과 동시에 깊이있는 통일담론 형성을 위해 ‘통일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사이버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점인정 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언제 어디서든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통일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캠프 등 체험·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통일교육 내실화’를 교육부와의 협업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해 왔다. <통일교육 지원법>을 개정(2013년 8월 13일)하여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교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통일교육위원,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관 등을 통해 풀뿌리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일·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 교재도 제작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뮤직비디오,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등 감성형 영상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통일교육 내용 및 전달체계】



제1절 통일교육 추진체계

① 기본계획 및 지침체계

정부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통일교육의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정하여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에 제시하고, 기관별 추진계획을 취합·조정하여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3년에는 △「통일교육주간」 제정 등 범국민적 차원의 통일교육 본격 실시 △미래세대 통일의식 배양을 위한 능동적 통일교육 △실질적 통일을 준비하는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 강화 △유관부처 등과의 적극적 협력하에 통일교육 추진 등을 통일교육의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통일교육 및 사회통일교육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하여 일선 통일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2013년에는 2012년에 이어 『통일교육지침서』를 교육대상에 따라 일반용과 학교용으로 이원화하여 발간하였다. 일반용은 일반 국민들이 통일문제와 북한, 통일환경 및 정부의 통일노력 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내용과 지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용은 이에 더하여 초·중·고교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판단력을 키우고 평화통일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각급 학교별 및 교육과정별 권고사항 등도 담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 일선 통일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총 10만 부를 발간, 보급하였다.



통일교육 기본계획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②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유관기관은 물론 다양한 통일교육 참여 자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등 학교 교육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들과의 업무협의를 강화해 오고 있다. 교육부와는 ‘학교통일교육 내실화’를 정부 협업과제로 선정하여, 공동 관리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학교 통일교육 추진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두 차례에 걸쳐 「학교통일교육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통일교육 실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학교통일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안은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일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학교통일교육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2013년 2월 5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2월 28일에는 서울대 인문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11월 29일에는 통일교육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2013년 상반기 학교통일교육지원협의회

제2절 통일교육과정 운영

① 통일교육원 초청교육

초청교육 과정은 ① 학교통일교육 과정 ② 공무원통일교육 과정 ③ 사회통일교육 과정 ④ 통일미래지도자 과정 ⑤ 통일교육전문강사 과정 ⑥ 통일정책최고위 과정 ⑦ 특별통일교육 과정 등 7개 전문과정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었으며, 2013년에는 총 92회 5,642명(연인원 2만 5,5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교육 내용은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북한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함께 최근 남북관계 상황변화를 반영한 건전한 안보의식 형성과 통일미래 비전의 제시를 통한 긍정적인 통일의식 형성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교육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교육대상을 교사, 여론 주도층 등 ‘핵심전달자’의 비중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였다.

【2013년 통일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 명/회)

과정 구분	학교 통일교육	공무원 통일교육	사회 통일교육	통일미래 지도자	통일교육 전문강사	통일정책 최고위	특별 통일교육	합계
인원	1,576	1,250	906	49	131	35	1,695	5,642
반수	26	21	20	1	5	1	18	92
연인원	4,956	4,136	2,494	10,780	1,033	210	1,935	25,544

* 연인원(명)은 각 과정 인원의 교육 일수를 곱한 값

학교통일교육 과정은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장학관·장학사, 교육

연구원·연구사, 초·중학교 및 유치원 교사, 시범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총 26회에 걸쳐 1,576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분야별 북한 실상 등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교육을 운영하였다.

공무원통일교육 과정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일 관련 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3년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간부 및 실무 공무원, 군 장교, 정훈장교, 보안경찰, 지방행정연수원 사무관반, 신규임용 수습사무관 등 1,250명을 대상으로 21회 실시하였다.

사회통일교육 과정은 통일·통일교육 관련 단체, 기타 사회단체들이 북한·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련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통일교육위원반, 사회통일교육강사반, 사회지도층반 등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관련 기관·단체 회원을 비롯하여 각 지역사회와 직능단체의 여론주도층 인사 등 906명을 대상으로 20회 실시하였다.

또한 남북관계 진전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 차원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 국·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의 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제8기 교육생 49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역량,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민·관을 이어주는 통합·조정능력, 통일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은 제1기부터 제8기까지 총 294명이 이수하였다.



제8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 교육생

한편, 통일교육원에서는 2010년 4월 20일 개정·발효된 <통일교육 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을 갖춘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통일교육 전문과정에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시키고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학교통일교육 전문과정」,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적실성 있는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양성과정인 「사회통일교육 전문과정」, 북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문과정」 등이 있다.

2013년에는 학교통일교육 전문과정 1개 반, 북한이탈주민 전문과정 1개 반을 운영하여 5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또한 2012년 이전에 전문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사회 통일교육, 학교 통일교육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0년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시범운영한 이후, 2013년까지 총 286명의 전문강사를 양성하였다.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학교 통일교육 강사	사회 통일교육 강사	북한이탈주민 강사	계
2010		21	31	-	52
2011		21	37	26	84
2012		21	-	79	100
2013		29	-	21	50
계		92	68	126	286

* 보수교육을 제외한 신규양성 인원임.

한반도 통일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 사회 지도층과의 통일준비의 협치(協治) 기반 마련을 위해 2012년 「통일정책 최고위과정」을 신설하였다. 2012년에 2개 기수 69명, 2013년 1개 기수 35명 등 현재까지 총 3개 기수 104명이 본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 과정에는 학계, 언론계, 기업, 문화체육계, 법조계, 고위공무원 등 우리 사회 각계의 지도층이 참석하였으며, 각 기수별로 총 6회의 일정으로 강의하였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통일정책, 통일외교·안보 분야, 한반도 주변정세, 한반도 미래와 통일의 과제 등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었다.

【2013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프로그램】

구분	3기 교육일정 (2013.5.2.~7.11)	
제1강	통일정책 추진방향	류길재 통일부장관
제2강	한반도 미래와 통일의 과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제3강	통일외교와 국제협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제4강	통일과 국가안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제5강	현장방문(판문점 등)	-
제6강	한반도 주변정세와 국제시각	이규형 전 주중대사



제3기 통일정책최고위과정 현장방문

한편, 통일환경 변화상황을 반영한 적시성 있는 통일교육을 위해 특별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통일준비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등교사 심화반」, 미래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청소년 통일교육」, 각 부처의 주요 정책결정 업무를 맡을 「중견간부공무원반」 등을 운영하였다.

② 사이버교육

사이버 통일교육은 크게 공무원 대상 사이버 통일교육, 교원 대상 사이버 통일교육, 사이버 방북교육, 사이버 학점인정과정, 열린 통일강좌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2013년에는 최근 정세변화 등을 반영하여 모두 11개 과목 29개 차시의 사이버 콘텐츠를 개발·수정함으로써, 2013년 12월 현재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등 37개 과목 114개 차시의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개발되어 있다.

공무원 대상 사이버 통일교육은 2008년 3월 1일 개설되어 2013년 12월

현재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의 이해」 2개 과정을 운영 중이며, 총 9회 3,23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교원 대상 사이버 통일교육은 2004년 6월 1일 개설하였으며, 단기 10과목, 장기 1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3년에는 총 13회 운영하여 3,830명이 교육을 받았다. 한편 장기과정 교원 등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교육도 병행하였다. 사이버 방북교육은 2009년 1월 30일 개설되어 「방북준비와 방북 시 유의사항」 등 4과목으로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3,923명이 교육을 받았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이버 통일교육 강좌로는 「학점인정과정」과 「열린통일강좌」가 있다. 2013년 3월 11일 개설된 「학점인정과정」은 ‘통일문제 이해’, ‘북한의 정치와 사회’ 2개 과목에서 각 3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린통일강좌」는 2011년 10월 7일 개설되어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등 「통일문제의 이해」 강좌 14개 차시, 북한이해의 관점 등 「북한이해」 강좌 6개 차시 등 총 20개 차시가 운영되고 있다.

③ 해외순회교육

정부는 해외 동포가 조국애와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재외동포사회를 직접 방문하여 통일교육을 시키는 해외순회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해외교민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교민사회에서 한반도 통일 및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2013년에는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역을 방문하여 교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제3절 학교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통일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통일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청소년 통일교육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소년 통일교육의 핵심 사업인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초·중·고등학생에게는 참여형·체험형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는 통일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① 참여·체험형 통일교육

2013년에는 통일체험프로그램을 「통일리더십캠프」와 「통일미래리더캠프」로 개편, 운영하였다. 「통일리더십캠프」에는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생 3,059명(30회), 교육대학생 234(1회)명이 참가하였으며 특히,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 54명(1회)도 캠프에 참가하였다. 또한 4회에 걸쳐 진행된 「통일미래리더



2013 통일리더십 캠프



2013 통일미래리더캠프

캠프」를 통해 대학생, 현직교원, 지자체 통일교육 담당자 등 316명이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 국가를 방문하여 통일문제와 관련된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하여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또한 어린이들을 통일미래리더로 양성하기 위해 제2기 「통일부 어린이기자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온라인 공모를 통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50명을 어린이 기자단으로 선발하여 다양한 통일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통일에 대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공식 블로그 및 커뮤니티를 별도로 운영하고 오프라인 소식지를 발간하도록 지원하였다.



제2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2013.4.5)

한편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3회 통일동화 공모전」을 개최하여 774편의 응모작 중에서 최우수 2편, 우수 4편, 장려 6편, 특별상 20편 등 모두 32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아울러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의 4,192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31만 8,364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8회 전국 학생 통일글짓기 대회」도 실시하였다.

② 찾아가는 학교통일 교육

정부는 전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전문적인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통일교육강사, 북한이탈주민 강사 등 통일교육 전문강사가 전국의 650여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12만여명의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③ 우수사례 발굴·확산

정부는 학교 통일교육의 모범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통일교육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여 각종 통일교육 교재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전국의 64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일교육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하고, 학교별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통일교육 연구시범학교 현황】



시·도명	학교명
서울(7)	동일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공릉초등학교, 상곡초등학교, 대명중학교,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양재고등학교
부산(1)	남천초등학교
대구(2)	대구진월초등학교, 대구일중학교
인천(4)	인천학산초등학교, 하점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대청고등학교
광주(1)	송정서초등학교
대전(4)	대전송강초등학교, 대전송촌초등학교, 대전용운중학교, 대성중학교
울산(3)	월평초등학교, 대현중학교, 범서고등학교
경기(5)	두일초등학교, 탑동초등학교, 금릉중학교, 매원고등학교, 풍덕고등학교
강원(4)	방산초등학교, 상평초등학교, 철원여자중학교, 간동고등학교
충북(5)	서촌초등학교, 소태초등학교, 장락초등학교, 미원중학교, 보은정보고등학교

시·도명	학교명
충남(2)	대관초등학교, 반포중학교
전북(7)	고창남초등학교, 발산초등학교, 이백초등학교, 진안부귀초등학교, 군산자양중학교, 대강중학교, 이리여자고등학교
전남(3)	곡성중앙초등학교, 신북중학교, 하의고등학교
경북(11)	물야초등학교, 양북초등학교, 오천초등학교, 청하초등학교, 효령초등학교, 축산향초등학교, 영양중앙초등학교, 학림초등학교, 영창중학교, 김천상업고등학교, 현서고등학교
경남(3)	수산초등학교, 신등중학교, 김해대청고등학교
제주(2)	남광초등학교, 서귀포대신중학교

【통일교육연구시범학교 통일염원 포토대회】

“우리는 통일을 원해요”

5월 31일 체육대회와 함께 진행된 “우리는 통일을 원해요” 통일 염원 포토 대회에서 2학년 9반 꽃봉오리 예술단이 1위를 차지했다. 반별 경쟁이 뜨거웠던 이 번 대회는 반별로 개성적인 통일문구를 만들어 부착하고 찍은 사진을 통해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다.

한편, 학교현장의 통일교육 우수 지도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통일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2013년부터는 교육부 공인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로 확대하여 개최하였다. 전국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가 168명이 연구보고서를 제출, 예비심사·본심사·발표심사를 통해 총 31명이 입상하였으며 입상자들에게는 연구점수 부여는 물론 교육부장관상 등이 시상되었다.



제1회 학교통일교육연구대회 시상식

4 학교 통일교육 발전 워크숍

초·중·고 도덕·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통일정책과 청소년 통일교육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4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개최(서울 5월 30일, 인천 7월 8일, 광주 9월 30일, 대구 11월 12일)하였다. 워크숍을 통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학교통일교육 방향을 일선 교사들에게 직접 설명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제고와 학교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2013년 서울지역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5 대학(원)생 대상 통일교육

대학사회의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대상 통일환경·남북관계·북한 실상·통일미래 비전 등을 주제로 5회의 특별강좌 형태로 고려대학교·동국대학교·한남대학교·한림대학교 등 4개 대학교에서 「통일아카데미」를 개설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경상대학교·명지대학교·선문대학교·신라대학교·영남대학교·전북대학교·제주대학교·창원대학교·청주대학교·충남대학교·평택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등 12개 대학교에서 「통일포럼」을 개최하여, 통일 특강, 세미나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통일문제를 주제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3년 7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제32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65편의 응모작 중에서 최우수 1편, 우수 2편, 장려 3편, 입선 7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시상식

제4절 사회 통일교육 지원

① 통일교육위원

정부는 1987년부터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이들의 사회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012년에 제18기 통일교육위원 1,063명을 위촉하고,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와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 16개를 구성하였다. 특히 제18기에는 처음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 국가의 교민 중에서 73명의 해외지역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하였다.

2013년에는 통일교육위원의 전문성과 강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교육원 초청 연찬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일교육 교재 및 동영상, 통일교육위원 뉴스레터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통일교육위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통일교육 소식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교육위원 중앙운영위원회 워크숍
(2013.10.25)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회의
(2013.5.21)

②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지원

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사회 통일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통일시민강좌», 「학교통일순회강좌», 「통일현장체험», 「통일문화축제», 「통일교육 워크숍», 「통일교육 포럼」 등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총 2,493회 진행함으로써 61만 8,632명의 지역주민들이 통일교육에 참가할 수 있었다.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센터명	운영 주체
서울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부산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부산협의회
대구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대구협의회
인천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인천협의회
광주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대전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대전협의회
울산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울산협의회
경기북부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경기협의회
경기남부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경기협의회
강원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강원협의회
충북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충북협의회
충남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충남협의회
전북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전북협의회
전남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전남협의회
경북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경북협의회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경남협의회
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제주협의회



지역통일교육센터 워크숍

③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교육협의회」는 2000년에 설립된 민간 통일교육에 관련된 단체들의 협의체로서, 2013년 12월 현재 63개의 민간 통일교육단체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민간 차원의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통일교육포럼», 「통일교육 사례발표», 「대북협상 아카데미」 등의 통일교육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 통일교육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회원단체들의 통일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회원단체 지원사업을 통하여 총 242회에 걸쳐 341,780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④ 통일관 운영 지원

「통일관」은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체험학습장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남북관계와 북한 실상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12월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통일관」

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통일관」에 각종 전시물, 영상자료, 북한 관련 특수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노후화된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통일교육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통일관 현황】

통일관명	위치	운영 주체	개관일
오두산통일전망대	경기도 파주시	통일부 통일교육원	1992. 9. 8.
서울통일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2008. 10. 29.
부산통일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1989. 1. 30.
인천통일관	인천광역시 남구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1994. 12. 15.
광주통일관	광주광역시 서구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1989. 3. 10.
대전통일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지방공사)	2001. 8. 11.
고성통일관	강원도 고성군	(주)고성통일전망대	1988. 6. 16.
양구통일관	강원도 양구군	양구군	1996. 8. 14.
철원통일관	강원도 철원군	철원군	1990. 12. 15.
청주통일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청주랜드 관리사업소)	1993. 2. 23.
충남통일관	충청남도 공주시	자유총연맹 충남지회	2007. 4. 5.
경남통일관	경상남도 창원시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1998. 4. 29.
제주통일관	제주특별자치도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1993. 12. 18.

⑤ 「통일교육주간」 제정·운영

정부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 「통일교육주간」을 제정, 운영하였다. 5월 마지막주(5.27.~31.)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설정하고, 유관부처는 물론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전국에서 통일교육 행사를 실시하였다. 「통일교육주간」 선포

식, 통일부장관 이하 통일부간부들의 일일통일교사, 전국 초중고교의 계기 수업, 어린이기자단 UCC 공모전, 학부모 통일캠프, 토크콘서트 등을 비롯한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의 통일교육 행사, 해외석학 초청 지역순회특강, 통일교육 발전 전문가 포럼, 국민참여 이벤트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통일 및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국민들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여,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1회 「통일교육주간」 선포식(2013.5.27)

⑥ 해외전문가를 활용한 통일교육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반영하여 통일교육을 보다 심도있게 진행하고, 해외 통일문제 전문가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3년 처음으로 해외전문가를 활용한 통일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해외 신진 학자 초청 교육, 해외 전문가 통일교육원 초빙교수, 해외 석학의 전국순회

특강 등 3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신진학자 초청교육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동남아 등에서 초청된 20명의 신진학자들을 대상으로 특강과 현장체험, 국제학술 회의 등을 통해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해외전문가 통일교육원 초빙교수 사업은 모두 4차에 걸쳐 총 86회, 4,989명을 대상으로 특강 및 대담 등을 실시하였다. 1차는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조호길 교수가, 2차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미국 존스홉킨스대 SAIS 연구소 알렉산더 만수로프 박사가, 3차는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미국 클레몬트 맥키나 대학의 이채진 명예교수가, 4차는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미국 콜롬비아대 웨더헤드 동아시아 연구소 수미 테리 박사가 담당하였다. 해외석학 순회 특강은 모두 3차에 걸쳐 총 21회 3,04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차는 독일 할레대 사회과학연구센터 에버하르트 홀트만 소장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라지역(전주, 광주, 무안)에서, 2차는 중국 북경대 김경일 교수가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경상지역(부산, 창원, 진주, 대구, 경산)에서, 3차는 미국 국방연구원 오공단 책임연구원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충청지역(아산, 천안, 청주, 대전, 공주)에서 특강과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해외 석학의 지역순회특강과 해외 전문가 통일교육원 초빙교수의 특강 주요 대상은 지역 통일교육강사, 교사, 공무원, 대학생 등이다.

제5절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① 기본교재 발간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실상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기본교재로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발간하고 있다. 2013년판 기본교재는 국민들이 남북관계 현실을 직시하면서 굳건한 안보관과 국가관, 바람직한 북한관 및 통일관을 정립하고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북한실상 및 변화된 통일환경을 바탕으로 수정·보완되었다.

2013년 『통일문제 이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내용을 추가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배경, 목표, 원칙 및 기초, 추진과제를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리더십 교체에 따른 한반도 정책 변화, 특히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 내용 등을 반영하고, 영토문제 등 동북아 지역의 갈등 증폭과 같은 변화된 주변정세를 반영하였다. 또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한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족공동체 건설’ 장(章)을 신설하였다.

2013년 『북한 이해』는 북한이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변화된 북한 실상을 추가적으로 기술하는 한

편, 2012년 이후 북한의 대외관계 동향을 보완하였다. 또한 군사·경제·사회 문화 등 최근 변화된 북한의 동향을 수록하여 북한 실체를 객관적이고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제4차 당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 개최 등 김정은 정권 출범에 따른 권력구조와 권력엘리트 재편 내용을 보완하였다. 2013년 기본교재는 각각 10만부씩을 발간하여 수요가 많은 교육기관 중심으로 보급하였다. 참고로 2013년 12월 현재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강의교재로 활용하는 대학이 40여 개에 이르고 있다.



2013 통일교육 기본교재

② 영상자료 제작

정부는 2013년 청소년용 10종, 일반인용 2종 등 총 12종의 통일교육 영상물을 제작·보급하였다. 영상세대인 청소년들이 통일문제를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와 장르로 제작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일방적 설명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감성적·문화적으로 접근한 영상,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을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문제를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연생태계와 문화재 등을 소재로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용은 일반영상 4종(초등학교 저학년 및 고학년용 각 1종), 중학생용 1종, 고등학생용 1종), 애니메이션 4종(초등학교 저학년 및 고학년용 각 1종, 중학생용 1종, 고등학생용 1종), 뮤직비디오 2종(초등학생용 1종, 중·고등학생용 1종)으로 교육대상을 세분화하여 제작하였다. 청소년들의 인지능력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각급 학년 수준에 맞춘 영상물을 제작하여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교육용 영상과 올바른 대북관 정립 및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주는 영상자료들을 개발·보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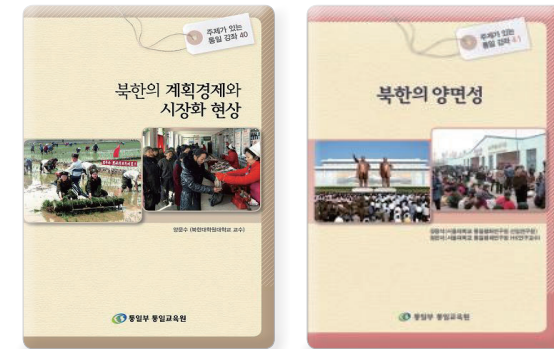
2013년 통일교육 영상자료

③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시리즈 발간

정부는 2003년부터 통일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 해설한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동 시리즈는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설명이 특징으로,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등 기본교재나 여타 통일교육 자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2013년에는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3,500부), 『북한의 양면

성』(5,000부) 등 북한 실상을 다룬 2종을 발간하였다. 이들 책자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의 전개과정, 북한의 표면적인 주장과 현실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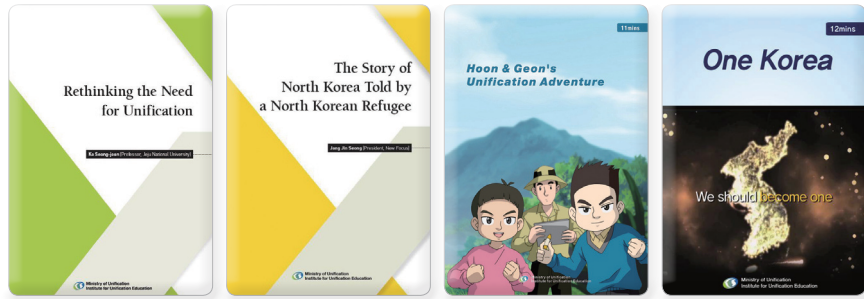
2013년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시리즈

한편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시리즈는 2013년까지 총 41종이 발간되었으며 사회통일교육기관, 통일교육위원 및 통일교육 강사, 통일문제 및 북한연구 관련 기관, 학교, 공공도서관, 유관기관 및 단체, 초청교육생 등에게 보급하였다.

④ 영문판 통일교육자료 발간

국제사회 및 해외 동포사회에 한반도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북한 사람이 들려주는 북한 이야기』 2종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또한 해외동포 청소년들에게 한반도 통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용 애니메이션 『훈이와 건이의 통일여행』과 중학생용 영상물 『원코리아』의 영문판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영문판 자료는 해외공관, 한인학교 등 교민사회 이외에도 해외 한반도 관련 연구기관, 미국 의회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통일문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2013년 영문판 통일교육자료

5 기타 자료 개발 및 자료마당 운영

정부는 2013년에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를 설명하고 사전 방식으로 배열한 『북한 지식 사전』을 발간하였다. 『북한 지식 사전』은 북한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선정한 주요 정책, 주의·주장, 기관, 행사, 사건 등의 용어들의 유래와 내용 및 의미를 해설하였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활용하여 통일교육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1년 전자책(E-book)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13년에는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등 2종의 기본교재와 『북한 지식 사전』 1종,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4종 등 총 7종의 전자책을 개발하였다. 이 자료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내 전자책 전문 사이트(「e-Book 서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2년에는 ‘열

린 통일교육’, 2013년에는 ‘통일 조각그림 맞추기’ 등과 같은 사이버 통일교육 서비스를 확대·운영 중이며 동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앱스토어(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학교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자료 제공 차원에서 매일 인터넷 잡지인 「유니진(UNIZINE)」을 발간하고 있다.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웹진은 교장·교감·교사 등 정책고객 4만 3,000여 명에게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을 통하여 전자메일로 발송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 이슈’, ‘통일카툰’, ‘주요 통일교육 일정’,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탈북교사의 생생 이야기’, ‘Welcome to IPTV’, ‘학교통일교육 현장 속으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에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여 네티즌 및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아울러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자료마당」에 통일교육 자료와 통일문제 관련 다양한 자료들을 탑재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보고, 필요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마당」이용자 수는 2013년에는 39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2013년 통일교육 자료 개발 현황】

구분	자료명	주요 내용	대상
기본 교재	통일문제 이해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남북관계의 전개, 통일미래의 비전과 과제를 설명	교사 및 일반인
	북한 이해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북한의 대외관계,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북한의 경제현황과 전망, 북한의 교육과 문학·예술, 북한의 사회구조와 주민생활을 설명	교사 및 일반인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영문판) 북한 사람이 들려주는 북한 이야기	탈북 지식인이 북한에서 체험한 실제 생활을 바탕으로 최근 북한의 주민생활, 사회현상, 권력집단 등 설명	해외공관·한국학교·해외 연구소 등
	(영문판) 통일필요성의 재인식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필요성의 논리를 재정립	교사 및 일반인
	북한의 양면성	북한의 표면적인 주장과 북한 현실과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북한사회에서 보이는 모순적인 실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	교사 및 일반인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북한경제의 기본틀인 계획경제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	교사 및 일반인
영상 자료 (DVD)	진돗개와 풍산개	진돗개와 풍산개 사이에 태어난 강아지의 사례를 통해 통일의 긍정적 효과에 공감할 수 있는 영상물	초등학생 (1-3학년)
	백령도 점박이물범	백령도에 사는 점박이물범의 시선으로 실항민의 아픔을 이해하여 물범처럼 자유롭게 남과 북의 주민들이 서로 왕래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함을 공감할 수 있는 영상물	초등학생 (4-6학년)
	고인돌	고인돌을 통해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을 이해하고,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협력'과 '조화'의 정신으로 통일을 이뤄야 함을 공감할 수 있는 영상물	중학생
	대륙열차	선조들이 독립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탔던 시베리아횡단열차를 소개하고, 통일은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제시하는 영상물	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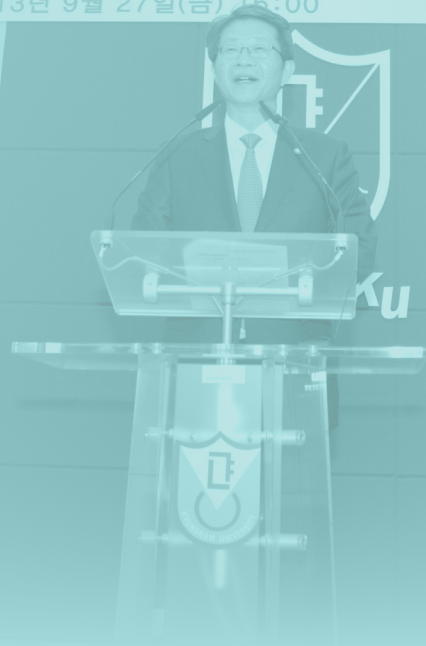
구분	자료명	주요 내용	대상
영상 자료 (DVD)	구름빵의 비무장 시대 나들이 (애니메이션)	인기 캐릭터인 구름빵을 이용한 초등용 애니메이션으로써 비무장지대와 그곳에 갇힌 동물들의 사연을 통해 통일필요성을 제시	초등학생 (1-3학년)
	호랑이의 기상 (애니메이션)	백두산 호랑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아이들과 함께 통일된 대한민국을 여행하면서 통일한국의 기상을 보여주는 3D 애니메이션	초등학생 (4-6학년)
	편지 (애니메이션)	편지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달되는 상황을 설정하여 분단의 상황을 표현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샌드 애니메이션	중학생
	더 큰 나라 더 밝은 미래 (애니메이션)	통일을 찬성·반대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랩을 통해 랩배틀을 벌이는 고등학생용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고등학생
	통일기차 (뮤직비디오)	통일이 되면 통일기차로 남과 북의 분단선을 넘어 세계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내용의 노래 영상물	초등학생
	하나 된 미래 (뮤직비디오)	분단의 아픔과 통일 미래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표현하고 남과 북이 화합을 이루면 통일 후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중고등용 노래 영상물	중고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의의, 추진 방향, 추진 과제 등을 소개하는 영상	교사 및 일반인
	북한의 양면성	북한의 표면적인 주장과 북한 현실과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북한사회에서 보이는 모순적인 실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	교사 및 일반인
	(영문판) 훈이와 건이의 통일여행	훈이과 건이가 미래의 통일한국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백두산 스키장과 판문점을 방문하면서 통일 후의 모습을 느끼는 이야기	해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영문판) 원코리아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된 남북선수들의 모습과 함께 이산가족의 아픔, 소모적 외교전 등 두 개의 코리아 현상의 통일 필요성 실감하는 내용	해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참고 자료	북한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용어 242개를 사전 방식으로 구성하여 설명	교사 및 일반인

제8장 정책 추진 기반 강화

08

- 제1절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 제2절 법·제도적 기반 구축
- 제3절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 제4절 국민과의 소통
- 제5절 북한 정보 역량 강화
- 제6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류길재 통일부장관 초청특강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일시: 2013년 9월 27일(금) 16:00 ■ 장소: 본관 4층 대회의실



제8장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대북정책이 국내외적 지지에 기초하여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내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남북관계 상황 및 변화된 대내외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 기조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내용 등을 반영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실질적 통일 준비라는 2대 목표를 균형있게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장차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발전하는 가운데 남북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정책적 역량 및 통일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남북통합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통일법제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2개 법률 개정을 통해 통일·대북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왔다.

통일·대북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북한정세지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북한 정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효과적인 통일·대북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지원하였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면접과 북한 공개정보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공개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북한 정보종합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북한 정보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국민들이 누구나 북한의 실상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자료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2014년 1월부터 북한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과의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강화하고,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나아가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제통일전략 대화, 한반도 국제포럼 등 다양한 차원의 대화 및 협의 채널을 가동하였다. 또한 재외동포 및 중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내실있게 추진하였다.

제1절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① 경과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정부가 헌법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의 비전,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는 5개년의 중장기 계획이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11월에 수립되었던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2012년에 시한이 만료되었고, 이후 통일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통일부는 2013년 2월 박근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남북관계 상황 및 변화된 대내외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정부의 국정기조 및 과제 등을 반영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3회에 걸쳐 수렴하였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한편,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보완하였다.

이후 8월 21일에는 통일부차관(위원장) 및 각 부처 고위공무원(위원)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검토하였고, 9월 25일에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위원장) 및 13개 부처 차관 및 10명의 민간 전문가(위원)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계획안을 심의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통일부장관이 10월 21일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한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확정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자 하였으나,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관련한 여야간의 이견으로 국회보고는 추후로 연기되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장(1명)	통일부 장관
정부위원(13명)	기획재정부 1차관, 외교부 1차관, 통일부 차관, 법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교육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환경부 차관, 국가정보원 1차장
민간위원(10명)	김용석(평화통일 국민포럼 정책위원장),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준기(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엄상윤(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정철(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제성호(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조정아(통일연구원 연구위원)

②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특징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기조와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장기 계획의 성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추진방향】

비전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
목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실질적 통일 준비(작은 통일 → 큰 통일)
기본 방향	안보와 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
	통일미래를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
추진 과제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②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③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④ 개성공단 등의 발전적 정상화 ⑤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실질적 통일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⑦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⑧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⑨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⑩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격에 맞게 구체적 사업보다는 방향성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무엇보다 남북관계 상황 및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북한 동향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의 대외전략, 그리고 우리 내부 상황 등 대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아울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하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견지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도 균형있게 기술하였다.

③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주요내용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비전, 2대 전략 목표, 4대 기본방향과 10대 중점추진과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였고, 2대 전략목표로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실질적 통일 준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둘째,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셋째, 통일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넷째,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 밝힌 10대 중점 추진과제의 첫 번째는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이다. 이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고 신뢰를 형성해 나가며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하고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로서 먼저 이산가족의 상봉 재개를 우선으로 추진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관련 대북 협의도 추진하

는 한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면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세 번째 과제는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이다. 이는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사회·문화교류는 민족 동질성 회복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남북 경협 재개와 대북 투자 허용 문제도 검토해 나간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네 번째 과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이다. 이는 남북 당국간 상설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해 나가면서 통행·통신·통관 문제의 해결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및 국제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정치·군사적 신뢰구축도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 번째 과제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으로 정부가 국민통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일곱 번째 과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기반을 확충하면서 이들의 지역적응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다.

여덟 번째 과제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하면서 통일교육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홉 번째 과제는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이며, 통일을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확충하고, 통일기반 구축과 함께 세계 각지 재외

동포들의 통일역량도 결집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 열 번째 과제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이며,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협의를 강화하면서,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실질적인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 관련 5대 과제와 통일준비와 관련된 5대 과제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통일부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립해 나갈 것이며, 시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남북협력기금 등에서 조달하되, 다양한 자원조달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정부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하에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실질적 통일준비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2절 법·제도적 기반 구축

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 및 남북 통합과정 연구

1994년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의 기본원칙 하에 화해협력과 남북연합을 거쳐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가려는 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된 이후 역대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계승되어 왔다.

그러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여, 변화한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를 반영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열의 저하가 두드러지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담론을 활성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재결집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방향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대국민 여론조사, 전문가·대학생 대상 세미나 등을 통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후 변화된 환경에 따른 발전 필요성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기초로 2014년부터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방향에 대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2014년도에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동포 등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국내외 여론층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하여 남북통합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정책과제를 수행하여 왔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에서는 ‘3대 공동체 추진구상’ 연구를 통하여 공동체 형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민족공동문화자산 교류협력 추진방안’, ‘통일대비 통계부문 대응전략’ 등 남북통합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별 과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13년에 들어서는 「통일대비 정책과제 개발 및 체계화」 사업을 통하여 그간의 연구를 더욱 심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통일편익’ 등 남북통합에 관련된 구체적인 과제를 다수 연구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지속하여 남북통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 및 통일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② 통일법제 구축사업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 주변국가와의 관계, 북한 내부 요인 등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고 이는 남북간 분야별 법제도 관련 사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향후 남북통합 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법제도 현황 및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통일과정 또는 통일 이후 남북통합법제 마련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2009년부터 「통일법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통일법제 추진위원회

통일법제 업무는 통일법제 관련 유관부처간 협업과 법률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서로 융합되었을 때 보다 체계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통일부는 2009년부터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중심이 되고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일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통일법제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회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통일정책실장이 위원장이 되는 「통일법제 추진위원회」는 2013년도에 4차례 개최되어 통일법제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부처 간 정책연구의 성과를 공유하여 업무중복을 방지함으로써 통일법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부 3.0 기조에 부합되게 기존 사업부처 외 일반 관련부처(외교부, 재정부, 통상산업부 등)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통일법제 합동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11.22-23, 안성)하여 통일법제 구축사업에 대한 부처간 공감대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통일법제 합동워크숍」(2013.11.22-23)

(2) 통일법제 관련 학술회의

정부는 통일을 대비하는 데 있어 법제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통일법제 업무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통일법제 관련 학술회의를 후원하였다. 북한법연구회나 공법학회와 같은 기존 전문학회는 물론, 2011년부터는 사법연수원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최하는 학술회의도 지원하여 통일문제와 통일법제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제고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3년에는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과 과제 : 독일 통일의 사례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학술대회」(2013.8)와 ‘북한정권 65년과 북한법의 변천 : 남북법제통합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북한법연구회 학술대회」(2013.9)를 지원하였다.

(3) 통일법제 DB

정부는 각 정부기관이나 학계에 산재해 있던 통일법제 관련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이하 ‘DB’)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까지는 국내외에 발간된 통일법제 관련 연구결과를 수집, 분류하여 DB화하고 이를 매년 업데이트 하여 CD로 제작·배포하였고, 2012년부터는 통일법제 DB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Web DB를 구축한 바 있다. 2013년에는 기존 DB의 분류체계를 보다 간결화하고 검색결과 재검색 기능을 도입하는 서비스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통일법제 DB에 담겨진 연구자료 정보도 업데이트하여 북한 법제 연구, 남북한 법제 비교연구, 통일법제, 해외 사례 등 분야별로 총 1,700여편의 연구자료 정보를 DB에 등

록하였다.



통일법제연구자료 DB 홈페이지(unilaw.unikorea.go.kr)

(4) 통일법제 관련 연구

통일법제 관련 분야별 쟁점사항이나 정책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에 북한법제, 남북법제 비교, 법제통합 분야별로 6개 분야 용역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통일법제 합동워크숍을 앞두고 분야별 과제를 도출하는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적실성있는 정책연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출장사업을 통해 EBRD 등 국제기구의 법제정비 지원제도와 체제전환국의 법제정비 현황 자료도 축적하였다.

정부는 남북한 통합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계속 보완해 나감으로써 남북 간 통합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③ 당면 법률 정비

2013년도에 통일 및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지원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회 제출된 12개 법안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산가족 사후 교류 기반 마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학교 통일교육 내실화,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1) 이산가족 사후 교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정(2009년 3월 25일) 이후 최초로 개정이 되었다. 이산가족이 고령화되고,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산가족 사후(死後) 교류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이산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 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산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3년 11월 23일에 시행되었으며, 향후 이 제도가 사후에라도 이산가족의 한을 달래주고 유족들간의 교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원 확대

2013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안이 다양하게 발의되고 또한 개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9대 국회에서 「북한이

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건 발의되고, 이중 6건이 7월 2일과 1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해 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 취업, 주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취업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지원도 확대되었다.

12월 26일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영농정착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북한이탈주민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영농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주가 고용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3)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제도 개선과 국제화를 위한 발판 마련

2013년은 북한의 일방적인 근로자 철수조치로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 이래 처음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업중단 등의 사태발생 시 기업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이 행해질 수 있도록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과정에서 시 기업의 의견을 청취·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 법률은 8월 13일 공포되어 11월 14일 시행되었다.

개성공단 정상화 이후에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토대 마련과 안정적이고 연

속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과 사업중단 등의 사태발생시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원을 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4) 학교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학교통일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법률이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등은 통일교육을 초·중등학교 교과 과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제3절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4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초 아래 정부는 「통일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라는 국정과제를 설정하면서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인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2013년도 통일부의 국제협력 사업은 크게 세가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첫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통일이 동북아의 공동발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통일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가는 것을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우리의 통일비전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제통일전략대화, 한반도 국제포럼 등 여러 가지 차원의 대화 및 협의 채널을 가동하였다. 기존에는 이러한 대화채널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2013년도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변국 뿐 아니라 EU, ASEAN 등으로 대상지를 확대하여 추진하였다.

둘째는 재외동포 및 중국 전문가 등 특화된 정책그룹을 대상으로 한 국제협력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는 한반도와 거주국 동포사회를 연결하고 한민족 통일의를 결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 하에 한민족 통일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한편, 중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실성있게 수렴하고자 ‘한중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는 단순히 한-중 학자간 세미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 발생시 수시로 전문가 협의체를 가동하여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코자 하였다.

세 번째는 2010년 통일부-독일연방정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설치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한독 정부간 통일업무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한독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한독 정부간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가운데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문제와 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고 우리 통일과정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① 국제통일전략대화

국제통일전략대화는 통일부 관계관들이 미·중·일·러·유럽 등 주요국을 방문하여 해당국 정부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주 목적으로 하고 현지 전문가, 해외동포에 대한 정책설명을 겸하는 사업이다. 2013년 국제통일전략대화는 미국 3회, 중국 2회, 일본·러시아·유럽·동남아 각 1회 등 총 9회 실시하였다.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5월 중순, 미국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제통일전략대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미국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는 총 3회 개최하였다. 5월 13일에서 19일까지 진행된 첫 번째 미국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양 정상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방향에 대한 미국 정부 및 전문가 집단과의 인식을 공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국무부, 국방부 등 미국 정부 관계관과 면담을 하고, 외교정책위원회

(NCAFP)와 미 외교협회(CFR)를 방문하여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주력하였다. 한편,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 등 유엔(UN) 관계자들과 만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두 번째 미국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에서는 국무부 관계자들과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및 향후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미국 헤리티지 전문가 간담회, 동포대상 정책설명회, 미국 의회보좌관 간담회 등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현황과 북한정세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였다. 특히 뉴욕에서는 유엔(UN)본부를 방문하여 반기문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에 대한 유엔(UN)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12월 9일에서 14일까지 개최된 세 번째 미국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에서는 한반도국제포럼 및 통일연구원 주최 국제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고 미국 의회조사처 관계자 등 현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북한정세 및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2014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중국 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는 2차례 개최하였다. 우선 6월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제1차 중국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가 북경과 장춘에서 진행되었다. 북경 방문시에는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의 의미를 평가하고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발전된 한중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북정책의 공조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장춘 방문에서는 길림성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이해도 제고에 주력하였다. 9월 5일에서 9월 7일간 진행된 2차 중국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는 북경에서 개최하였으며, 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전문가들과 한반도 문제 현안에 대해 의

견을 교환하였고 중국지역 한반도국제포럼에 참석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과 북한 상황, 향후 한중 협력방안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중국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일본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에서는 일본 외무성, 납치문제대책본부 사무국 등의 관계관을 만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및 향후 대북정책 관련 한일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현지 한반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 정세 및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을 진행하였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은 일본내 도쿄, 오사카 지역 동포대상 정책설명회도 개최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재일 동포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에는 동남아 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를 실시하였다. 동남아 국제통일전략대회는 한반도 국제포럼 국외 세미나와 연계하여 태국 방콕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ASEAN 사무국이 있는 인도네시아를 방문, 인도네시아 외교부 및 ASEAN 관계자 면담하여 한반도 평화통일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였다.



동남아시아 국제통일전략대화, 인도네시아 외교부 관계자 면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영국과 이탈리아, 벨기에를 대상으로 유럽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를 진행하였다. 영국 외무성과 적십자사 관계자, 이탈리아 외교부 관계자, EU 대외관계청 관계자 등을 면담하였고, 영국에서는 전문가 면담을, 이탈리아에서는 동포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지 전문가 및 재외동포들의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유럽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 EU 개발총국 관계자 면담

한편 11월 개최된 한러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서 러시아 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를 개최하였다. 러시아 철도공사 관계자를 면담하여 남-북-러 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러시아 사회과학원 내 한국센터와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을 방문하여 현지 전문가들과 한반도 현안 및 한러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② 주변국 정책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주변국 정책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주변국 한반도 문제 전문가 집단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에 신설된 사업이다. 2013년은 중국 전문가 집단과의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중국 북경과 연길지역에서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다. 북경에서는 당대세계연구센터 관계자와 만나 한중관계, 최근 한반도 정세, 대북인식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간 전략적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연길에서는 연변대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한중 전문가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전 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중국 연길에서 우리측 전문가 5명과 중국측 전문가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중 전문가 전략대화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였고, 중국측 전문가들과 북한정세, 북핵문제 해법, 한중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③ 한민족 통일기반 구축

한민족 통일기반 구축사업은 통일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외동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기반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구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중앙아시아·연해주 등 그동안 정책영역이 미치지 못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를 통해 통일과정에 있어 건설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2013년에는 시범사업으로서 고려인 및 재외동포 약 11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한민족 통일기반 구축사업을 전개하였다. 우선 카자흐스탄 지역 동포사회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 한반도 문제 전문가의 기고활동을 지원하였다. 2013년 8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전문가의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기고내용이 고려일보(러시아어), 카자흐뉴스·한인신문·한일일보(한글) 등 4개 현지 동포 언론사에 16회 게재됨으로써 고려인 동포 및 현지 한인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10월 12일 고



카자흐스탄 고려인 대상 통일정책설명회(2013.10.12)

려일보 창간 90주년 기념행사가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것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고려인 간부, 현지 언론인 및 고려인 관계자, 카즈누 국립대학 한국학과 학생 등 120여명을 초청하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현지에서 통일부 주관 통일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④ 한반도 국제포럼 개최

서울에서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한반도국제포럼 국내행사를 진행하였다. 20일 공개회의에서는 먼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였고 청중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받는 등 쌍방향 대화에 중점을 두었다. 기조연설 이후 오전 세션에서는 한국-미국-중국의 3국 대표 학자(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왕이조우 북경대 교수)들이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의 남북관계”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주최한 오찬행사 이후 오후세션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DMZ 세계평화공원」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세션에서는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우리 정부측 대표자로 참석하여 발제 및 토론을 하였고 추수룡 중국 청화대학교 교수, 데이비드 강(David Kang) 남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 바실리 미하예프(Vasily Mikheev) 러시아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라스-안드레 리히터 독일 나우만 재단, 토고 카주히코 교토산업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DMZ 세계평화공원」 세션에서는 이강우 통일부 「DMZ 세계평화공원」 기획단장이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의 중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발제를 하였고, 존 에버라드(John Everard) 전 주북한 영국대사, 미치시타 나루시게(Michishita Narushige) 일본 국립정책대학원 연구위원, 스콧 스나이

터(Scott Snyder) 미국외교협회 연구위원, 브렌단 테일러(Brendan Taylor)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주평 북경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토론 및 발제자외에 성김 주한 미국대사 등 주한공관 대사들과 한·미·중·일·러·독·영·호·EU 등 10여국의 전·현직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 200여명이 청중으로 참석하였다.

21일에는 비공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비공개회의는 최근 북한상황 평가, 한국의 대북정책 평가, 한반도 통일의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하였고, 10여개국의 정부 관계자 및 민간 학자들이 참석하여 보다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반도 국제포럼은 2010년 코리아글로벌포럼(Korea Global Forum)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1.5트랙 다자협의체이다. 당초 코리아글로벌포럼(KGF)과 한반도비전포럼(KVF)등 두 개의 행사로 시작된 국제행사는 2012년도 한반도국제포럼(KGF)으로 통합되었으며, 2013년에는 그 규모와 대상, 횡수를 확대하여 개최하였다. 2012년에는 1차례의 국내포럼과 미·중 전문가 대상 국외세미나를 2차례 개최하였는데, 2013년에는 1차례의 국내 행사 외에 미·중·일·동남아 등 4차례의 국외세미나를 개최하여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데 주력하였다.



2013 한반도국제포럼 국내회의(2013.11.20)

한반도국제포럼 국외세미나는 총 4차례 진행하였다. 일본지역 국외세미나는 7월 9일 도쿄에서 개최하였고, 중국지역은 9월 6일 북경에서, 동남아(태국) 지역은 11월 5일, 미국 지역은 12월 10일 워싱턴에서 개최하였다. 한반도국제포럼 국외세미나에서는 통일부 고위공무원이 정부대표로 통일부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기조 및 계획 등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현지 전문가들이 북한 정세 및 국제사회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11월 5일 개최된 동남아(태국 방콕) 국외세미나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WFP, IFRC, UNDP 등 각종 유엔(UN) 기구가 밀집되어 있는 방콕에서 유엔(UN)기구 아시아 지역사무소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북한과 직접 인도적 사업을 진행하는 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상황 평가, 대북인도지원 및 북한 인권 관련 향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반도국제포럼 방콕세미나(2013.11.5)

5 한독통일자문위원회

2010년 한국 통일부와 독일연방내무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태동하게 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2011년 제1차 서울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 제3차 회의는 2013년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양일에 걸쳐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되었다.

2013년 제3차 회의에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한국측 사회를 담당하였으며,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안두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이각범 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과 명예교수, 이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종욱 통일교육위원중앙협의회 회장,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홍양호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와 김영훈 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장이 전문가로 특별 초청되었다.

한편 독일측에서는 벤트만(Jörg Bentmann) 연방내무부 신연방주 담당 실장을 사회자로 하여, 폴(Rüdiger Pohl) 전 할레 경제연구소장, 슈뢰더(Richard Schröder) 전 동독 사민당 원내대표, 루데비히(Johannes Ludewig) 전 신연방주 특임관, 파케(Karl Heinz Paqué) 전 작센-안할트 주정부 경제장관, 쉬납아우프(Klaus-Dieter Schnapauff) 전 내무부 실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함만(Detlev Hamman) 토지평가관리회사 사장, 파울린(Ken-Peter Paulin) 전 신탁청 국장 등이 특별초청자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 하였다.

2013년 제3차 회의에서는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소유권 문제, 동독 기업들의 사유화 등을 주제로 하여, 6월 27일 첫 날 회의에서는 「통일과 체제

전환과정에서 소유권 문제의 의미», 「농지 및 산림의 사유화», 「동독의 정당, 대중조직 재산 처리 문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이어 6월 28일 둘째 날 회의에서는 「구 소유권 반환요청」과 관련된 토론과 함께 「동독측 기업 사유화」 관련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2013년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회의는 한-독 양측 위원들간 전문적인 주제에 대한 토론과 참여가 있었으며 통일과정에서의 사유화, 민영화와 관련된 시사점과 공통인식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한독수교 130주년과 광부·간호사 파독 50주년을 기념한 행사·운영도 같이 진행하였다.

한편 6월 개최된 제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평가하고 내년도 제4차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연금, 의료·실업보험 등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실무회의에서는 안두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를 대표로 윤석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재각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연구부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하였으며, 통일부 통일기반조성과장 및 관계관, 독일주재관 등이 배석하였다. 한편 독일측에서는 벤트만(Jörg Bentmann) 연방내무부 신연방주 담당 실장 및 담당 국장,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독 양측은 제3차 서울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내년도 제4차 회의도 상호간 적극적 협조를 통해 내실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제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 독일통일 총서 발간

독일통일 20주년이 되던 2010년 한국 통일부와 독일연방내무부는 독일 통일 경험을 한반도에 전수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준비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독일 통일 및 통합 관련 자료들을 한국측에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10년부터 베를린 자유대학교를 중심으로 용역팀을 구성하여 독일정부의 통일 및 통합관련 공문서를 이관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2013년 4년차를 맞이하는 동 사업을 통해 국방분야, 재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전 사회에 걸쳐 총 34권(부록 제외)의 방대한 분량의 독일 통일 관련 공문서가 한국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독일통일 관련 문서들은 문서들의 활용 가치 및 중요도 등에 따라 2011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통일부는 두 가지 작업을 총망라하여 사회 각 분야별로 통일 및 통합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올해 2013년부터 독일통일 총서를 시리즈로 발간하

는데 주력하였다. 국방연구원, 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의 관련 전문가들의 집필과 독일에서 수집한 문서목록과 번역본을 함께 묶어『독일통일총서 1- 군사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총서 2- 행정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총서 3- 구 동독지역 인프라 재건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총서 4-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기관(특임관) 및 정책수단 관련 정책문서』 등 총 4권의 총서를 각각 발간하였다. 이렇게 발간된 총서들은 전국의 국공립 도서관 및 연구기관, 국회 및 행정부 등 유관단체 등에 배포되었으며, 향후 통일과 관련된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전망이다.



독일통일 총서

7 기타 국제협력

그 밖에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였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영문·중문·일문판 설명자료를 약 1만부 이상 발간하여 재외공관에 배포하고 국내 주한공관 등

국내거주 해외인사들에게도 배포하였다. 주한공관 관계자들의 이해 및 지도 제고를 위해서 주한공관 대상 정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였는 바, 5월에는 EU 국가 대사 대상, 7월에는 주한공관 실무자 대상, 11월에는 주한공관 관계자 대상 안보투어를 실시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을 알리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였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해외 주요 인사와 통일부 장관, 차관 및 통일부 관계관과의 면담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방한중 통일부장관을 면담한 해외 주요인사는 조셉 윤(Joseph Yun)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탕자쉬안 전 중국 국무위원, 밥 코커(Bob Corker) 미 상원의원, 찰스 랭글(Charles Rangle) 미 하원의원, 조지 슈와브(George Schwab)회장이 이끄는 미 외교정책위원회(NCAFP) 방한단,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이다. 한편, 미국, 일본,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프랑스, EU 등 주요 국가의 주한공관 대사들도 통일부장관을 방문하여 한반도 현안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밖에 글린 데이비스(Glyn Davies)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클레멘스 폰 괴체(Clemens von Goetze) 독일 외교부 차관보, 마르고 맥카시(Margot McCarthy) 호주 국가안보보좌관, 토르가이르 라슨(Torgeir Larson) 노르웨이 외교차관, 짐 마샬(Jim Marshall) 미 평화연구소장(USIP) 등 다양한 국가의 인사들이 방한하여 통일부 차관 및 주요 실·국장들을 면담하고 한반도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제4절 국민과의 소통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동시에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정부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국론을 통합하는데 기여하였다.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남북당국회담 무산과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무산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통일부장관 성명,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여론주도층 및 관련 단체 등과 활발히 소통하여 국론을 통합하고 정책 추진력을 제고하였다.

① 국민 참여와 여론 수렴

(1) 사회 각계각층과의 정책대화

정부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 소통노력을 전개하였다. 사회지도층 등 각계 주요인사들로부터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책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통일 정책·인도주의·정세분석·교류협력·남북회담·통일교육 등 6개 분야별로 각계 전문가들의 내실 있는 자문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종교계 지도자 등 사회 원로인사들로부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였다.

정부는 국민들과의 쌍방향 정책대화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통일부장·차관은 80여회에 걸쳐 전국 각지의 전문가·대학(원)생 및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강연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현황과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분야별 정책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과 수시로 대화를 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협의하였다.

정부는 민간 통일운동단체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차원에서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였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통일단체들과 상시적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단체 주요인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였다.

(2) 국민 여론조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현안 및 통일인식 등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80.1%)의 국민들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국제화(76.1%)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75.2%)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리정

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열망 및 관심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2013년 12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83.0%의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2.0%의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세대별로 분석하였을 때 20대가 통일에 대한 관심도(76.4%)와 원하고 있다(75.3%)는 응답비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3년도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요약해보면, 국민들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염원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쌍방향적 소통 노력 강화

(1) 오프라인 소통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책자 2만 5천부와 리플릿 6만부를 발간·배포(2013.8.21)하였다. 또한 정책고객 관리시스템을 통해 7만 3천여명의 통일부 정책고객들에게 설명책자와 리플릿 전자책(E-Book)을 배포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영문·일문·중문으로도 설명책자와 리플릿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설명책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리플릿

또한 9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중파와 케이블 TV를 통해 108회의 방송광고를 방영하고,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매체를 활용한 영상광고를 실시하였다.

(2) 온라인 소통

정부는 국민 및 국제사회와의 상시적 온라인 소통채널로 통일부 대표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영문 홈페이지(http://eng.unikorea.go.kr),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http://dialogue.unikorea.go.kr),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http://unibook.unikorea.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 현황과 남북관계 및 북한소식·자료, 통일교육 내용 등을 게재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통일부 대표 홈페이지를 정부 3.0 정책 기조에 맞춰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증대시켜 대폭 개편(2013.12.13)하였으며, 한반도 통일 환경에 있어 중요한 주변국가인 중국(중화권)을 대상으로 우리의 통일·대북 정

책을 소개하는 중문 홈페이지(http://cn.unikorea.go.kr)를 신규로 개설(2013.12.20)하여 온라인 소통역량을 보다 강화하였다.



대표 홈페이지



중문 홈페이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홍보 마이크로페이지



통일미래세대인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홍보 마이크로페이지(www.trustprocess.kr)를 개설(2013.8.21)하고 홍보 이벤트 등을 통한 쌍방향 홍보를 진행하여 8월 2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428,876명이 마이크로페이지를 방문(1일 평균 7,524명)하였으며, 총 4,044명이 이벤트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대학생기자가단이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올리는 '통일미래의 꿈' 블로그를 통해 젊은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2013년 5월 북한이탈주민 1

명, 외국인 유학생(러시아 국적) 1명을 포함한 33명의 제6기 대학생기자단이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학생기자단은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콘텐츠 제작 방향 등을 논의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설명 등 총 490건의 기사를 ‘통일미래의 꿈’ 블로그에 올렸으며, 11월에는 누적 방문자 200만명을 돌파하였다.



통일미래의 꿈 블로그



대학생기자단 정기회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배너 광고를 통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카카오톡 등 SNS 채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소문내기 이벤트’와 ‘홍보물 인증 이벤트’ 등을 진행하면서 젊은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홍보 효과를 강화하였다.

(3) 인터넷 통일방송

정부는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터넷 통일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통일방송은 2013년 2월, 시청자의 호응이 높은 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방송개편을 시행하였다. 한주간 남북관계의 주요 이슈를 전하는 기존의 주간 「유니뉴스」와 북한동향과 한반도 정세를 분석 전달하는 「한반도는 지금」, 통일과 관련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소재로 기획한 교양 다큐 「유니포커스」 등을 새롭게 제작·방영하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홍보를 위해 자체 홍보영상을 기획·제작하고, 통일부 장관의 주요 연설과 메시지를 전달하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였다.

인터넷 통일방송은 송출 플랫폼으로 자체 홈페이지(<http://unitv.unikorea.go.kr>), 모바일용: munitv.unikorea.go.kr, 유튜브 전용채널(<http://youtube.com/mouni-korea>)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395건의 영상을 방영하고 영상조회수 33만건을 기록하였다.

정부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인터넷 통일방송의 확대·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통일방송의 예산·인력을 확충하고,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통일과 남북 문제에 대한 정보와 정책을 접하고, 통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인터넷 통일방송 「유니뉴스」



인터넷 통일방송 제작 현장

제5절 북한정보 역량 강화

① 북한정세지수

통일부는 2010년부터 북한정세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인 예측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판단이 통합된 북한정세지수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3년부터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개발된 ‘북한정세지수 모델’에 기반하여 △통계조사 △탈북자 설문 △전문가 조사 △북한문헌 내용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수값을 산출·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간이모델을 통해 전체 지표체계 중에서 대표성 있는 핵심지표만을 선정·구성하여 지수 산출의 즉시성을 확보하고 활용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수 시스템에 의해 북한 정세를 선제적으로 예측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통일·대북정책을 수립 및 집행,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② 북한 정보 수집·관리

(1)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증가와 대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방북자 증가로 북한 관련 정보의 원천이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차원에

서 이들을 대상으로 북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신규사업을 통해 북한의 지역별 산업·인문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표준설문지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방북자 총 2,05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후 표준설문지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2011년 1,521명, 2012년 1,526명, 2013년 1,07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총 6,172명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북한 종합 DB」에 반영하였다.

【연도별·대상자별 면접통계】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탈북자	1,712명	1,424명	1,426명	1,073명	5,635명
방북자	340명	97명	100명	-	537명
합계	2,052명	1,521명	1,526명	1,073명	6,172명

「북한 종합DB」에 반영된 북한의 지역별 산업·인문지리 등에 대한 자료는 시계열적 변화추이 분석은 물론, 북한 현황 및 정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토록 함으로써 정부의 대북 분석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축적된 북한의 지역별 각종 정보는 통일정책 수립 및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2) 북한공개정보센터(N.K.O.S.C.) 운영

북한공개정보센터(North Korea Open Source Center)는 정세분석 역량 및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설립되었으며, 미·중·일·러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들의 북한 관련 공개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북한공개정보센터는 이들 국가의 정부 주요 인사 발언 및 보도자료, 언론사 기사, 전문가 주요 발언내용 등 북한 관련 공개정보를 매일 그리고 특정 계기시에 수집·분석해오고 있다.

공개정보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주요 유관기관 등에도 제공되어 한반도 및 주변 정세 파악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공개정보센터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국가 및 국제사회의 북한 관련 공개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보다 유기적이고 정확한 정세분석 및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③ 북한 종합데이터베이스(DB) 구축

정부는 2010년 진행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북한 종합데이터베이스(북한자료, 북한인물, 북한산업·인문지리 정보 등 3개 분야)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구축해 나가고 있다.

1차년도인 2011년에는 북한자료(북한원문, 국내외 자료, 분석보고서 등)와 북한인물 관련 정부 내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차년도인 2012년에는 북한의 지형정보(2D, 3D)와 30만여 건의 북한산업·인문지리 속성 정보를 연계하여 검색·활용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과 함께 남북 관련 통계를 대시보드(dashboard)¹⁾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 웹에서, 한 화면에서 다양한 정보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능.

2013년에는 북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마지막 단계 사업으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북한정보포털시스템(http://nkinfo.unikorea.go.kr)을 구축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북한정보포털은 2012년까지 구축된 북한 종합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구성하였다.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북한의 주제별 정보와 함께 관련 동향, 북한 지도, 언론 기사 등 북한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북한 종합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북한정보서비스의 창구가 일원화되고, 다양한 북한정보의 제공으로 북한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정보포털】

The image displays three screenshots from the North Korea Information Portal. The top-left screenshot shows a map of North Korea with various locations marked. The top-right screenshot shows a list of events or news items with a search bar and filters. The bottom-left screenshot shows a bar chart titled '1인당 국민총소득(1인당 GNI)' (GNI per capita) from 2000 to 2012. The bottom-right screenshot shows a table of '주요 행사 동향' (Major Event Trends) with columns for year, event name, and date.

④ 북한자료센터 운영

통일부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989년 5월 「북한자료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내 소재)는 북한 관련 도서자료 7만2천여 권, 정기간행물 1만2천여 권, 파일자료 3,000여 건, 시청각자료 8,200여 건, 통일부 발간물 6,700여 건 등 총 10만 3955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원전자료 보유 현황】

(단위 : 건)

종류	단행본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비도서자료	계
자료 건수	19,526	4,549	5,560	1,435	31,070

* 2013년 12월 31일 기준

「북한자료센터」는 대국민 자료서비스와 함께 통일·남북문제 전문가, 대학생, 관련 단체 회원들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북한의 실상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총 60회를 개최하여 6,179명이 참여하였고, 1989년 이후 2013년 12월 말까지 총 734회를 개최하여 총 7만 6천여 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북한자료센터」는 2,300여 편의 북한영화를 소장하고 있고, 1990년 3월부터 매월 1회 북한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여 왔다. 최근에는 이를 수시 상영체제로 바꾸어 언제든지 북한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2006년부터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서울, 인천, 창원, 제주, 부산, 광주지역 통일관 등 8개 지방 도시로 북한영화 상영지역을 확대하였다. 2013년에는 북한영화를 총 1,035회 상영하여 9만여명이 관람하였으며, 1990년 이후 2013년

12월 말까지 관람인원은 11,500여 회에 걸쳐 150만여 명에 이른다.

이 밖에도 북한자료의 효율적·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장 자료에 대한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시스템 구축, 원문 DB 구축, 최신 검색엔진 도입, 모바일 웹서비스 및 간편문자 서비스(SMS) 안내,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디지털 아카이브 도입, 전자도서관 및 개인도서관(My Library) 서비스 개편 등 온라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3년 한 해 동안 모두 312건의 자료를 전자책(e-Book)으로 만들었으며, 2000년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총 3,159건의 북한 관련 자료를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unibook.unikorea.go.kr)」를 통해 북한 조선중앙TV 프로그램 편성표 안내, 북한영화 소개, 북한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이용 고객도 계속 증가하여 2013년부터 연 110만 명을 넘어섰다.

대외적으로는 국내 유관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자료 교류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3년 12월 말 기준 국회도서관 등 19개 기관과 정보·자료 공유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unibook.unikorea.go.kr)

제6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① 남북협력기금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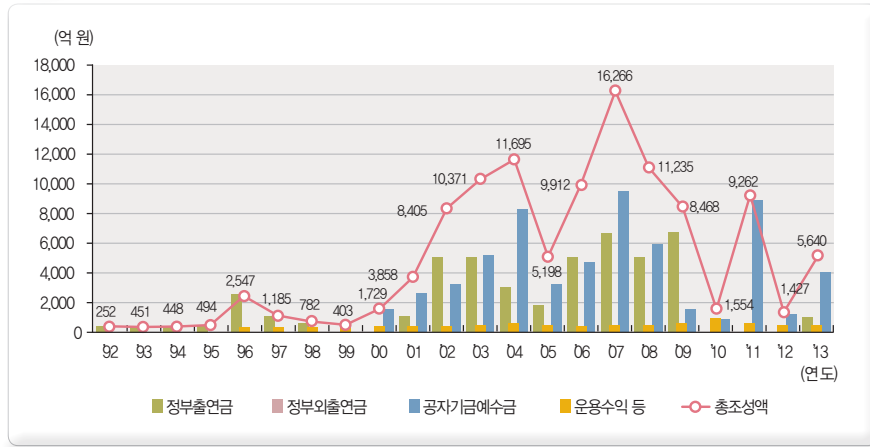
2013년 수입계획은 총 1조 8,251억 원으로, 2013년 12월말 기준 1조 7,438억 원이 수납되었다. 경수로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정부출연금 1,055억 원이 출연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5,300억 원을 예수하였다. 여유자금 회수는 9,349억 원(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249억 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8,100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외 자체수입으로는 1,734억 원이 수납되었다.

【남북협력기금 수입】

(단위 : 억 원)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정부출연금	-	-	-	1,128	1,055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810	8,750	1,044	4,000	5,300
여유자금 회수	10,537	10,042	9,336	9,410	9,349
자체수입	894	741	570	694	1,734
합 계	12,241	19,533	10,950	15,232	17,438

【남북협력기금 조성】



2 남북협력기금 지출

2013년 지출계획은 사업비 1조 979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6,515억 원, 여유자금 운용 704억 원, 기금관리비 53억 원이 편성되었다.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사업비는 1조 979억 원 중 2,958억 원이 집행(사업비 기준, 계획 대비 집행률 26.9%)되었다.

사업별 집행 현황을 보면 사회·문화 교류지원사업으로는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에 21억 원을 지원하였다. 통일 어문규범의 토대 마련과 남북 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2005년부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회의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9만5천여 개의 새 어휘 발굴, 30만여 개의 1차 올림말을 선정하는 등 전체 공정의 약 66%를 진행하였다.

이산가족 교류지원을 위해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지원 등 총 31건 2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UNICEF, WHO의 북한영유아지

원사업 등 총 2건 132억 원을 집행하였다.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사업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경제협력사업 보험 199건 1,771억 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 지원 143억 원 등 총 307건 1,941억 원이 집행되었다. 북한의 근로자 철수 발표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남북협력기금 법규에서 정한 담보위험 중 ‘약정불이행위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를 구성하게 되어 경제협력사업에 따른 보험금을 지원하였다.

개성공단지원사업은 개성공단 기반조성 16건 96억 원, 개성공단 운영대출 115건 746억 원 등 총 843억 원이 집행되었다.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출입제한 및 가동중단 조치에 따라 경영위기를 겪는 개성공단 기업들을 위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555억원)을 시행하였고, 이밖에도 개성공단 출·퇴근도로를 보수사업(16억원) 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한편 만기가 도래하는 경수로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수함에 따라 이자 부담분만큼 원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 정부출연금 1,055억 원이 출연되었으며, 원금 5,300억 원을 포함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6,388억원이 집행되었다.

【남북협력기금 지출】

(단위 : 억 원)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비	사회·문화 교류	30	21	26	23	21
	인도적 문제 해결	315	212	103	28	153
	남북경제협력	356	497	179	457	1,941
	개성공단	299	133	119	185	843
	소계	1,000	863	427	693	2,958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1,159	9,305	1,086	5,161	6,388
여유자금 운용		10,042	9,336	9,410	9,349	8,062
기금운영비		39	29	27	29	30
합 계		12,240	19,533	10,950	15,232	17,438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부 록



부 록

- I. 남북관계 주요일지
- II. 남북관계 주요 통계
- III.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 IV.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I. 남북관계 주요일지

1월

- 1.1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
 - “튼튼한 안보로 평화를 지키고, 북한주민의 마음과 삶속에 시작된 조용한 변화의 움직임이 통일의 큰 물결로 넘쳐흐르기를 소망”한다고 언급
- 1.1 北 김정은, 육성 신년사 발표
 - “12년은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갈 담보를 마련한 해’로 평가, 위성발사 성공 등을 주요성과로 제시
 - ‘13년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는 창조와 변혁의 해”라며, ‘경제강국 건설’을 핵심과제로 제시
- 1.2 통일부장관 신년사
 -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성을 확대,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 △통일 준비에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실천을 담보하는 노력 계속” 강조
- 1.2 北 국방위 대변인 담화
 - “오늘 남북관계는 지난 5년처럼 또다시 대결과 전쟁이나 대화와 평화냐 하는 엄숙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주장
- 1.3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 “△‘동족대결에 매달리면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우리민족끼리 기치밑에 반통일 대결세력 반대투쟁에 나설 것’ 등 주장
- 1.7~10 美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방북
- 1.14 北 외무성 비망록
 - ‘유엔군사령부 해체’ 및 ‘평화협정 체결’ 주장
- 1.21 北 조선신보
 -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을시 조선의 핵보유 장기화는 불가피하고 비핵화 논의도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핵관련 최후통첩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음.”

- 1.23 05:10 유엔(UN) 안보리 결의 제2087호 채택(현지 시각 1.22 15:10)
 - 2012.12.12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
- 1.23 北 외무성 성명
 - “△유엔(UN) 안보리 대북결의 배경 △평화적 위성발사권리 계속 행사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1.23 외교부 대변인 논평
 - 정부는 이번 유엔(UN)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의 위반으로 규탄하면서, 제재대상 개인·단체 및 품목의 추가지정 등 기존 결의 1718호와 1874호 상의 대북제재조치를 강화·확대하고 있음을 평가함.
- 1.24 北 국방위 성명
 -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로켓,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될 것”
 -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있으나 조선반도 비핵화를 상정한 대화는 없음.”
- 1.24 美 국무부 브리핑
 -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거부할 경우 계속 고립에 직면할 것”
- 1.24 美 백악관 정례브리핑
 - “북한의 성명은 불필요하게 도발적이며, 추가 실험은 유엔(UN)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될 것임.”
- 1.25 北 조평통 성명
 - “△남북간 비핵화 논의 중단(‘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무효화) △反北 적대정책 추구하는자와 불상종 △‘남이 유엔(UN) 제재에 직접가담시 물리적 대응조치’ 등 주장
- 1.26 김정은,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 주관 중통 보도
 - △‘세계의 비핵화 실현 전에는 한반도 비핵화도 없음’,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강도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결심을 표명, 해당부문에 구체적 과업 제시’
- 1.28~29 北 ‘조선노동당 전당 당세포비서대회’ 개최
 - 김정은 개회사(1.28), 연설(1.29), 폐회사(1.29)

2월

- 2.2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 “경제든 군사든 어떤 형태의 제재로 존엄과 자주권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린다면 보복의 불벼락을 면치 못할 것” 위협
- 2.2 北 외무성 대변인 중통 대답
 - “北 위성발사는 부정하며 南 위성발사는 감싸주는 미국은 이중기준과 철면피성의 극치”라고 주장
- 2.3 北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
 - △군력강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문제와 조직문제 토의, △김정은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대한 결론 도출
- 2.6 北 민경협 대변인 담화
 - “만일 그 누가 어떤 형태로라도 공업지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회할 것” 주장
- 2.9 北 조국통일연구원 10대 죄행록 발표, 이명박정부 5년간 대북정책 평가·비난
 - △남북공동선언유린죄 △반공화국 핵·미사일소동죄 △남북대화파탄죄 등
- 2.11 北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회의 개최
 - ‘정권수립일(9.9절) 65돌과 정전협정체결일(7.27) 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 데 대하여’ 결정서 채택
- 2.12 11:57 北 함북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3차 핵실험 강행
- 2.12 13:00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 2.12 14:30 정부 성명 발표
 - ‘북한은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
 -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핵포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 2.12 14:43 北, ‘제3차 핵실험 성공적 진행’ 발표
 -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 사용, 다종화된 핵역제력의 우수한 성능 과시” 등 주장
- 2.12 15:00 이명박 대통령-박근혜 당선인 긴급회동

• 2.12 20:01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 “이번 핵실험은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한 1차적 대응조치, 미국이 적대적으로 나오면 강도 높은 2·3차 대응조치 취할 것”이라고 위협

• 2.12 유엔(UN) 안보리 등, 北 3차 핵실험 관련 성명 등 발표

- △유엔안보리 언론성명(강력규탄, 추가제재 논의 착수) △美 백악관 성명(심각한 도발 행위), △中 외교부 성명(단호히 반대), △日 총리 성명(매우 유감) 등

• 2.14 北 노동신문 정론

- “제국주의가 핵무기를 잡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잡아야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우리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 함.” 주장

• 2.23 北 판문점대표부 대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통지문 발송

- 키리졸브·독수리훈련 계획 관련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다면,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이 될 것: 위협

• 2.25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람.”
-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함.”
- “확실한 역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음.”
-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음.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람.”

• 2.27 北 조선신보, 대통령 취임사(2.25) 이후 첫 반응

- “핵문제를 대화·접촉의 전제조건으로 걸면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이 과거 5년의 교훈”이라고 하며, “새집권자가 전임자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강조

3월

• 3.1 대통령 3.1절 경축사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지할 때, 남북한 공동 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제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3.5 北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 한미 합동군사훈련 관련 △2차·3차 대응조치 △조선정전협정 백지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활동 중지 및 판문점 북미군부전화 차단 등 중대조치 주장·발표

• 3.6 국방부, '北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3.5)에 대한 입장' 발표

-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지원 및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임."

• 3.7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

- 유엔안보리 제재 및 한미 합동군사훈련 관련, "외교적 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응만 남았으며 핵선제타격 권리 행사" 등 위협

• 3.8 유엔(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 채택

-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북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강화

• 3.8 北 조평통 성명

-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 전면폐기, △비핵화 공동선언 완전 백지화, △판문점 연락통로 차단" 등 주장

• 3.8 통일부 대변인 논평

- "조평통의 「남북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파기선언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모든 합의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쌓아가는 길에 나서야 할 것임."

• 3.8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임."

• 3.8 대통령 국군장교 합동 임관식 축사

-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처할 것임. 그러나,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선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과 조국 통일의 길을 탄탄히 닦아 나갈 것임."

• 3.9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

- "안보리 결의 규탄 및 전면 배격, 핵보유국 지위와 위성 발사국 지위 영구화" 등 주장

• 3.21 北 최고사령부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 B-52 폭격기 비행훈련 및 핵잠수함 훈련참가는 "미국의 노골적인 핵공갈과 위협, '우리도 그에 상응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 등 위협

• 3.21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규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 1년 연장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설치 등

• 3.22 北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전면 배격' 주장

• 3.22 통일부, 유진벨 재단 결핵약품(6억 7,800만원 상당) 대북지원 승인

• 3.26 北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

-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 남측 당국자들에게도 우리(北) 군의 초강경의지를 물리적 행동으로 보여주게 될 것" 등 위협

• 3.26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 소위 김父子 동상 타격 관련, '청와대 안방에서 풍겨내는 독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청와대를 비롯한 대결모략 소굴들을 짓밟게 버릴 것' 등 주장

• 3.26 北 외무성 성명

- '韓美 핵전쟁 상황 조성(B-52폭격기 훈련, 김父子 동상 타격 발언 등) 안보리 통고, 전면대결결의 최후단계 진입' 등 위협

• 3.27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

- 2013년 중점 추진과제 보고

• 3.27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대남 통지문 발송

- "남북군통신 단절 및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통신연락소 북측 인원 활동 중지"

• 3.29 0시 30분 北 김정은, 전략로켓군 화력타격임무수행 관련 작전회의 긴급소집 및 화력타격계획 최종 비준

• 3.30 北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 발표

- "남북관계는 전시상황에 돌입, 군사적 도발시 전면·핵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 등 위협

• 3.30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

-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차단·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

• 3.31 北 당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4.1)에 제출할 간부문제 및 조직문제에 대한 의정들을 상정하고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

4월

• 4.1 北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 개최

- △'자위적 핵보유지위공고화' 관련 법 및 '국가우주개발법' 채택 △박봉주 총리 임명 등

• 4.2 北 원자력총국 대변인 중통기자 답변

- "영변의 모든 핵시설 및 무력화된 5MW 흑연감속로 재정비·재가동 조치 실행" 주장

• 4.3 北, 개성공단 출경 차단(北⇒南 입경만 허용)

• 4.4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 미군 무력증강(B-52·F-22 편대 등) 배치 관련, "무자비한 작전이 최종검토·비준된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펜타곤에 통고"한다고 위협

• 4.4 北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답변

- "남 보수언론이 못된 입질을 계속한다면 北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겠다"고 위협

• 4.5 北 외무성, 평양주재 외교단·국제기구 등에게 4.10까지 출국 권고

• 4.8 北 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 "개성공업지구사태와 관련한 중대조치를 취함에 대하여" 담화 발표

- "△개성공업지구 종업원 전부 철수 △개성공업지구사업 잠정중단, 존폐여부 검토"

• 4.9 北 아태 대변인 담화

- "남한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사전 대피 및 소개대책 세워야 할 것" 위협

• 4.11 통일부장관 성명

-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람"

• 4.13 한미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

-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9·19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음"

• 4.14 北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답변

- 대화제의(4.11)는 "교활한 술책"이며, "앞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

• 4.16 북한군 최고사령부 최후통첩장

-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중지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4.16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 미국의 대화제의는 '교활한 술책'이며, 미국이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핵억제력을 갖춘 후에나 가능"하다고 주장

• 4.18 北 국방위 정책국 성명

- "대화과 협상을 바라다면 △유엔(UN) 제재 철폐, △핵전쟁연습 중지 선언, △핵전생수단 전면 철수 등의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4.18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 "최고준엄을 모독하고, 북침전쟁연습에 매달리며, 제재책동에 광분하는 한 그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

• 4.25 통일부 대변인 성명

-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

- "북한이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

• 4.26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 4.25 회담 제의는 "우리를 우롱하는 최후통첩식 중대조치"라고 비난하며, "우리가 먼저 중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

• 4.26 대한민국 정부 성명

-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음."

- "입주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해 나갈 것임."

• 4.27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답변

-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히 폐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며 비난

5월

- 5.3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7명, 북한과 임금·세금 문제 등 협의 후 귀환
 - * 개성공단 기업관계자 4.27, 4.29 2차례에 걸쳐 169명 귀환
- 5.5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중통기자 답변
 - “北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중지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할 것”이라며 “바로 여기에 개성공업지구 운영이 정상화 되는 길이 있다”고 주장
- 5.8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발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토록 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
- 5.14 통일부 대변인 성명
 - 개성공단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
- 5.14~17 日 이지마 이사오(내각 위기관리 특별담당 보좌관) 방북
- 5.15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중통기자 회견
 - “우리(北)측은 5.3 南 인원 철수 때 남측에 관계자 출입과 입주기업가 방문, 물자 반출 허용 의사 표명 및 날짜까지 제시”했다고 주장
- 5.16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 “5.3 북측 관계자가 미수금 정산 및 시설관리 등을 위한 방북은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남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날짜를 제시한 바는 전혀 없음.”
- 5.18~20 北, 동해안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
- 5.19 통일부 대변인 성명
 - “북한이 자재·제품 반출 문제 협의 용의를 표명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시점에야 제기된 것으로서 진정성이 의심스러움.”
 -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5.20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중통기자 대답
 - “지금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제품의 반출보다 더 절박한 것은 공업지구가 깨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라고 하며 “여기에 남북관계의 전도가 달려 있다”고 주장

5.21 통일부 대변인 논평

- ‘북한이 개별기업들에 팩스를 보내 우리정부와 기업간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무언 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임.’
- 5.22~24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 訪中
- 5.22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행사’ 개성 또는 금강산 개최 제의
- 5.25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대통령 첫 실명 비난
- 5.28 통일부 대변인 성명
 -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대화제의를 거부하면서, 민간단체를 상대로 6.15 공동행사 개최를 제의하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당국간 대화에 호응해야 함.’
- 5.28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 △‘6.15 공동행사 남측단체 참가 허용’ 요구 △‘공단 입주기업 방문시 제품반출문제 포함 공단정상화 문제 협의’ 등 주장
- 5.28 통일부 대변인 성명
 - ‘개성공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임의대로 공단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적 규범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함.’

6월

- 6.2 정부, ‘6.15 남측위’의 6.15 공동행사 대북 협의를 위한 개성방문 불허
- 6.5 北 적십자중앙위 대변인 담화
 - 라오스 탈북 청소년 관련, ‘韓美가 北 청소년들을 유괴·납치하고 있다’며, 사죄 요구
- 6.6 北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
 - 개성·금강산 당국회담 및 6.15·7.4공동성명 남북공동 기념행사 등 제의
- 6.6 통일부장관, 남북 당국간 회담 관련 정부 입장 발표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6.12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6.7 北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6.9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6.7~8 美-中 정상회담

-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양국간 협력 강화에 합의

• 6.9~10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개최(판문점 평화의 집)

- 6.12~13 남북당국회담 개최(서울)에 합의하였으나, 수석대표의 급(級)과 의제 관련 이견으로 남북은 협의결과를 발표문 형식으로 각기 발표

• 6.11 北 우리측 수석대표를 문제삼아 '남북당국회담 대표단 파견 보류' 통보

• 6.11 「남북당국회담 관련 정부입장」 발표

- '수석대표 급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국민들의 상식과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에 남북당국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

• 6.13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 남북당국회담 무산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며, 실무접촉 과정을 일방적으로 왜곡·공개

• 6.16 北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 발표

- 北美 당국간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의제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핵없는 세계건설 문제 등 제시

• 6.17 美 백악관 NSC 대변인, 북한의 중대담화 관련 입장 발표

- '미국은 북한과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원하며, 북한이 유엔(UN) 결의안 및 비핵화를 포함하는 국제의무를 준수해야만 함. 미국은 북한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할 것임.'

• 6.18~22 北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방중, 북중 전략대화 개최

• 6.19 韓·美·日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워싱턴)

• 6.19 北 인민보안부 특별담화

- 탈북자들을 내세워 '北 존엄·체제 중상모독'을 실시한다고 주장하며, 탈북자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 단행' 위협

• 6.21 韓·中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베이징)

• 6.21 유엔(UN) 주재 북한대사 기자회견 실시

- 유엔군 사령부 해체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 주장

• 6.27 北 조평통 대변인 긴급성명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상대측 승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도발' 이라고 주장

• 6.27 韓-中 정상회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

- '핵무기 개발은 동북아에 심각한 위협', '한반도 비핵화가 한중 공동이익에 부합' 등

7월

• 7.1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6.30~7.2) 韓·美·日 외교장관 회담

-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데 공감대 확인

• 7.2 北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방려, 김성남 당 국제부 부부장 방중

• 7.3 北 개성공단 관련 통지문을 관리위원회와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에 전달

-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공단 방문을 허용하고, 필요한 협의를 하자는 내용

• 7.4 정부,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개최 공식 제의

- 시설 점검·완제품 반출 및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 협의 목적

• 7.6~7 「제1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통일각)

-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및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기본입장 설명

- △시설·장비 점검, △원자재 및 설비 반출, △신변안전 보장 문제, △후속회담 일정 등 4개 항에 합의

• 7.10 「제2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개최(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 재발방지 보장과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방안 집중 논의

• 7.10~19 개성공단 기업인 등 방북, 개성공단 시설·설비 점검 및 물자 반입 진행

• 7.15 「제3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개최(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 7.17 「제4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개최(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 7.17 파나마 정부, 쿠바를 출발해 북한으로 가던 북한국적 선박 '청천강호' 억류

- 7.17 북한 외무성, '청천강호'에 대한 입장 발표
 - 선적은 합법적으로 수리 후 쿠바에 돌려줘야 하는 낡은 무기라고 주장하며, 억류된 선원들과 배의 출항 요구
- 7.18 「동아시아컵 축구대회」(7.20~28, 서울·화성) 참가 북한 여자선수단 등 총 36명 입국
- 7.22 「제5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개최(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 7.23 북한, 장마철 수해 발생 관련 유엔(UN)에 긴급 수해지원 요청 및 피해규모 통보
- 7.25 「제6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개최(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 재발방지 보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북한측이 사실상 회담 결렬을 선언
- 7.27 정부,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기념식」(서울 전쟁기념관) 개최
 -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및 DMZ 평화공원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
- 7.27 미국,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기념식」(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개최
 - 오바마 대통령, “6.25는 무승부 아닌 한국이 승리한 전쟁” 언급
- 7.27 北 「전승절 60돌 기념행사」 개최
 - 軍 열병식, 군중시위, 전승기념관 개관식, 축포·연회 등
 - 同 행사 참석차 中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 방북(7.25~28)
- 7.28 개성공단 및 인도적 지원 관련 통일부장관 성명 발표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북측의 재발방지 보장을 촉구하면서 마지막 회담을 제의
 -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추진 의사 표명
- 7.29 통일부장관 명의 대북 전통문 발송
 -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 제의
- 7.29 정부 5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승인
 - 대상 및 품목 : 북한 영유아·초등생 대상 의약품·영양식 등 지원
 - 5개 단체 : 민족사랑나눔, 섬김, 푸른나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어린이 어깨동무
- 7.29 美 국무부, '카터 전 대통령 방북 및 특사파견 계획이 없다'는 입장 발표

- 7.29 데이비드 코언 美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 방한
 -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 조율
- 7.31 北 노동신문, 한미 UFG 훈련 계획 비난
 - “한반도 정세는 다시금 예측할 수 없는 엄중한 전쟁폭발 국면에 처하게 된다.”

8월

- 8.3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故 정몽헌 前회장 10주기 추모식 참석차 방북(금강산)
- 8.4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
 - 북한이 진심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 해소를 원한다면,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야 함.
- 8.5 정부 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등에 대한 기금지원 결정(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UNICEF(604만\$),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사업 의결
- 8.7 정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험보험금 지급 결정(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7월말 기준, 109개 기업이 신청한 2,809억원 의결
- 8.7 北 조평통 대변인 특별 담화, 8.14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 8.7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 관련 정부입장 발표
 -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하며, 북측이 제안한 대로 8.14 실무회담 수용
- 8.13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모니터링 방북 승인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8.14~17, 평양), △어린이어깨동무(8.14~17, 남포)
- 8.14 「제7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개최(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재발방지 및 정상운영 보장 △신변안전 보장 △국제화 추진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재가동 적극 노력 등)
- 8.15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추석 전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대북 제안

- 8.16 한적,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한 대북 수해 지원 결정(10만불 상당)
- 8.16 南 통지문
 - 이산가족 상봉 관련 적십자 실무접촉(8.23, 「평화의 집」) 개최 제의
- 8.17 개성공단 시설 점검인력 방북, 기반시설 점검·보수 시작
- 8.18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실무접촉(8.23) 장소를 '금강산'으로 수정 제의,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8.22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8.18 유엔(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 일행 방한(8.18~8.27)
- 8.19 南 통지문
 - 적십자 실무접촉 장소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재차 제의
 - 금강산 관광 관련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검토 후 입장을 밝힐 것임을 통지
- 8.19 南-北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관련 협의 (판문점 연락관 채널)
- 8.20 北 통지문
 -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금강산 관광 문제와 연계하면서, 실무접촉 장소를 '금강산'으로 재차 제의
- 8.20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 2013 UFG 관련 최초 공식 비난
- 8.20 南 통지문
 - 적십자 실무접촉은 금강산 문제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에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8.23 개최
 -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은 9.25 '금강산' 개최 입장을 전달하면서 △UFG 관련 비난에 유감 표명
- 8.21 통일부장관 내외신 기자간담회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설명 및 리플릿·소책자 등 설명자료 배포
- 8.21 「2013 광주 국제 리더십 프로그램(YLP)」 참가 북한 청소년 4명 방한(8.21~9.4)
- 8.22 北 통지문
 - 적십자 실무접촉 8.23 판문점 「평화의 집」 개최 수용
 - 금강산관광 관련 회담은 8월 말~9월 초 '금강산' 개최 제안

- 8.23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판문점 「평화의 집」)
 -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9.25~30) 및 화상상봉(10.22~23) 합의
 - 11월 안에 상봉행사를 한차례 더 진행하는데 공감하고, 상봉 직후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 합의
- 8.24 北 최룡해 총정치국장 선군절 중앙보고대회 보고
 - “평화는 더없이 소중한데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고 언급
- 8.26 中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한반도사무특별대표) 일행 방북(8.26~8.30)
- 8.28~29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금강산 시설 점검 실시
- 8.28 대통령, 민주평통 제16기 전체회의 대회사
 - '원칙'과 '신뢰',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한 대북정책 추진 강조
- 8.29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상설 사무처·분과위 설치 △공동위 제1차 회의는 9.2 개성공단 개최 등 합의
- 8.29 이산가족 상봉 관련, 남북 '생사확인 의뢰서'(南 250명, 北 200명) 교환
- 8.29 남북 오토바이 종단 뉴질랜드인 5명, 군사분계선을 넘어 입국
- 8.29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 UFG 기간 B-52H 폭격기 출격을 “로골적인 핵공갈” 등으로 비난
 - 진정한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건설적이고 과감한 평화적 조치들 검토중 언급
- 8.30 北 로버트 킹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초청 철회

9월

- 9.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차회의 개최
 - 공동위 산하 분과위(9.4~5) 및 공동위 2차회의(9.10) 일정 합의
 - 상설사무처 구성·운영 및 기업 피해보상 문제 등 협의
- 9.2 북한 취약계층 대상 의약품·영양식 등을 지원하는 국내 12개 민간단체 반출 승인 및 WHO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630만불) 기금 지원 계획 발표

• 9.3 南 판문점 연락관 채널

– 이산가족 숙소로 외금강호텔·금강산호텔 사용 입장 전달

• 9.4 北 통지문

– 금강산관광 예약으로 외금강호텔·금강산호텔을 이용할 수 없으며 해금강호텔·현대생활관을 사용할 것을 제의

• 9.4 개성공단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1차회의 개최

–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문제 △공동투자설명회 △우수 해외공단 시찰 문제 등 논의

• 9.5 南 통지문

– 안전성·수용규모 등을 고려할 때, '09년·'10년 상봉행사시 숙소로 사용한 외금강호텔과 금강산호텔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

• 9.5 개성공단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1차회의 개최

– △출입·체류상 신변안전 보장 방안 등 논의 △서해 군통신선 9.6 재개 합의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9.7 남북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

• 9.10 「2013년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9.12~17, 평양)」 우리 선수단 41명 방북

• 9.10~11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2차회의 개최

– △공동위 산하 분과위(9.13) 및 3차 공동위 개최(9.16) △9월중 공동위 사무처 가동 △9.16부터 개성공단 재가동 △금년중 1일 단위 상시통행, 인터넷·이동전화 통신 연내 개통을 위한 협의 지속 △10월중 외국기업 대상 투자 설명회 △2013년도 기업 세금 면제 등에 합의

• 9.13 남북, 이산가족 상봉후보자들의 생사확인 회보서 교환(판문점)

• 9.13 개성공단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2차회의 개최

• 9.16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3차회의 개최

– △공동위 사무처 개소를 위한 실무협의 9.24 개최, △공동투자설명회 10.31 개성 개최 합의

• 9.16 개성공단 재가동 시작

• 9.16 이산가족 상봉 최종명단(南 96명, 北 100명) 교환

• 9.18 6자회담 10주년 기념 1.5트랙 세미나(베이징)

– 북한은 중국과의 공조체제 구축 노력 및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주장
–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재확인

• 9.20 이산가족 상봉행사 선발대 방북

• 9.21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방 연기 발표

–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 연기’ 주장

• 9.21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

–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불과 4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

• 9.22 북·러,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구간 개통식(나진항)

– 전길수 북한 철도상,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등 참석

• 9.24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 관련 남북간 실무협의 실시(개성)

– 9.30 개소식 진행 및 9.26 ‘출입·체류’ 및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3차회의 개최 등에 합의

• 9.25 2013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 심의

• 9.25 北 서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 3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연기 통보

• 9.26 개성공단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3차회의 개최

– 신변안전 문제와 범위반시 조사절차, 합의서 적용범위 등에 대해 의견 조율

• 9.26 미중 외교장관회담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 유지 등 일관된 대북정책 공조 재확인

• 9.30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

10월

• 10.1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구축해야 함.”

- 10.1 北 박길연 외무성 부상, 유엔(UN)총회 연설
 - 美 대북정책 비난 및 핵군축회담을 통한 '핵 없는 세계' 건설 주장
- 10.1~2 북-미간 트랙2 회의 개최(런던)
 - 北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미 스티븐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참석, 6자회담 재개 방안 등 논의
- 10.4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 국군의 날 기념사 등을 소재로 대통령 발언 비난 등 비방중상 재개
- 10.4 통일부 대변인 성명
 - 북한의 비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상호존중에 입각한 품격있는 언행 촉구
- 10.7 APEC(발리) 계기 한중 정상회담
 -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핵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
 - 대통령,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협력하여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시진핑 中 국가주석, "북한의 핵보유 및 추가적인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 "안보리 대북제재 준수 및 북핵문제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
- 10.7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 "한·미가 미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이고 북침 핵전쟁 도발 기도를 드러내면서 북핵 포기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
- 10.7 통일부 대변인
 - 최근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비방중상을 중단하고 남북관계에 성의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
- 10.8 北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 한·미간의 '맞춤형 억제전략', 합동해상훈련 등을 비난하며, '모든 군부대에 동원태세 긴급지시 하달' 등 대남 위협
- 10.8 통일부 대변인 성명
 -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방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자극적 언행이 북한의 고립을 자초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
 - "북한에게 1명의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존엄이 있음. 개개인이 모두 존엄인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는 안 됨."

- 10.9 ASEAN+3/EAS 계기 한-미얀마 정상회담
 - 대통령, "북한이 미얀마의 개혁개방정책을 본받아 진정한 변화와 평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
- 10.10 북한에 억류중인 케네스 배 모친 방북
 - 평양친선병원에서 케네스 배 면회
- 10.11 정부, 개성공단 공동 투자설명회 연기 요청 (당초 10.31 예정)
 - 3통 문제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의 반응을 고려할 때 10.31로 예정되었던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공동 투자설명회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
- 10.12 조계종 관계자 20명 방북, 「신계사 낙성 6주년 기념 남북합동법회」 개최
- 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에 개성공단 현장방문을 공식 요청
- 10.14 신선호 유엔(UN) 주재 북한대사, 유엔총회 제1위원회 기조연설
 -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전보장 요구
- 10.15 北, 개성공단 공동 투자설명회 관련 연기 동의
 - "지금과 같은 때에 투자설명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
- 10.16 외교통일위원회 개성공단 방문 입장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북측에 전달
- 10.16 北,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 10.17 대북 인도지원 모니터링을 위한 민간단체 방북 승인
 - 「나눔인터내셔널」(10.19~22), 「남북평화재단」(10.19~23), 「남북함께살기운동」(10.23~26) 등 3개 단체, 총 12명 방북 승인
- 10.18 대통령 「유라시아 컨퍼런스」 기조연설
 -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
- 10.23 통일부장관, 금강산기업인협의회 관계자 면담
 - 관광 중단 이후 금강산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청취
- 10.23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 선택포기가 아닌 '동시행동으로' 수 조선을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이 정책목표'라며, '핵위협 가중시 핵억제력 강화' 주장

- 10.23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 체결
 - △업무 시간, △남북간 정례회의 및 업무협의 계획, △남북 사무처 인원들의 통행·통신방법, △업무협조체계
- 10.24 北,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현장방문 수용 입장 전달
- 10.24 北 통지문
 - '불법입국 하였다가 단속된 우리측 인원 6명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을 통보
- 10.24 南 통지문
 - 우리측은 '북측이 그동안 신원확인 요청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늦었지만 이들을 돌려보내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 전달
- 10.25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우리 국민 6명과 유해 1구 인수
- 10.26 우리 해군·해경, 기관 고장으로 동해상에 표류하던 북한 어선 1척(북한주민 4명 승선)을 구조해 10.27 북한측에 인계
- 10.30 국회 외통위 위원 개성공단 현장방문
 - 외통위원 21명, 기자단 10명, 지원인력 등 총 47명)
 - △공단현황 브리핑 청취 △관리위원회 방문 △입주기업 방문 및 오찬 간담회 △정배수장·소방서·변전소 등 주요 시설 시찰

11월

- 11.4 한국·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 대통령,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
- 11.6 한·영 정상회담 공동성명
 - 대통령,북한이 유엔(UN)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이 될 것을 촉구
- 11.7 천태종 장영덕 총무원장 등 21명 개성 방북
 - 영통사 낙성 8주년 및 대각국사 의천 912주기 열반 다례제 남북합동법회」 개최

- 11.7 北 국가안전보위부 보도
 - '제3국을 통해 밀입북한 남한 정보원 첩자 체포조사중'이라고 주장
- 11.8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산하 3개 분과위원회 개최(11.13~14) 합의
- 11.9~13 평화3000 박창일 신부 등 12명 방북
 - 「평양 장충성당 설립 25주년 미사 봉헌」
- 11.13 한·러 정상회담 개최
 - △나진-하산 물류사업 a:c 조선·북극 협력 등 실질적 협력 강화방안 △양국간 인적·문화 교류 증진 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고 3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
- 11.13 개성공단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상사중재위원회 구성문제와 개성공단 관리운영 문제에 대해 논의, 12월 초 상사중재위원회 명단을 상호 교환하고 중재위원회 구성 이후 중재규정 논의 등을 진전시켜 가지는데 합의
- 11.13 개성공단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투자설명회·해외공동시찰 등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우리측은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3통 분과위를 조속히 개최해야 함을 강조
- 11.14 개성공단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위법행위 발생시 입회조사, 조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된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초안에 대해 협의
- 11.15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 우리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시 대북발언 관련 '핵포기는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라는 것'이라며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해 재차 거리지 말고, 국가원수로 대접받으려면 똑바로 처신하라.'고 비방
- 11.15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핵해무익한 비방을 중단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것을 촉구
 - "북측이 사용한 저속한 표현들이 북측의 지도자에게 그대로 사용된다면 자신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강력 대응
- 11.18 대통령, 2014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 및 임기 중 평화통일 기반 구축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강조
- 11.19~25 美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중·한·일 순방

- 11.19 유엔(UN) 인권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
 - △ 북한내 정치범의 조건없는 즉각 석방 △ 강제복송된 탈북민 처우 개선 △ 인권 상황 공개 촉구 등
- 11.20 北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
 - "남조선의 모든 진보·민주세력들은 연대·연합해 유신 독재 부활을 배격하자."고 반정부 투쟁 선동
- 11.22 北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 담화
 - "무모한 도발이 재연된다면 연평도 불바다가 청와대 불바다로, 통일대전의 불바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
- 11.22 통일부 대변인 성명
 - 북한이 우리 사회 내부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려는데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북한의 우리 인원 체포 주장과 관련, '우리 국민의 신원확인' 요구에 대해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
- 11.22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기광서 기획총괄위원장 등 9명 개성 방문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 협의
- 11.25 우리측은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11.29 개최 제의
 - 11.26 북측 동의
- 11.25-26 우리측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원확인 및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전달
 - 북한측, 수령 거부
- 11.26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구조(11.22)된 북한 선원 1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
- 11.29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기 위한 RFID공사 개시,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한 현장방문, △인터넷 연결 등을 위한 통신분야 실무접촉, △군통신 분야 실무접촉 개최 합의

12월

- 12.3 우리측 △우리 국민 신원확인 △석방 △송환 촉구 대북 구두 통지(판문점 연락관)
 - 북한측, 접수 거부
- 12.4 통일부장관, 전후 귀환납북자(6명) 간담회
- 12.6 나눔인터내셔널·한국카리타스·섬김 등 3개 단체의 北 탁아소, 유치원 등 영유아 및 환자 대상 의약품·뱃재료 등 11.7억원 상당 대북지원 반출 승인
- 12.6 대통령,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美 부통령 접견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미 양국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함.
- 12.6 개성공단 통신 분야 및 군통신 분야 실무협의 개최(종합지원센터)
 - △통신 분야 실무협의에서는 인터넷 연결 방식 등에 대해 토의, △군통신 분야 실무협의에서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통행 보장을 위한 북측의 자재장비 제공 요청 등 청취
- 12.7 北,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이유로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메릴 뉴먼(Merrill Newman)을 42일만에 석방
- 12.8 北,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
 - 장성택을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로 출당·제명(12.9 보도)
 - 주요 죄목 : △종파·반혁명 행위, 최고사령관 명령 불복, △사법·보안기관의 당적 지도 약화, △경제지도기관(내각)의 역할 무력화, △마약, 여자관계, 외화 탕진, 도박 행각 등
- 12.11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 시작
- 12.11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우리측 위원 명단(5명) 대북 통보
- 12.12 北,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 장성택 죄목을 '국가전복음모죄'로 규정,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 판결 및 즉시 집행 보도(12.13)
- 12.12 北,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제4차 회의 12.19 개최 제의
 - 「G20 서울 컨퍼런스」 대표단 30여명의 개성공단 방문 계획(12.19) 수용
- 12.13 우리측,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제4차 회의 12.19 개최 제의에 대해 동의

• 12.13 통일부 대변인 성명

- 장성택 처형 관련 "정부는 최근 북한 내 전개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차분한 가운데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을 발표

• 12.16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장관회의 개최

- 장성택 숙청 등 북한 내부정세 변화와 관련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

• 12.17 北, 김정일 사망 2주기 중앙추모대회(평양체육관) 개최

• 12.17 국제사랑재단·어린이깨동무 등 2개 단체의 북한 어린이 대상 분유·이유식·기초 의약품 등 8.5억원 상당 인도적 지원 승인

• 12.19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종합지원센터)

-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 재가동 이후 남북간 합의 이행상황 점검
- △RFID 공사 및 일일단위 상시통행, 인터넷 서비스 등 3통 문제, △출입체류 부속합의서 채택 문제, △노무·임금 등 관리운영 문제 등에 대해 협의

• 12.19 「G20 서울 컨퍼런스」(12.18-19, 서울) 계기, G20 및 국제금융기구 대표단 일행 개성공단 방문

* 대표단 25명, 내외신 기자 및 지원인력 29명 등 총 54명

• 12.19 北 국방위 정책국 서기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 통지문 발송

-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특대형 도발을 반복한다면 가차 없는 보복행동이 예고없이 무자비하게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

• 12.19 南 국방부, 北 국방위 통지문에 대해 "북측이 도발시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대응

• 12.20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조직 강화 방안 발표

- △NSC 상임위원회 및 NSC 사무처 설치 △안보전략비서관실 신설 등

• 12.24 어린이재단·남북평화재단 등 2개 단체의 북한 취약계층 대상 영양식 재료 등 2.1억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 승인

• 12.24 대통령, 최근 북한 내부동향 관련 철저한 안보태세 구축 강조

• 12.25 北 조평통 서기국 공개질문장

-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고, "평화와 통일, 대결과 전쟁중에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12.26 통일부 부대변인 명의 北 조평통 서기국 공개질문장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 "공개질문장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일일이 답변할 가치가 없음."

- "신뢰인지 대결인지의 문제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음."

• 12.26 北,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복측 위원 명단(5명) 통보

• 12.3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민족사랑나눔 등 2개 단체의 북한 영유아·결핵환자 대상 영양뺑재료·이유식·결핵약 등 2.4억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 승인

II. 남북관계 주요 통계

1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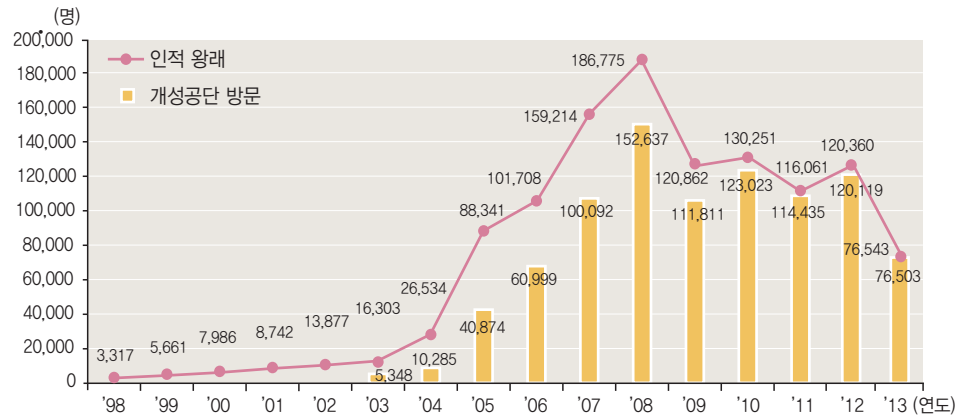
① 남북 왕래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89~'00	'01	'02	'03	'04	'05	'06	'07
남 → 북 (방북)		18,601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북 → 남 (방남)		1,343	191	1,052	1,023	321	1,313	870	1,044
계		19,944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구분	연도	'08	'09	'10	'11	'12	'13	계
남 → 북 (방북)		186,443	120,616	130,119	116,047	120,360	76,503	1,177,594
북 → 남 (방남)		332	246	132	14	0	40	7,921
계		186,775	120,862	130,251	116,061	120,360	76,543	1,185,515

* 금강산 등 관광인원 제외



② 금강산/개성/ 평양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금강산 관광	해로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38,306	449	-
	육로	-	-	-	-	-	36,028	267,971	298,247
	합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개성 관광		-	-	-	-	-	-	-	1,484
평양 관광		-	-	-	-	-	1,019	-	1,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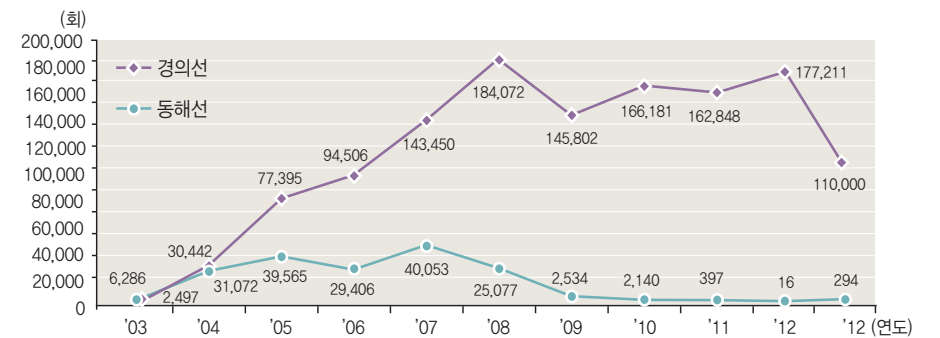
구분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계
금강산 관광	해로	-	-	-	-	-	-	-	-	552,998
	육로	234,446	345,006	199,966	-	-	-	-	-	1,381,664
	합계	234,446	345,006	199,966	-	-	-	-	-	1,934,662
개성 관광		-	7,427	103,122	-	-	-	-	-	112,033
평양 관광		-	-	-	-	-	-	-	-	2,299

③ 남북 차량 왕래 현황

(단위 : 회)

구분	연도	'03	'04	'05	'06	'07	'08
차량 (운행 횟수)	경의선	2,497	30,442	77,395	94,506	143,450	183,085
	동해선	6,286	31,072	39,565	29,406	40,053	25,077
	합계	8,783	61,514	116,960	123,912	183,503	208,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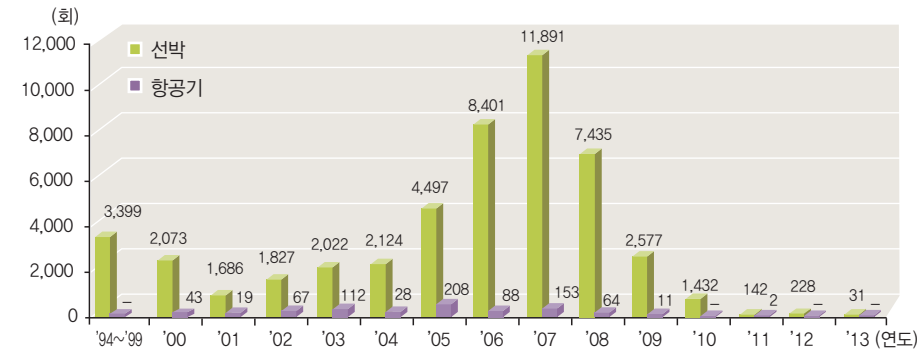
구분	연도	'09	'10	'11	'12	'13	계
차량 (운행 횟수)	경의선	145,802	166,181	162,848	177,211	110,000	1,293,417
	동해선	2,534	2,140	397	16	294	176,840
	합계	148,336	168,321	163,245	177,227	110,294	1,470,257



④ 남북 선박·항공기 왕래 현황

(단위 : 회(편도))

연도 구분	'94~'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선박	3,399	2,073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7,435	2,577	1,432	142	228	31	49,765
항공기	-	43	19	67	112	28	208	88	153	64	11	-	2	-	-	795



② 남북교류협력 현황

① 남북교역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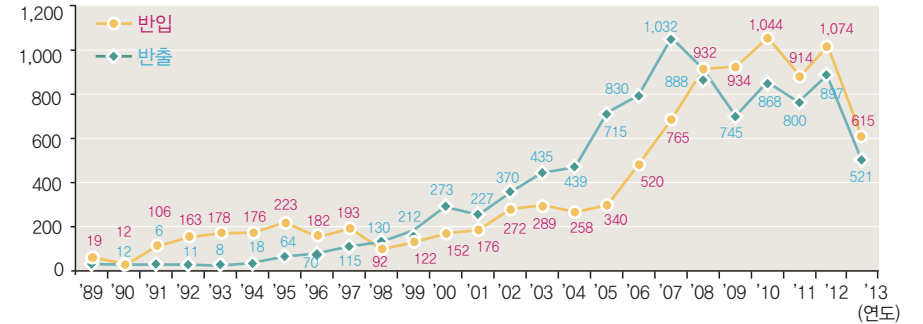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반출	0	1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합계	19	13	111	173	187	195	287	252	308	222	333	425	403	642

연도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
반입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1,074	615	9,752
반출	435	439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897	521	9,676
합계	724	697	1,056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971	1,136	19,428

※ 반올림으로 인해 각 년도의 반입/반출 '소계'와 '합계'가 다를 수 있음. 1백만 달러 이하는 '0'으로 표시

(백만 달러)



② 남북교역 건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반입	66	79	300	510	601	708	976	1,475	1,806	1,963	3,089	3,952	4,720	5,023
반출	1	4	23	62	97	267	1,668	1,908	2,185	2,847	3,421	3,442	3,034	3,773
계	67	83	323	572	698	975	2,644	3,383	3,991	4,810	6,510	7,394	7,754	8,796

연도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반입	6,356	5,940	9,337	16,412	25,027	31,243	37,307	39,800	33,762	36,504	20,566	287,522
반출	4,853	6,953	11,828	17,039	26,731	36,202	41,293	44,402	40,156	45,311	25,562	323,062
계	11,209	12,893	21,165	33,451	51,758	67,445	78,600	84,202	73,918	81,815	46,128	610,584

③ 남북교역 품목수 현황

(단위 : 개)

연도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반입	24	23	43	69	69	80	109	130	143	136	172	204	201	204
반출	1	3	16	25	37	87	167	167	284	379	405	527	492	493
계	25	26	57	92	103	158	244	258	365	449	488	578	549	570

연도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반입	186	202	381	421	450	482	486	448	363	377	359	823
반출	530	575	712	697	803	813	771	740	676	705	644	1,101
계	588	634	775	757	853	859	822	795	702	731	674	1,118

※ 품목은 반입과 반출에서 중복되는 관계로, 「계」는 항목 간 합과 일치하지 않음.

④ 유형별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남북교역 유형	'05	'06	'07	'08	'09	'10	'11	'12	'13
반입	일반교역·위탁가공	320	441	646	624	499	334	4	1	1
	경제협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 기타·경공업협력)	20	77	120	308	435	710	909	1,073	615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 / 사회문화 협력 / 경수로사업)	0	1	0	0	0	0	1	-	-
	반입 합계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1,074	615
반출	일반교역·위탁가공	99	116	146	184	167	101	-	-	-
	경제협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 기타·경공업협력)	250	294	520	596	541	744	789	888	518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 / 사회문화 협력 / 경수로사업)	366	421	367	108	37	23	11	9	3
	반출 합계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897	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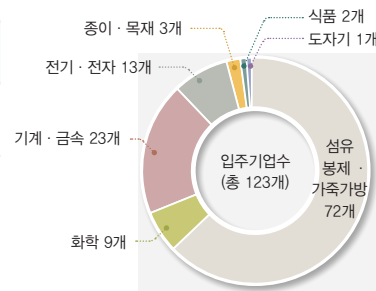
※ 반올림으로 연도별 반입/반출 유형별 소계와 반입/반출 합계가 다를 수 있음. 교역액 1백만불 미만은 "0"으로, 없을 경우 "-"으로 표시

③ 개성공단사업 추진 현황

① 개성공단 입주기업수

(단위 : 개)

구분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입주 기업수(개)		18	30	65	93	117	121	123	123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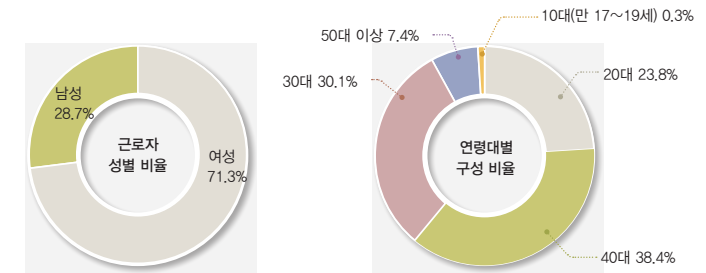
② 개성공단 생산액 현황

구분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생산액 (만 달러)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46,950	22,379	219,978
	수출액 (만 달러)	87	1,983	3,967	3,584	2,860	3,667	3,687	3,639	1,210	24,684

③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복측 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448	52,329
남측 근로자		507	791	785	1,055	935	804	776	786	751
합계		6,520	11,951	23,323	39,986	43,496	47,088	50,642	54,234	53,080



*복측근로자 평균임금('13년) : 128.5달러(순임금 102.5달러+사회보험료 11.4달러)

④ 개성공단 방문 현황

(단위 : 명, 대)

구분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방문인원(명)		40,874	60,999	100,092	152,637	111,830	122,997	114,435	120,119	75,990	899,973
방문차량(대)		19,413	29,807	42,399	85,626	72,597	83,566	82,954	82,954	55,580	554,896

· 외국인(바이어, 투자자, 기술자 등) 방문인원
 △'05년 49명 △'06년 399명 △'07년 460명 △'08년 130명 △'09년 525명 △'10년 737명 △'11년 299명 △'12년 366명 △'13년 12월 299명

④ 인도적 과제 추진 현황

① 대북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정부 차원	무상 지원	당국 차원	1,854	-	-	-	339	944	684	832	811	949	1,221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	-	-	-	-	34	62	65	81	102	120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	24	240	154	-	-	229	243	205	262	19
		계	1,854	24	240	154	339	978	975	1,140	1,097	1,313	1,360
	식량차관	-	-	-	-	-	1,057	-	1,510	1,510	1,359	1,787	
	계	1,854	24	240	154	339	2,035	975	2,650	2,607	2,672	3,147	
민간 차원(무상)			2	12	182	275	223	387	782	576	766	1,558	779
총액			1,856	36	422	429	562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구분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
정부 차원	무상 지원	당국 차원	2,000	1,432	-	-	183	-	-	-	11,249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34	216	241	77	21	-	-	-	1,153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139	335	197	217	-	65	23	135	2,487
		계	2,273	1,983	438	294	204	65	23	135	14,890
	식량차관	-	1,505	-	-	-	-	-	-	-	8,728
	계	2,273	3,488	438	294	204	65	23	135	23,618	
민간 차원(무상)			709	909	725	377	200	131	118	51	8,761
총액			2,982	4,397	1,163	671	404	196	141	186	32,379

② 이산가족 상봉 현황

(단위 : 건/명)

연도 구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민간 차원	생사 확인	-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서신 교환	-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제3국 상봉	-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383)	165 (471)	203 (592)
	방북 상봉	-	-	-	-	-	-	-	-	1 (2)	5 (18)	4 (9)	5 (22)	5 (24)	
당국 차원	생사 확인	65 (157)	-	-	-	-	-	-	-	-	-	792 (7,543)	744 (2,670)	261 (1,635)	
	서신 교환	-	-	-	-	-	-	-	-	-	-	39 (39)	623 (623)	9 (9)	
	방남 상봉	30 (81)	-	-	-	-	-	-	-	-	-	201 (1,720)	100 (899)	-	
	방북 상봉	35 (76)	-	-	-	-	-	-	-	-	-	202 (674)	100 (343)	398 (1,724)	
	화상 상봉	-	-	-	-	-	-	-	-	-	-	-	-	-	
	계	100	44	138	151	133	102	104	114	125	173	296	1,047	1,477	271

연도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민간 차원	생사 확인	388	209	276	69	74	50	35	16	3	6	9	3,860
	서신 교환	961	776	843	449	413	228	61	15	21	16	22	11,456
	제3국 상봉	280 (662)	187 (465)	94 (256)	50 (86)	54 (162)	33 (92)	21 (47)	6 (16)	4 (14)	1 (2)	3 (9)	1,707 (3,253)
	방북 상봉	3 (15)	1 (5)	1 (5)	4 (19)	1 (5)	3 (5)	2 (4)	1 (2)	-	1 (2)	-	37 (137)
당국 차원	생사 확인	963 (7,091)	681 (5,007)	962 (6,957)	1,069 (8,314)	1,196 (9,121)	-	302 (2,399)	302 (2,176)	-	-	316 (2,342)	7,653 (55,412)
	서신 교환	8 (8)	-	-	-	-	-	-	-	-	-	-	679 (679)
	방남 상봉	-	-	-	-	-	-	-	-	-	-	-	331 (2,700)
	방북 상봉	598 (2,691)	400 (1,926)	397 (1,811)	594 (2,683)	388 (1,741)	-	-	-	-	-	-	3,498 (15,443)
	화상 상봉	-	-	199 (1,323)	80 (553)	278 (1,872)	-	195 (888)	191 (886)	-	-	-	557 (3,748)
	계	1,352	1,186	1,276	1,513	1,679	302	303	316	316	316	316	15,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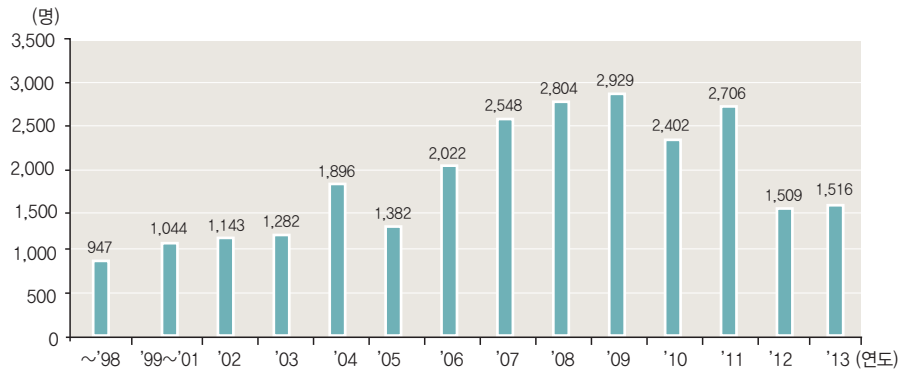
※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등록현황 : 129,264명 등록(사망 57,784명/생존 71,480명)

③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남성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71			7,949
여성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8,175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6			26,124

※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보호결정을 기준으로 집계



⑤ 남북회담

①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단위 : 회)

연도 구분	'71~'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정치	170	-	7	4	8	18	2	4	5	2	10	5	13	-	-	-	-	-	1	249
군사	-	-	-	-	-	4	2	9	6	5	3	4	11	2		1	1			48
경제	5	-	-	-	-	3	3	14	17	13	11	8	22	3	4	3	-			22
인도	114	-	4	1	-	2	1	3	7	2	4	3	3	-	2	4	-			151
사회·문화	34	-	-	-	-	-	-	2	1	1	6	3	6	1	-	-	-			54
합계	323	-	11	5	8	27	8	32	36	23	34	23	55	6	6	8	1		24	630

※ 정치(장차관급 회담 등) / 군사(장성급·군사실무회담 등) / 경제(경제협력추진위 등) / 인도·사회(적십자·체육 회담 등)

②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건수

(단위 : 건)

연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의서 건수	-	3	3	1	18	4	23	31	21	23	10	39	5	1	1	-	-	7

⑥ 통일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교육인원	365,125	12,774	16,711	17,087	20,804	26,420	25,865	34,045

연도	'08	'09	'10	'11	'12	'13	계
교육인원	32,039	71,944	68,946	119,736	133,284	185,194	1,129,974

Ⅲ.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① 총괄표(구성 및 사용실적)

① 조성실적

(단위 : 백만 원)

연도	구분	정부출연금	기타출연금	공공자금관리 기금예수금	운용수익 등	총조성액
1991		25,000	-	-	237	25,237
1992		40,000	-	-	5,118	45,118
1993		40,000	3	-	4,778	44,781
1994		40,000	1	-	9,387	49,388
1995		240,000	119	-	14,589	254,708
1996		100,000	132	-	18,409	118,541
1997		50,000	288	-	27,874	78,162
1998		-	-	-	40,280	40,280
1999		-	3	149,831	23,013	172,847
2000		100,000	542	254,852	30,393	385,787
2001		500,000	1,079	310,000	29,406	840,485
2002		490,000	77	505,000	42,036	1,037,113
2003		300,000	1	823,000	46,515	1,169,516
2004		171,400	1	310,000	38,371	519,772
2005		500,000	33	460,000	31,178	991,211
2006		650,000	15	940,000	36,619	1,626,634
2007		500,000	75	584,591	38,859	1,123,525
2008		650,000	52	147,500	49,274	846,826
2009		-	56	81,000	74,354	155,410
2010		-	-	875,000	51,238	926,238
2011		-	2	104,400	38,276	142,678
2012		112,800	2	400,000	51,236	564,038
2013		105,500	3	530,000	162,300	797,803
합계		4,614,700	2,484	6,475,174	863,740	11,956,098

② 사용실적

(단위 : 억 원)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주민왕래지원	-	-	-	-	-	-	-	-	-	3	3	237
문화·학술·체육협력	9	-	-	-	-	-	-	0.3	-	21	1	-
이산가족	-	6	-	-	-	-	-	0.1	4	28	13	20
인도적 지원(무상)	-	-	-	-	1,824	55	191	199	339	977	976	1,226
인도적 지원(유상)	-	-	-	-	-	-	-	-	-	867	190	967
남북경제협력(무상)	13	-	-	-	-	49	-	-	-	146	898	368
남북경제협력(유상)	-	-	-	-	-	-	-	675	-	5	461	667
경수로 대출	-	-	-	-	-	-	-	-	-	3,259	3,003	3,009
공자기금예수 원리금상환	-	-	-	-	-	-	-	-	-	190	391	2,124
- 공자기금원금상환	-	-	-	-	-	-	-	-	-	-	-	1,498
- 공자기금이자상환	-	-	-	-	-	-	-	-	-	190	391	626
기금관리비	3	3	3	3	2	2	2	2	2	3	5	6
합계 ^{주)}	25	8	3	3	1,826	106	193	876	346	5,500	5,940	8,625

주) 「연도별 기금사용 현황」은 사사오입하여 억 원 단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합계액과 현황표상의 '합계'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

(단위 : 억 원)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
주민왕래지원	11	11	38	53	17	27	-	-	-	-	-	399
문화·학술·체육협력	7	32	75	74	69	38	30	21	26	23	21	447
이산가족	30	32	133	99	269	182	22	20	1	4	21	884
인도적 지원(무상)	1,501	1,225	1,866	2,125	2,272	597	294	192	102	24	132	16,117
인도적 지원(유상)	1,561	1,020	1,793	39	1,405	-	-	-	-	-	-	7,842
남북경제협력(무상)	763	760	2,045	1,521	1,725	1,101	415	177	167	421	2,037	12,606
남북경제협력(유상)	547	814	568	710	1,400	366	240	453	130	221	746	8,003
경수로 대출	3,287	870	227	89	-	-	-	-	-	-	-	13,744
공자기금 원리금상환	3,250	3,895	3,658	8,713	6,337	1,512	1,159	9,306	1,086	5,161	6,388	53,170
- 공자기금원금상환	2,549	3,100	2,820	7,730	5,330	500	100	8,200	-	4,000	5,300	41,127
- 공자기금이자상환	701	795	838	983	1,007	1,012	1,059	1,106	1,086	1,161	1,088	12,043
기금관리비	8	12	16	18	19	21	39	29	27	28	30	283
합계 ^{주)}	10,966	8,670	10,418	13,442	13,513	3,844	2,199	10,197	1,539	5,883	9,376	113,498

주) 「연도별 기금사용 현황」은 사사오입하여 억 원 단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합계액과 현황표상의 '합계'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

2013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금액	사업구분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	2,045	사회문화 협력지원 (4건, 2,045)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520	이산가족 교류지원 (31건, 2,078)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지원	725		
추석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833		
UNICEF의 북한영유아지원사업	6,737	인도적 지원 (2건, 13,251)	
WHO의 북한영유아지원사업	6,514		
서도산업(주) 등의 경제협력사업 보험	177,144	교역 및 경험보험 (199건, 177,144)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및 위탁사업비 지원	994	경협기반조성(무상) (124건, 26,622)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3차년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	603		
동해선 출입시설 공동야드 건설사업 사후환경 조사 지원	167		
DMZ 평화 생태적 가치 제고 위한 코리아DMZ협의회 지원	107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14,285		
남북교역 관리업무 위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837		
개성공단 2차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	3,096		
개성공단 도수터널 보수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69		
개성공단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	5,268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52		
개성공단 통관체계 개선 및 군통신선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36		
개성공단 환경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08		
교역경험 자금융자(경협)	55,549		경협자금(융자) (105건, 55,549)
개성공단 복측근로자 출퇴근 지원 소요경비 대출	1,594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대출 (10건, 19,094)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대한 북한 미수금 지불 대출	14,284		
개성공단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	3,216		
소 계 (475건)	295,783		

IV.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 국정과제(3개), 세부과제(12개)

국정과제	세부과제
12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1] 인도적 문제 해결 적극 추진 ① 이산가족 상봉재개 및 서신교환 ②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실질적 해결 ③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기초적 보건·의료협력사업 등)
	2] 남북간 대화 채널 개설 및 기존 합의정신 실천 ① 당국간 대화 재개 및 상시채널 구축 추진, 기존합의 내용 우선추진 가능분야 점검, 남북간 합의 이행 문화 정착
	3] 남북간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①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②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 사업 추진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 ③ 남북러 3각 협력방안 모색 ④ 다각적인 사회문화 교류 내실화 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 추진
	4]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의 상호 보완적 발전 ① 도발중단, 상호체제 인정 등 기본적인 조치부터 실천, 교류협력 활성화와 균형되게 정치·군사분야에서의 추가적 신뢰구축 조치 추진
	5]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추진 ①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통해 경제공동체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 지역에 국제투자 유치 지원 ②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는 여건을 감안 검토
125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6] 「그린 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추진 ① 녹색경제협력(북한 산림복구 등) 도모 ② 남북간 농업협력 ③ 개성공단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④ 한반도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추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포함)
	7] 북한주민의 인권 등 삶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통일 여건' 조성 ① 북한 인권 개선 제도화 노력 ② 북한 인권 NGO 활동 지원

국정과제	세부과제
	Ⅷ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등을 통한 경제 공동체 건설 ① 경제시찰단 교환 등 남북경제계 인사교류·방문을 통한 유대 강화 ② 동북아 공동발전과 연계, 한반도 통합 물류망 구축 등 추진
	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 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공론화
126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	Ⅹ 탈북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착지원 강화 ①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및 통일미래 역군으로 육성
	Ⅺ 실질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 ① 유관부처간 통일대비 협조체제 강화 추진 (중장기 통일전략 심화·발전, 전문인력 양성) ② 종합적 통일재원 조달방안 마련 ③ 국민통합(청소년)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추진 ④ 통일방송 확대
	Ⅻ 통일의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① 주변 4국 대상 '1.5 트랙 협의체' 구축·운영, 「한민족 통일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2014 | 통일백서

인쇄일 | 2014년 3월

발행일 | 2014년 3월

발행처 | 통일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전 화 | 02-2100-5747

팩 스 | 02-2100-5749

편집·제작 | 책임 한국장애인 e-work협회
(02-2272-0307)

